



# 2012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2 Annual Report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일러두기: 본문 중 Chapter 3, 4에 언급된 모든 기관명 및 정책명, 내외부 인사의 소속 및 직위 등은 행사개최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2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2 Annual Report

## 발간에 즈음하여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및 관리정책, 토지·주택정책, 도시정책 및 계획 수립,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분야 정책수립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국토정책 개발에 전념해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정사회 구현과 국토품격 향상 등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고, 국토분야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적인 국토발전 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연수 사업도 추진하여 국토개발에 대한 ‘한국 벤치마킹’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해외전수 활동기반을 강화하여 국격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실현’을 2012년도 연구사업 목표로 정하고, 국토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창조 및 실천 기반 구축’, ‘미래국토를 선도하는 녹색·스마트 국토의 실현’, ‘초국경시대의 글로벌 연성국토의 개척’의 3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목표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창조 및 실천 기반 구축을 위해 ‘국토 및 지역발전 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

택정책 방안 연구’,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화 전략 연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건강장수도 시 실태진단 연구’,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국토를 선도하는 녹색·스마트 국토의 실현을 위해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I)’,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V)’, ‘범죄의 시공간시물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초국경시대의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을 위해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II)’,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 연구’, ‘한·중 항만지역 간 협력과제 도출 연구’,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II)’,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Rep-DSS) 구축(II)’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국토연구원 연구진들이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열망으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들의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연차보고서 발간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정책고객 및 국민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에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객지향의 연구상품을 창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생활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국토정책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원장직무대행 박재길

박재길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객지향의 연구상품을 창조하고  
이를 정책화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CONTENTS

## Chapter I.

### 일반현황

- |                  |    |
|------------------|----|
|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 8  |
| 2. 연혁            | 9  |
| 3. 조직 및 인원       | 10 |
| 4. 2012년도 예산현황   | 11 |

## Chapter II.

### 주요 연구사업

- |                              |    |
|------------------------------|----|
| 1. 2012년도 연구사업 및 2013년도 연구방향 | 15 |
| 2. 분야별 주요 연구                 | 19 |

## Chapter III.

### 국제협력사업

- |                         |     |
|-------------------------|-----|
| 1. 국제학술교류               | 100 |
| 2. 개도국 대상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 108 |
| 3.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 114 |

## Chapter IV.

### 연구지원활동

- |                     |     |
|---------------------|-----|
| 1. 연구지원활동           | 126 |
| 2. 연구 관련 주요 행사 · 교육 | 138 |

## Chapter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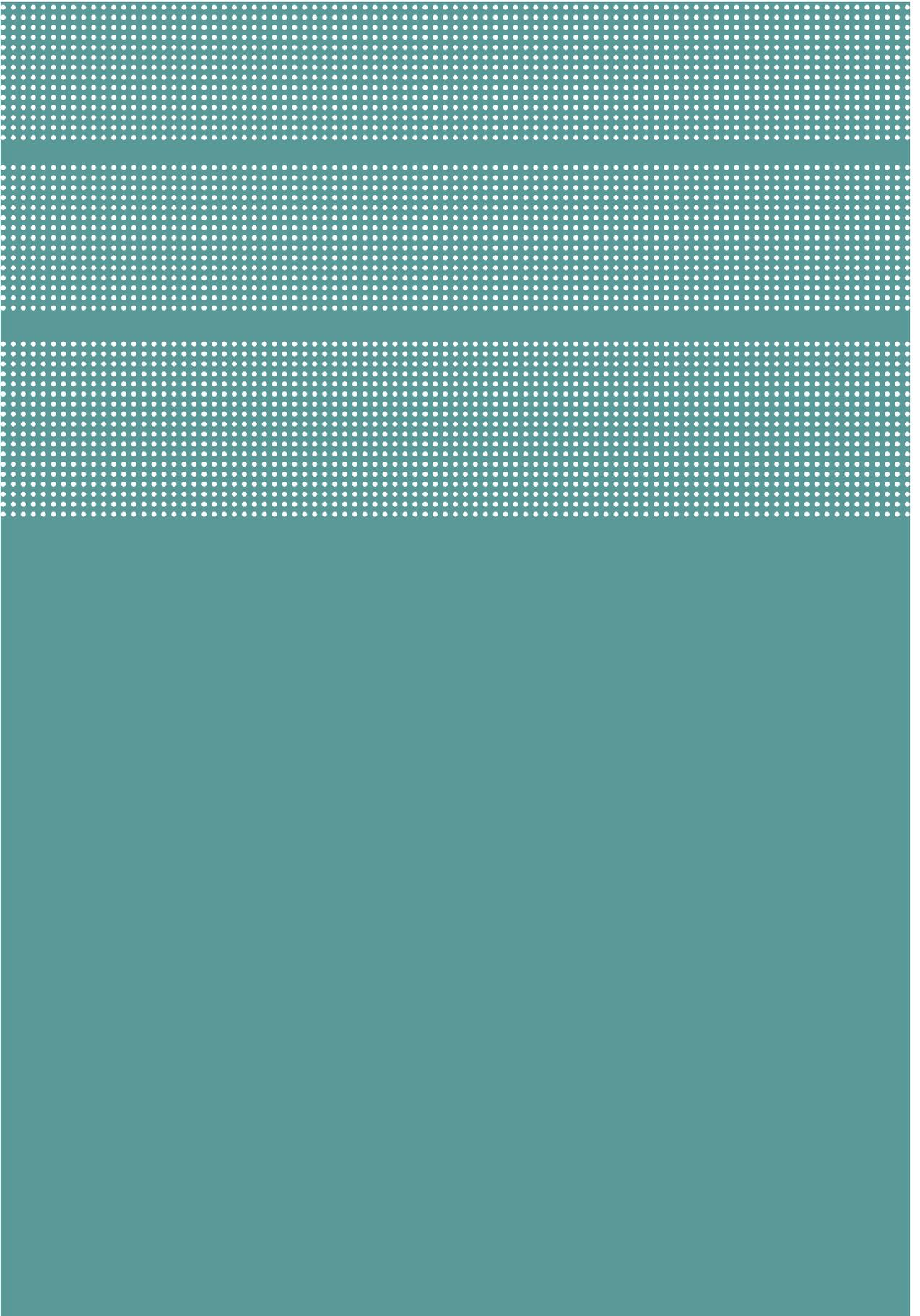
### 정기간행물 발간

- |                         |     |
|-------------------------|-----|
| 1. 국토(363호~374호)        | 150 |
| 2. 국토연구(72권~75권)        | 156 |
| 3. 국토정책Brief(356호~414호) | 157 |
| 4. 도로정책Brief(51호~62호)   | 159 |
| 5. 건설경제(69권~72권)        | 161 |

## Chapter VI.

### 부서소개

- |             |     |
|-------------|-----|
| 1. 부서별 업무소개 | 164 |
| 2. 부서별 인원현황 | 167 |



C h a p t e r

# I

## 일반현황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8
2. 연혁	9
3. 조직 및 인원	10
4. 2012년도 예산현황	11

##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 설립 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었다.

연구원 개원 이래 “아름다운 산하와 살맛 나는 국토”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 사회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지식기반 국토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중심적 연구를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 관련 분야 정책 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 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국토연구 관련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2. 연혁

### 1970's

- 78. 04. 17 국토개발연구원 설립안 대통령 재가
- 78. 09. 13 초대 노용희 원장 취임
- 78. 10. 0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설립자: 대통령)
- 78. 12. 0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 공포  
(법률 제3140호)

### 1980's

- 81.06. 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흡수 · 통합(정부출연기관정비계획에  
의거)
- 81. 12. 05 제2대 김의원 원장 취임
- 84. 12. 05 제3대 황명찬 원장 취임
- 88.08. 09 제4대 허재영 원장 취임

### 1990's

- 92. 05. 09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93. 03. 30 제5대 이상룡 원장 취임
- 93. 09. 07 제6대 이건영 원장 취임
- 94. 04. 27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안양시 평촌  
소재)
- 97. 03. 26 제7대 류상열 원장 취임
- 97. 07. 29 제8대 홍철 원장 취임
- 99. 0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99. 12. 06 제9대 이정식 원장 취임

### 2000's

- 02. 12. 06 제10대 이규방 원장 취임
- 02. 05. 10 2001년도 경제사회연구회 최우수 연구  
기관 선정
- 05. 05. 26 '경제사회연구회 2004년도 평가결과'  
최우수연구기관상 2회 연속 수상
- 05. 12. 06 제11대 최병선 원장 취임
- 06. 05. 0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06. 07. 10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23개  
연구기관 중 최우수기관 선정
- 06. 12. 06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조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07. 06. 15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설립
- 07. 07. 17 도로정책연구센터 설립
- 08. 04. 07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07년도 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08. 04. 07 '국무총리실 고객만족도 조사' 최우수  
기관 선정
- 08. 06. 18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 08. 10. 01 새 C.I. 선포 및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09. 05. 0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2010's

- 10. 02. 10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 국무총리 표창  
(단체) 수상
- 10. 12. 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설립
- 11. 06. 18 제13대 박양호 원장 취임
- 11. 12. 14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출자  
· 출연 · 보조기관 부문 1위 선정
- 12. 08. 08 국토계획평가센터 설립

### 3. 조직 및 인원

#### 인원

2013년 7월 현재 임원을 제외한 현원은 154명, 정원 218명으로 연구직이 131명, 비연구직이 23명이다. 연구직은 다양한 전문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력별로는 박사 87명, 석사 41명, 학사 3명이다.

계	임원	연구직			관리·전문직	
		박사	석사	학사	관리직	전문직
구성	원장	87명	41명	3명	18명	5명
154명	1명	131명			23명	

#### 조직구성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국토계획연구본부, 지역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국토정보연구본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국토계획평가센터, 국토미래연구센터,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국토연구센터,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 건설경제연구센터, 국토정책시뮬레이션연구센터 등의 연구부서와 행정부서인 기획경영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 보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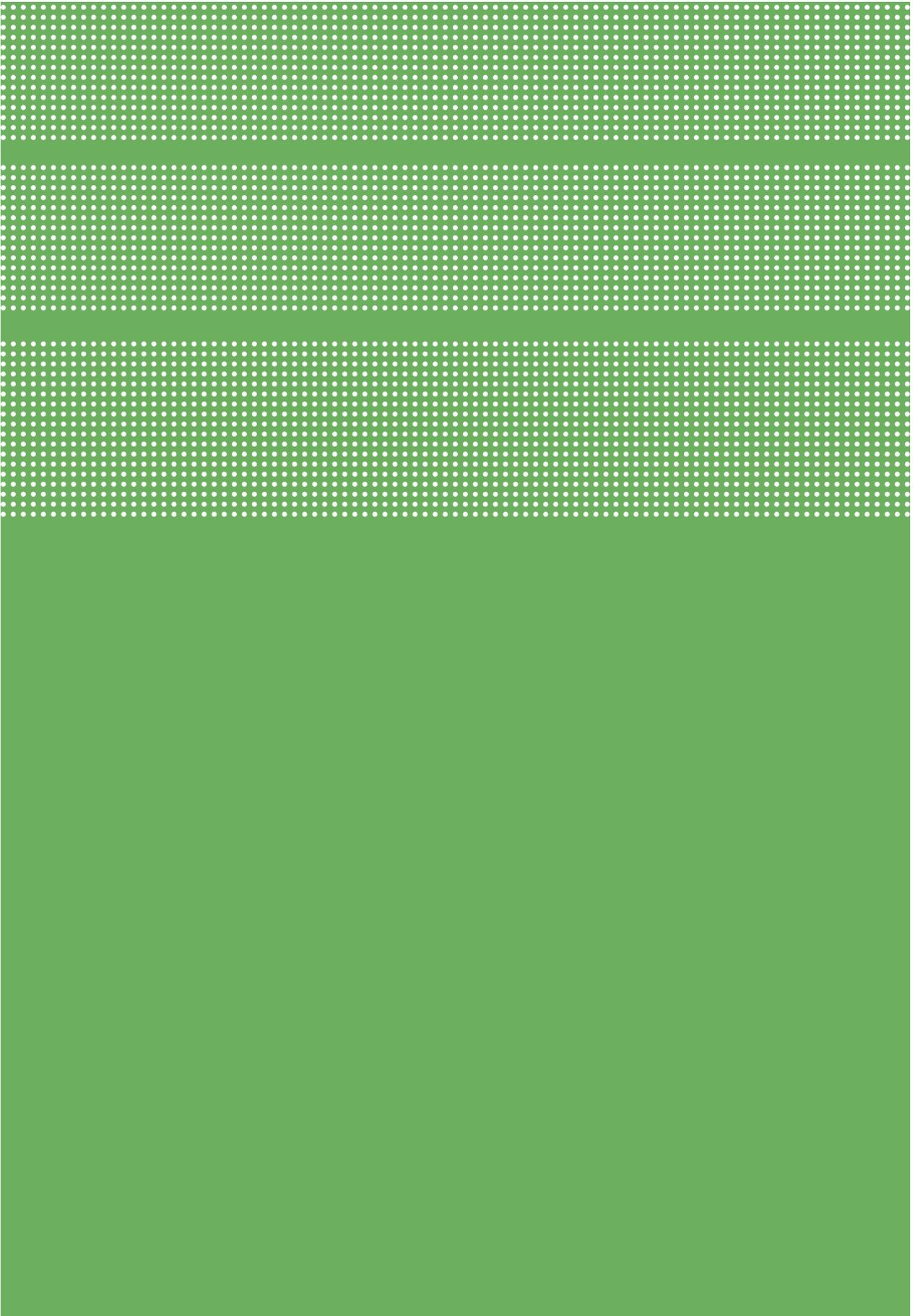
원장직무대행		박재길	
본부장			
국토계획연구본부	김동주	주택토지연구본부	김근용
지역연구본부	이동우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조남건
도시연구본부	민범식	국토정보연구본부	최병남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	김종원	기획경영본부	정일호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사공호상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제해성

## 4. 2012년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수입		지출	
구분	예산	구분	예산
1. 정부출연금	19,801	1. 인건비	12,705
2. 자체수입	16,677	2. 연구사업비	21,821
		3. 경상운영비	1,466
		4. 시설비	486
합계	36,478	합계	36,478

※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외



C h a p t e r

# II

## 주요 연구사업

---

1. 2012년도 연구사업 및 2013년도 연구방향 15

2. 분야별 주요 연구 19

---



C h a p t e r . II

1

2012년도 연구사업 및  
2013년도 연구방향

## 2012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12년도에는 연구사업목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실천’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창조 및 실천 기반 구축’, ‘미래국토를 선도하는 녹색·스마트 국토의 실현’, ‘초국경시대의 글로벌 연성국토의 개척’이라는 세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과제 유형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발전 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외 35건의 기본연구과제,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과제’ 외 30건의 수시연구과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수립연구’ 외 149건의 수탁과제 등 총 21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2012년도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는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더 나아가 새 정부 주택정책의 기초와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다. 2008년 이후 도입된 주택정책과 관련 시책들을 중심으로 현행 주택정책의 장점 및 성과와 더불어 한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국가와 지자체 간 인프라 비용분담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정책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비용분담 기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정책 연구’는 국토계획 평가의 내실 있는 시행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 국토계획평가 업무매뉴얼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2013년도 연구사업목표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의 운영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신국토정책의 선도적 개발’로 선정하였다. 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사업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한 국토정책 개발, 둘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발전 정책 지원, 셋째, 미래창조의 융복합형 정책개발과 성과창출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세부 연구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본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를 발굴·수행하여 국토분야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으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 2013년도 중점연구과제

2013년도 수행과제 중 국정기조와 정책현안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국가정책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각 연구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토발전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는 국토발전의 전망 틀 및 국토발전 모형을 정립하는 연구이며, 미래지향적 국토발전모형 및 향후 지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둘째,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장수도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I)’는 100세 시대 준비의 정책적 대안으로서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의 통합적 관점에서 건강장수도시계획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 주거비 부담능력의 평가와 정책방안’은 소득계층별, 생애주기별 주거비 부담능력의 평가와 맞춤형 지원대책의 제시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지역통합·지방분권을 통한 상생적 국토·지역 정책방안’은 상생국토 달성을 위해 광역적인 관점에서 권역 간 균형발전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권역 내에서의 시·도 간 및 도·농 간 상생적 발전을 위한 국토·지역 정책추진 방향을 고민하고자 한다.



# 2

## 분야별 주요 연구

1	국토계획연구	21
2	지역연구	33
3	도시연구	41
4	국토환경·수자원연구	51
5	주택토지연구	59
6	국토인프라연구	75
7	국토정보연구	85
8	색인	93



## 1 국토계획연구

#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 Research

- 개발사업 검증제도(안)의 적용 및 실효성 조사 연구  
: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 작성을 중심으로 22
-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 23
-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24
- 국토품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자원 활용방안 연구 25
-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Ⅲ): 도시권 정책의 실천전략 26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Ⅰ) 27
- 미래국토 개척과 신균형발전 전략 28
-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29
- 인구저성장시대의 도·농 상생발전 전략 연구 30
-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31
-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Ⅱ) 32



## 개발사업 검증제도(안)의 적용 및 실효성 조사 연구 :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 작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Projects Verification System

서태성, 안흥기, 변세일, 박정호

본 연구는 개발사업 검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검증방법 및 검증틀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및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유형별로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국토 전반에 걸쳐 신도시(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계획이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상당 부분 미개발되거나 또는 개발이 지연되어 국가재원 낭비 및 경제주체의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한 신규사업을 방지하고자 2012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를 통해 과개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검증지침을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표준검증지침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선 개발사업 추진 시 자발적으로 검증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 추진된 개발사업계획서에 보완된 검증방법을 적용한 결과, 개발사업 검증보고서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목별 검증결과와 종합판정결과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지정·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사업유형별 검증항목 및 지표 그리고 항목별 검증방법에 대한 보완과는 별도로 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당초 서태성 외(2011)에서 연구되었던 개발사업 검증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검증틀의 주요 개선은 검증항목의 위계와 역할, 결과 종합, 낙후지역의 반영 등 검증체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증틀의 전반적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가이드라인(안)은 개발사업 검증 시 활용 가능한 사전 검증도구를 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가이드라인(안)에는 1, 2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사업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었다. 특히, 낙후지역 반영기준(안), 자체검증보고서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 유의사항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유용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안)에 포함되었다.

향후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자체검증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검증의 실효성을 높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증방법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

The Status and Policy Agenda for the Elderly Migration

민성희, 박정호

본 연구는 고령자 인구이동 흐름의 변화와 실태를 살펴 보고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장수사회에 대비해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1980~2010)에 따르면 시·군·구 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이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은 2030년에 83.1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후생활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고령자의 이동욕구도 증대되어 초고령 장수사회에는 고령자의 인구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인구이동은 진입지와 진출지에 모두 커다란 인구구조 변화를 야기하며 사회, 경제, 공간부문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진전과 고령이동자수 증가 등으로 총 이동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연령계층의 인구이동률은 1995년 19.9%에서 2010년 16.5%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총 이동자 대비 고령자 이동률은 1995년 3.7%에서 2010년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 요인을 비교한 결과, 가장 주된 요인은 주택 관련 요인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외 요인에서는 양자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취업, 이직 등 직업 관련 요인에 의해 이동한 고령자는 3.5%에 그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14.2%로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족 구성원과 세대 구성, 세대 합가, 편입 등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동한 고령자의 비율은 23.1%,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6.2%로 나타나 고령자의 이동은 자식세대의 이동에 상대적으로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의 요인에 따라 이동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4.9%로 경제활동인구(0.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진입, 진출 및 순이동을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 간의 인구이동 요인의 차이는 예상과 달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환경과 주거환경 변인들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모두의 주요 인구이동 요인이었다. 고령자의 이주사유 중 건강 사유로 이주한 비율이 매우 낮아서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료환경 변인의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인구이동 요인 중 재정환경 변인은 그 영향이 미약하게 나타났고, 사회환경 변인 중 노인복지 시설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교육환경 변인들이 고령자의 인구이동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령자들의 인구이동 요인이 가구의 인구이동 요인에 종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향후 고령화에 활기차게 대응(active aging)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고령자에게 인구의 이동 및 새로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고령자 복지서비스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Future Agenda and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허재안, 김동주, 김명수, 강민규, 박정호

우리 국토를 둘러싼 제반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메가트렌드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산업구조변화, 글로벌경제화, 기후변화, 지방화, 민간화 및 다문화사회 전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트렌드를 자국 실정에 맞게 반영해 새로운 국토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국토정책은 아직도 거대담론을 중시하고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치중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토건국가, 토건사업이라는 질책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우리 국토정책도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의 장소중심적인 사고에서 사람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고 삶의 질을 우선하는 국토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토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조적인 마인드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국토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새로운 메가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창조적인 발상이 필수적이다. 창조와 소통은 성공적인 국토정책의 구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토정책의 미래 어젠다로 창조국토와 소통국토를 설정하였다.

창조적인 국토공간의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토정책 구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형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의 창조, 둘째, 기존 SOC의 질적 향상을 위한 스마트 국토 인프라의 창조, 셋째,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공간의 창조, 넷째, 글로벌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국토공간의 창조,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지대의 창조 등을 제시하였다.

소통국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상향식 국토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분권을 통한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 둘째, 국토사업에 민간의 재원과 활력을 활용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과의 소통강화, 셋째,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문화와의 소통강화, 넷째,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강화, 다섯째, 국토분단에 따른 공간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통합국토의 실현을 위한 남북국토의 소통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 국토품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자원 활용방안 연구

Public Policies for Utilizing the Distinctive Resources of Islands: Features, Limits and Improvement Measures

이순자, 장철순, 박경현, 장은교

본 연구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 섬이 지닌 가치와 자원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이들 섬자원이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며, 섬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대상은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도서인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하되, 관련 정책 추진현황 분석이나 정책적 개선방안 제안 시 필요하다면 무인도서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목적의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 설문조사, 사례조사, 현장방문 및 관련자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외부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원고청탁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라는 위협과 지리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EEZ 확대 및 해양영유권 분쟁 심화와 관광·여가패턴의 변화 속에서 섬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생태·경관자원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를 중심으로 각각의 목표와 필요성에 맞추어 섬자원 활용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는 섬을 둘러싼 트렌드 변화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미하나마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단기적, 산발적, 중복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부처별 단일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통합 및 조정하며, 섬정책 관련 전담기구를 마련한다. 둘째, 종합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중·

장기적인 섬지역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섬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섬지역 및 섬자원의 보존과 적정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섬수용능력 추정모델을 개발하고 제도화한다. 넷째, 유·무인도서 자원에 관한 기초실태조사 및 DB화를 실시하며, 실질적으로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며,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여섯째, 중앙-지자체-주민-전문가-기업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자발적 지역발전역량을 강화한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국토 및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시대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러한 기회요인과 자원의 개발잠재력을 섬지역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도 단일사업이나 단일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섬자원 활용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국 설문조사와 사업유형별 주요 대상지에 대한 사례조사(울릉도·독도, 연대도, 홍도, 대이작도, 장사도)를 실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고, 또한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활용하여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섬 관련 연구에 관한 방법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II): 도시권 정책의 실천전략

A Study on Global City-Regions in Korea(III)

김동주, 주미진, 민성희, 남기찬, 윤영모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권 정책을 마련하고자 3개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3차연도(2012) 연구인 본 연구는 도시권 정책추진을 위한 중점전략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5개 대도시권 및 14개 중소도시권 구성안을 설정하고, 각 도시권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도시권 유형별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시권 육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계·협력, 산업, 교통, 재생, 생활서비스시설, 환경, 도농연계 등 7대 중점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후 도시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약, 재원, 법률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시권 정책은 '국토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도시권 육성'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첫째, 지역 주도로 도시권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둘째, 도시권의 생활인프라와 글로벌 거점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도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전략으로 도시권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광역적 도시·지역재생, 산업경쟁력 강화, 광역교통네트워크 구축, 생활서비스시설의 연계 활용, 통합적 환경 관리, 도농연계 활성화 등 7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권 거버넌스 구축, 협약제 활성화, 도시권 발전 재원확충, 도시권 공동발전을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역 간 연계·협력과 관련한 상생역량을 강화하고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주도하여 도시권 발전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

권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시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 관리하며, 도시권 정책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권 설정 및 도시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권 정책추진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권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지자체 간 협약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도시권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 실천력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부문별 중점전략은 분야를 나누어 개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인 연계에 도시권 특성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권 정책 전반에 관한 제안사항을 토대로 향후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발전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권 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

Future Prospect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I)

이용우, 김선희, 김동한, 손학기, 박정호, 임지영, 백승현

본 연구는 국토미래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 국토발전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3개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망하고자 하는 미래시점은 한 세대 후인 2040년이다.

1차연도(2012)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도출,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장기전망 방법론의 핵심인 시나리오-시뮬레이션 기법의 시험적용(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망)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에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토는 국토공간의 저탄소 에너지 효율성 제고, 국토이용 시 안전 및 이용가치 중요시, 국토재생 활성화, 수요맞춤 및 다기능 복합형 국토공간 확대, 지식기반 창조형 및 자연활용형 국토이용 증가, 공간구조의 초연계화 등으로 변화를 보이며 지역격차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둘째, 미래 국토발전에서 중요한 이슈는 주거행태 및 통행행태, 일자리 분포, 여가 및 소비공간 등 생활공간의 변화와 이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지역격차 등 공간구조의 변화로 도출되었다. 셋째, 미래 국토공간구조는 초광역화와 일자리 분포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수도권 집중심화형,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KTX 회랑형, 다지역 분산형의 4개 시나리오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소득, 국적 등 계층별 그리고 기능별로 다양한 국토이용의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국토서비스 공급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안정성장에 따른 소프트파워 함양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국토이용을 통해 주거, 의료, 교육, 문화여가, 쇼핑 그리고 웰빙, 건강, 장수, 안전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행복인프라 확충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 발달, 국토인프라 노후

화, 국토이용 수요감소에 대응하는 장수명 국토이용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촌공동화 등에 대비하는 국토재인식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미래국토 개척과 신균형발전 전략

New Paradigm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Futures of National Territory

김동주, 이상준, 이용우, 문정호, 이순자, 남기찬, 박정호, 이건민

저출산·고령화시대 진입,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과개발의 한계, FTA 체제의 확대와 지역발전구도의 변화, 양극화 심화 및 복지수요의 증가, IT 및 SNS 발달과 시민사회의 역할증대, 기후변화·환경문제의 심화와 녹색성장 등 국토여건이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토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국토를 창조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신균형발전 전략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안정성장기의 도래와 국토여건 변화에 따른 국토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국토정책의 방향과 미래 新국토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적절한 국토개발 유도, 국토이용의 선택적 집중, 지역성장동력 확충, 분권적 지역발전, 지역격차 완화 등 미래 新국토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40년간 추진되어온 국토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국토계획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침 역할을 강화하고 국토분야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며 평가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토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미래 트렌드 대응, 전방위 융복합 방식, 국가-지자체 협력방식 추진 등 7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체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국토·지역정책 공간체계의 대안으로서 도시권 중심의 발전을 제안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도시권 육성 특별법」 제정 및 중추도시권의 전략적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SOC·산업 등의 분야와 연계·협력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

진된 주요 국책사업의 중단과 연기 및 백지화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저해와 국론분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국책사업들의 표류사유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대안으로는 국책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 사업결정 및 추진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초국경화를 기회로 남북연계비교우위를 강점으로 활용하고 미래통일시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한반도 공동번영 전략을 모색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동북아협력구도하에서의 한반도 공동번영 추진전략 및 동북아협력과 남북협력의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A Study on the 100 Major Inter-Korean Cooperation Issues Focusing on Spatial Develop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이상준, 김천규, 이백진

본 연구는 국토분야에서 향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남북협력과제와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토분야의 남북협력과제들과 우선순위를 확립함으로써 남북협력의 일관성,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식이다.

본 연구에서 향후 남북협력과제는 중단기와 장기 등 두 단계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중단기는 남북협력과제를 2013년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해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추진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장기는 남북협력과제를 2013년부터 10년 이내에 착수해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추진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토분야 남북협력과제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 등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여 후보과제들을 도출한 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결정된 선정기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10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화된 사업추진을 전제로 선정된 100대 과제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문 및 지역(공간) 단위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추진, 둘째,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양자, 다자협력체 등 탄력적인 추진체를 구성, 셋째, 인력, 제도, 사업을 긴밀히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 넷째, 다양한 자원조달방안을 연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업입지, 주택, 인프라 등 분야별로 제시한 과제들은 공간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과제들이 많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개별과제들을 연계한 지역단위의 개발프로그램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대 과제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국토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사전타당성 공동검토가 필요하다.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한 후 사

업을 승인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남북협력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단계적이고도 질서 있는 국토통합을 추진해간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우리의 국민적 공감대도 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인구저성장시대의 도·농 상생발전 전략 연구

Win-Win Development Strategies for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Population Low-Growth Era

김창현, 박종택, 변필성, 구형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도시 초중 등학생의 농촌체험학습 등 도시민의 농업·농촌·전원 수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농촌지역 활성화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낙후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 등 과소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농 교류활동이 농촌주민이나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와 꾸준한 수요창출을 통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도시지역 주민수요의 특정 농촌지역 지향성에 의거하여 도시 지자체와 농촌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로 조사결과,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전원 수요는 목적에 따라 방문·체류하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후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구 규모의 영세성, 재정여건의 열악 등으로 인하여 복수의 지자체가 공공서비스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거나 유희화되고 있는 기존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즉,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남아돌아 유희화되고 있는 시설은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부족한 타 부분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복수의 지자체가 서로 남는 부분,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로 낙후 농촌지역별로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급 및 이용상황이 용도별로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농 교류와 공공서비스 이용에서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은 광역경제권 단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농 교류와 공공서비스 이용이 대부분 이동거리 1시간 30분 정도이고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

음은 이미 확인하였다. 도·농 교류와 공공서비스 이용에서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즉,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점차 확산·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정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과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The Korean Cities of Culture as Regional Development Hub: A Review of the First-Phase Projects and Future Directions

이순자, 장은교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란 과연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전반적인 문화정책의 동향과 문화도시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고,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난 5년간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광주, 부산, 경주, 전주, 공주·부여의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도 2011년 계획기간이 완료되었으며, 후발주자인 공주·부여는 2010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의 경우 2007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2011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경주와 전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들인 공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에는 문화도시 기반조성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기본계획의 의도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의 문화 및 예술 진흥과 생활문화 향상, 문화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증대 및 도시이미지 강화, 문화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성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할 정책담당자에게 보다 실

질적인 방안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와 운영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는 정책과제로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정비,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계획의 유연성 확보,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문화도시 선정의 합리성 제고 등을 도출하고 각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적 차원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방향 및 분명한 목적의 설정, 중앙정부·지역 간 역할 재정립, 지역구성원 참여 확대 및 자립적 추진능력 제고, 지역고유의 문화자원 발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연관사업의 공간적·기능적 네트워크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1기 지역거점 문화도시의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에 맞추어 개략적으로나마 그동안의 추진실태를 중간점검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찾아내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효과적인 전략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 기초자료 축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Development Issues of the Growth Centers in North Korea for Preparing Korean Unification(II)

이상준, 김천규, 박세훈, 신혜원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거점도시들 가운데 동해안권의 핵심 거점도시들인 나선, 청진, 원산을 대상으로 도시 실태와 개발잠재력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시개발과제는 통일 이후의 과제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과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나선, 청진, 원산 도시개발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과 북한 기업이며, 한국과 국제사회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시개발잠재력을 거시적 측면과 도시공간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도시개발의 과제는 도시개발잠재력을 바탕으로 개혁·개방과정에서 제기될 과제를 중점적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의 과제 가운데 중단기에 남북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선, 청진, 원산 등 세 도시의 실태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세 도시 모두 내륙의 산악지대와 해안지대 사이에 시가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형적 조건을 갖고 있다. 세 도시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후한 산업시설 및 기반시설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 세 도시 모두 50% 내외의 낮은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체제전환은 세 도시 모두에게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지만, 세 도시 가운데 나선과 원산이 청진보다는 개혁·개방과정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 수출형 경공업과 물류 및 관광분야에 상대적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청진이 나선과 원산보다 상대적으로 약점이 많은 것은 중공업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이다.

나선, 청진, 원산은 북한에게는 동해안의 대외진출 관문, 우리에게는 극동러시아와의 연결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위치에 있다. 세 도시는 동북아 경제협력

의 주요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수송 및 에너지분야의 협력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도시들이다. 산업연구원 등의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세 도시별로 주력 제조업의 개발잠재력을 비교한 결과, 청진은 금속산업이 유리하며, 원산의 경우 전기·전자부문의 입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선의 경우 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기존의 제조업을 통한 도시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보다는 물류, 관광 등 타 산업을 도시발전의 중심산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시적 측면의 도시개발잠재력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산업입지후보지 도출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나선시의 개발가능후보지는 총 12개소로 61.1km<sup>2</sup>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진시의 경우는 개발가능후보지가 총 14개소로 78.4km<sup>2</sup>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산시에는 개발가능후보지가 총 7개소로 20.1km<sup>2</sup>에 걸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선과 청진 그리고 원산은 서로 다른 여건을 가진 도시들이지만, 도시개발의 과제 측면에서는 유사성도 갖고 있다. 세 도시 모두 노후한 주거지와 공업지대의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이고 기반시설의 현대화도 필요하다. 특히 항만주변의 노후 공업지대의 정비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세 도시는 도시의 규모와 개발여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된 도시개발과제의 추진도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세 도시의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중단기적으로는 경제특구의 개발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 2 지역연구

# Regional Research

-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34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Ⅲ) 35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건강장수도시 실태진단 연구 36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연구 37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38
-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사례분석 연구 39
-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연구 40



##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권영선, 하수정, 민성희

본 연구는 지난 50년간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을 평가하고 지역의 특성화 및 지역 간 연계발전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조를 개편하며, 법·제도적 검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국외사례로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법, 제도, 계획, 그리고 도시권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책방안에 참고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매우 심각하고(4.5/5.0),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2.0/5.0). 또한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은 균형발전과 특화발전이 조화(49.8%)를 이루되 지역 내·지역 간 불균형해소(22.8%)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공간구조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다음 정부에서도(37.3%), 그리고 장기적으로도(41.6%)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공간단위를 설정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예산제도를 개선하고 계획과 재정 및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도시권은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지자체 간에 유연적·자율적·합리적으로 권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도시권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의 발전수준과 성숙도에 맞게 추진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법안에는 광역계정을 거점형 계정과 연계·협력형 계정으로 개편하는 내용, 지역발전정책의 재원 확보 사항, 도시권 설정, 그리고 주체 간 역할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예산제도는 법, 계획 등과 연계되어 집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재원의 50%는 시·군, 시·도 등 행정단위 중심, 50%는 주변 시·군, 주변 시·도와 연계·협력 중심으로 배분하여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하여 부처 간·지역 간의 연계·협력 및 조정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지역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청(가칭)이나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 국무총리실로 그 임무를 이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II)

Establishing the Simulation Model for National Territorial Policy(III)

안흥기, 임은선, 김준기, 김동한, 민성희, 김태영, 최명섭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KRIHS-SIM)은 지역경제 부문, 지역 간 이동 부문, 토지이용 부문 등 3개의 핵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경제 부문과 시각화 부문이 있다. ‘지역경제’ 부문은 지역개발 계획 등 국토정책의 실시로 인한 지역별 GRDP 변화, 물가 및 고용변화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를 추정하는 부문이다. 지역 간 CGE 모형을 기본 지역경제모형으로 하고, 효과의 시군 간 배분, 환경효과 추정 등을 위하여 지역 간 산업연관 모형, 환경 I-O 모형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지역 간 이동’ 부문은 국토정책으로 인한 지역별 인구변화, 산업변화, 교통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추정하기 위한 지역인구변화 모형, 지역산업변화 모형, 지역 간 교통수요 모형 등이 있다. ‘토지이용변화’ 부문은 국토정책이 시행되는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등 관심지역의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LCM(Land Change Modeler)을 활용한 토지이용변화 모형이 있다. ‘국가경제’ 부문은 16개 시도 인구,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 지역별/산업별 고용지수 등에 대한 지역경제의 총량제어 변수 역할을 한다. ‘시각화(visualization)’ 부문은 지역경제, 지역 간 이동, 토지이용변화 등에서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Output)와 함께 이러한 결과를 국토정책 지수로 변환하여 국토정책 효과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KRIHS-SIM의 특징은 첫째, 다양한 유형의 정책시뮬레이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모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각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정책 시뮬레이션 시 필요한 부문 간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정책효과를 모의실험할 수도 있는 탄력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연계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는 점이다. 즉, 국토정책이 지역경제 및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지역 간 인구이동, 지역 간 산업이전, 지역 간 교통접근성 변화 등이므로 이들 요인들의 지역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KRIHS-SIM이 여러 부문과의 연계와 독립적 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부문과 완전한 피드백이 되는 통합 모형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이론과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표적인 국토정책 유형별 정책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범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 모형을 바탕으로 국토정책의 구체적인 사전 모의실험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책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국토정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첫째, 도시개발정책, 지역개발정책, SOC 투자정책 등 대표적인 국토정책의 파급효과, 즉 지역경제, 산업, 인구, 교통, 환경부문의 변화, 장기도시성장패턴 등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국토정책 대안 간 정책효과분석을 통한 최적대안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생산극대화, 지역균형발전,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대안을 선정하는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시범모형(K-Sim) 내의 개별 분석틀을 이용하여 조세정책 및 각종 개발계획의 투자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건강장수도시 실태진단 연구

A Study on the Diagnosis of Cities of Health and Longevity in the Era of Wellbeing

김태환, 김은정, 이미영, 김선희, 양진홍, 김재욱

본 연구는 국민건강 수준의 악화 및 고령화의 진전이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건강장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천적 측면에서 건강장수도시란 ‘국민(人)과 국민이 살아가는 국토(空)가 함께 건강한 도시’란 점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역별 건강장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국민(시민)의 건강장수도’와 ‘국토(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국민(시민)의 건강장수도’는 ‘건강행태’, ‘질병이환’, ‘심리건강’, ‘건강인식’ 등의 4대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토(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는 건강장수도시의 제반환경으로서 ‘제도기반’, ‘물리환경’, ‘시민실천’, ‘사회환경’ 등 4대 부문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시민의 건강장수도 실태분석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권역별로는 각 부문에서 광주호남권의 건강장수도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규모별로 건강행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농촌형 지역일수록 심리건강과 건강인식 수준이 높으며, 질병이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시민의 건강장수도에서 농촌형 지역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의 권역별 비교에서는 광주호남권이 제도기반 부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양호하며, 수도권은 경우는 사회환경 지표수준이 낮았다. 인구규모별로 비교하면 농촌형 지역들이 보건복지 예산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시민실천과 사회환경 부문의 지표수준은 매우 높고, 대도시의 경우는 반대로 보건복지 예산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시민실천과 사회환경 부문의 지표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특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 5개 대표적 지역 유형군(대도

시 중심도시형, 지방도시 주변농촌형, 호남권 농촌형, 경상권 중소도시·농촌형,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형)이 도출되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시환경 건강장수도의 수준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다. 인구규모가 클수록(대도시) > 중소도시 > 농촌) 대중교통 접근성, 보건의료환경은 양호하고,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자연 및 생활환경 수준,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건강장수도와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 수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성 분석을 시행하여,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에 기초한 지역 유형별로 시민의 건강장수도가 차이가 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술적 성과로는 건강장수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정책적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도시의 건강장수 인프라 조성정책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도시환경의 건강장수 친화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도시환경의 건강장수도에 따라 도시를 유형화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유형구분을 활용하여 각 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장수도시 추진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 수준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연구

Studies on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이동우, 김광익, 차미숙, 장철순, 변필성, 강호제, 김진범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 지가의 안정, 수도권 인구집중 둔화 등 여건의 변화는 지역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 간 균형발전, 신도시 건설과 주택공급 확대, 투기 억제 등 주로 성장사회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성숙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각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7종류의 주요 지역정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제1주제에서 제4주제는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분야별 개선사항을 다루고 있고, 제5주제에서 제7주제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들을 건의하고 있다.

제1주제는 수도권정책에 관한 것이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서울대도시권의 공간적 범위가 수도권을 넘어서 충청권, 강원권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의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광역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수도권정비계획의 공간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제2주제는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지역개발정책의 중복 및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사 지역개발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운용을 위한 「지역개발통합·지원법」의 제정과 국무총리실 내에 지역개발 통합·조정 추진기구 설치 등을 건의하였다.

제3주제는 낙후지역정책에 관한 것이다. 그간 민간 기업 유치 위주의 낙후지역 정책을 추진하여왔으나 기업 유치 가능성이 낮고 주민 고용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역외기업 유치보다는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사업조직 육성, 역내 인력·자재·기술의 조달에 의한 공공시설 사업 전개 등 내생적 역량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건의하였다.

제4주제는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고학력 고급인력에 대한 일자리 공급을 위하여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산업, IT, 전문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구조를 고도화할 것과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도심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대도시 지향적 산업입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제5주제는 세종시에 관한 것이다.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충청권 발전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고, 세종시와 주변지역(대전, 청주·청원, 공주, 천안, 아산 등)의 통합적·동반적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제6주제는 혁신도시에 관한 것이다. 혁신도시가 당초 목표한 대로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전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정부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주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것이다. 올림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개최지인 평창·강릉·정선 지역은 물론 강원권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회개최 시설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담추진기구(가칭 평창동계올림픽지역발전청)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2013년에 출범한 새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설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간: 2012. 9. 14~2012. 12. 31

서지사항: 170면, 국토연 2012-54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rban Industrial Location Policy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서연미, 류승한, 장철순, 강호제, 박정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도시형 산업입지의 다양한 모델을 사례지역을 통해 제시하고,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형 산업입지란 대도시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산업입지 형태로서 학술적·법률적으로 규정된 개념은 아니며, 대도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활동에 적합한 산업입지 형태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이다.

대도시 산업입지 정책이 당면한 과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화·산업화가 일찍 시작된 대도시에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 대도시는 지식서비스업 성장에는 한계를 나타내 제조업 감소에 대응한 신성장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대도시의 제조업 기반 상실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 중심으로 공장용지가 주거·상업기능으로 용도전환되면서 발생하고 있어 대도시 산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공업지역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대도시는 산업화 초기에 조성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산업단지 노후화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서 대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산업용지 개발뿐 아니라 기존 산업클러스터의 재생 및 구조 고도화에 보다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산업입지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대도시 구·군 단위에서 지역유형을 구분하고, 도시 내 산업입지 형태로 12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중 상대적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제조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성동구 성수동, 사상공단)와 지식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산업입지(서울디지털단지, 센텀시티산업단지)의 특성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기업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포함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지면적 중심의 산업입지 개념을 입체적 개발로 확대하고 유지기능 중심으로 산업단지 유형구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지식서비스업 중심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입주기준을 완화하고 산업단지의 복합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면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 참여의 확대와 적정 임대료 설정기능 마련을 통해 도시형 임대 산업입지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도시형 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진입도로 등의 지원을 내부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대체하고 국고지원 대상 산업단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존 산업지역의 유지·개선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산업집적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환경 및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 산업입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중심 대도시와 근교지역의 기능분담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사업시행자 범위규제 완화 등 민간자본 참여유도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사례분석 연구

Case Study on the Cities of Health and Longevity in Korea

김은정, 김태환, 최영국, 권영섭, 차미숙, 임영태, 김재욱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물리적 도시환경의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제고에 노력하는 도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자체, 보건소, 주민, 시민단체 등 여러 주체가 협력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소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공간범위는 전국으로 설정하되, 사례분석 단위는 시·군·구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건강장수도시의 유형화 과정을 통한 모범사례를 도출하고, 유형에 따른 특성별 사례를 소개한다. 결론에서는 각 사례들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시의 건강성을 다섯 가지 측면(제도기반, 생태환경, 물리환경, 시민건강, 시민참여)으로 접근하였고, 우선 본 연구에서는 강원 원주시, 경남 창원시, 서울 강동구, 충북 제천시, 경북 울릉군, 전남 광양시의 사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연구수행방법은 사례지역 선정, 사례분석, 시사점 도출로 구분된다.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건강장수도시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건강장수도시 유형을 분류하였다. 선정된 사례를 실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일반 통계자료 및 건강장수 관련 선행연구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건강장수도시 현장포럼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지역들의 공통적·차별적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사례지역의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건강장수’ 측면에서 우리나라 도시들에 대한 분석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6개 사례도시를 통하여 다양한 측면의 건강장수도시를 부각하려 노력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지역 특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하는 도시들을 더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축적하여 우리나라 건강장수도시의 발달 특성을 도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건강장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the Capital Region of Korea to Counterbalance the Relocation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Government Offices and Public Agencies to the Non-Capital Regions

김광익, 서태성, 김태환, 변필성, 윤영모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토공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로 영국, 프랑스, 일본의 최근 수도권 정책 동향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방향의 전환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행정·공공기관의 이전(충북 오송 등으로 기 이전한 9개 기관 직원을 제외한 이전인원 5만 4,777명)에 따라 2030년까지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약 28만 명으로 이전 초기에 약 1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 1년 단위로 예측한 수도권 인구이동은 2023년경 순유출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이보다 4~5년 빠른 2018~2019년에 수도권 인구이동이 순유출로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래 지역 간 통행연계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1년에 예상되는 시·도 간 통근통행 연계구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충북과 함께 세종시가 결절지가 되어 대전 및 전북까지 포괄하는 통근통행 연계권역이 서울 및 경기도 1차 결절지가 되는 통근통행 연계권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시·군 간으로 세분하여 수도권 및 연접권역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행 연계구조와 통학통행 연계구조에는 2009년과 달리 2021년에 세종시가 통행 결절지로 성장한다는 점이 나타난다.

해외사례 검토 결과, 영국이나 프랑스는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입지한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 대상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부합되는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정책 전

환방향의 과제를 정리하였다. 첫째, 행정 및 공공기관 중전부동산의 활용방향 모색이다. 둘째, 수도권 인구가동안정화 추세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전환이다. 단계적으로는 정책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중기에는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도권 정책이 성숙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 통행의 광역화에 대응한 수도권 계획권역의 확대다. 넷째, 입지규제 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 체계에서 새로운 계획체제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정책 방향의 전환추진을 단기, 중기, 장기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수도권정책 방향전환의 준비기인 단기 추진방향의 하나로 행정·공공기관 중전부동산의 적정 활용 추진이다. 둘째, 단기 추진방향의 두 번째로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한 수도권정비권역의 조정방안이다. 셋째, 수도권정책 방향의 전환기인 중기 정책방향으로 수도권계획 체계의 개편이다. 새로운 수도권계획은 중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 주도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립 및 집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 검토과제로 새로운 대도시권 발전전략의 모색이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서울 및 인접 인구밀집지역의 글로벌 대도시권 육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종시가 성숙하면서 인접 대도시와 연계한 세종-대전-청주 대도시권이 형성되고, 나아가 기존 서울대도시권에서 세종-대전까지 연결되는 메가리전(Mega-Region)에 대한 발전전략 모색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것이다.

### 3 도시연구

## Urban Research

- 건전한 도시생활기반 정비와 환경보전 방안 42
-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화 전략 연구  
: 여유로운 가로환경 조성방안 43
-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44
-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45
- 도시 가로의 적주성(livability) 도입방안 연구 46
- 도시개발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향 연구  
: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중심으로 47
- 도시정책 전환기의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 분석 연구 48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49
- 커뮤니티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50



## 건전한 도시생활기반 정비와 환경보전 방안

Strategies for Improving Urban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Preserving Natural Environment

민범식, 유재윤, 조판기, 김상조, 김성수, 박정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시작된 급격한 도시팽창기에 대규모 물량공급이라는 방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왔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와 경제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부분, 소외된 부분, 방치된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정책은 이러한 현재의 도시문제 외에도 미래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 대두되는 과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현황과 제와 미래에 대두될 과제를 종합하여 보면, 큰 방향에서 중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정책주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구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도시활력 유지, 둘째,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대응과 자연환경 보전, 셋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복지환경 제공, 넷째,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풍요로운 문화공간의 제공 등이다. 이런 방향하에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세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도시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대도시권의 경제거점 역량강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심활성화, 기초적 생활환경 정비, 에너지 절약적 도심재생, 산업기반기능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생활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방안으로서 마을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 수익성 보완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전문인력 지원에 의한 지역역량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막 개발이 일어나는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는 '성장관리계획' 수법 도입,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통한 비용 확보, 사업수단과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삶의 질을 위한 국토·도시경관 정비 방안으로는 기존의 경관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 경관 관련 용도지역의 정비, 경관사업 추진재원 확보, 경관거점에 대한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대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대상시설을 선별하고, 새로운 여가수요를 수용하여 보전적 활용을 유도하며, 주민지원사업 다각화 등을 제시하였다.



##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화 전략 연구 : 여유로운 가로환경 조성방안

Improvement Methods for Affluent Environment of Urban Street

민범식, 양진홍, 박정은, 김동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그동안 도시 공간의 양적 공급에서 이제는 생활환경 향상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를 공원과 같은 여유로운 환경이 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도시정책에서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환경 체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가로를 중심으로 여유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여유로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환경요소를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가로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요소를 기존의 각종 논문과 문헌에서 추출한 다음 전문가 설문문을 통하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유로운 공원 같은 가로환경을 이루는 요소는 상업지역 가로에서 자유로운 활동, 휴게공간, 보행연속성, 빈 공간 등의 순으로, 그리고 주거지역 가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활동, 녹지율, 휴게공간, 전면자연조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푸른 자연'과 '인간행태의 자유로움'이라는 두 개로 목표이미지가 압축되는데, 세부 환경요소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가로에서 차이점이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 과밀하고 혼잡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이나 휴게공간 등의 확보가 중시되고, 주거지역 가로는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하므로 자연조망, 녹지율, 녹지개방도 등 시각적 요소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기서 도출된 빈 공간이나 옥내의 휴게공간 등의 환경요소는 단순히 여유로운 가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넘어 개방적 커뮤니티 활동을 담아내거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중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가로의 도시공원화 또는 여유로운 가로환경이란 건전한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교류기반 만들기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가로환경이 이러한 환경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 유도, 사업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규제나 유도의 방법은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으로, 그리고 사업의 경우에는 현행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서 수용하도록 하여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Urban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in Built-up Areas

박정은, 김상조, 김재철, 정소양

본 연구는 도시재생 시대에 도시관리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성시가지 재생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쇠퇴해가고 있는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나아가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및 제도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현장중심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책방향의 전환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기성시가지 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현장중심적인 조사를 통해 현재 당면한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한 뒤, 이의 해결을 위한 도시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도시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도심 5개 지역(부산, 광주, 서울, 수원, 청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대상지 분석 결과, 기성시가지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관리 제도적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비물리적 재생사업을 제도적 틀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재생사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장소중심의 종합적 재생이 중요하며, 재생을 위한 종합적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장기적 재생추진을 위한 기초지자체·주민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셋째, 주민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실태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성시가지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관리 7대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성시가지 재생 관련 사업들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소중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를 최대한 존중하되 재정비, 재생 등과 관련된 계획 간

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의 연계추진과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재생전략 마련에서 기초지자체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소통식 주민참여와 함께 소통의 재생방식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민간이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여야 한다.

일곱 가지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도시관리제도 개선 유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가장 먼저 계획 측면에서의 개선과 운영 측면을 구분하고, 다음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유형과 새로운 제도의 추가 및 신설이 필요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개선안 도출 시 현재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해야 할 부분과 효율적인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또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 또는 매뉴얼 등의 작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내용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가칭)「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설될 재생 관련 계획·사업들과 기존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사업들과의 관계정립, 그리고 정합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A Study on Urban Policy for the Vulnerable-Classes to Climate Change

왕광익, 정윤희, 이진희, 박근현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 영향 중 지역적 특성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응에 차이가 있는 폭염과 한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다루면서 복지나 환경적 측면이 아닌 공간적, 도시정책적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지역,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불평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논의한 취약계층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에 의하면 '개인적·지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특별히 취약한 인구집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정의한다. 이후 이러한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지표를 통해서 사례지역을 선정한 까닭에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비율이 높았으며, 주변에 비해 기후노출에 의해 더 많은 자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외부환경과 주택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 곳의 사례지역 선정에 같은 지표를 사용하였으나 서울지역과 대구, 부산지역의 취약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조사 대상자가 나머지 두 지역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적 능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주환경이나 건강상의 문제, 에너지 접근 등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 사용되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는 개인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취약 커뮤니티를 선정할 수 있는 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 커뮤니티의 특성과 여러 기후노출에 대한 취약 정도에 따라 민감도와 적응능력 측면을 구분해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감도는 녹지율,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의 노후도 등의 지역적 요인과 가구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으며, 적응능력은 경제현황, 건축물의 형태, 에너지환경, 교육, 사회적 자본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간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국내 정책은 복지나 환경 부분에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나 사례지역 분석 결과 기후변화 취약 커뮤니티의 도시환경과 정주환경이 이들의 취약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도시 가로의 적주성(livability)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Enhancing the Livability on Urban Streets

서민호, 정진규

본 연구는 도시 가로의 적주성(livability)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우리 도시 가로의 적주성 실태진단 등을 통해, 도시 가로에 어떻게 적주성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는 먼저 도시 가로를 둘러싼 제반여건과 도시 구성원의 욕구·선호는 무엇이고, 복합적 개념(ensemble concept)으로 알려진 적주성을 도시 가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다. 또한 도시 가로의 적주성 구성요소의 개념 간 역학관계와 상대적 중요도, 인지적 판단과 물리적 환경 간 영향관계를 어떻게 체계화하여 도시 가로 적주성을 판단·평가할 수 있는가다. 마지막으로 도시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우리 도시 가로의 적주성 실태와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도시 가로에 적주성 개념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원칙과 정책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가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 가로(Livable Street)'란 이름답고 매력적인 공간 구성과 경관으로 도시민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를 경험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안전감을 줄 수 있는 가로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테헤란로·이태원로·영등포로를 중심으로 가로의 물리적 현황과 적주성 관련 실태를 현장실사하고, 가로 이용자 210명을 대상으로 가로 여건과 적주성에 대한 이용자 의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우리 도시 가로의 적주성 만족도는 약간 양호한 수준으로, 일상의 휴식·여가기능 강화와 심리적 안전감 확보, 사회·문화적 교류기회 제공, 차량·보행 혼잡과 노변주차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도시 가로 적주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통공간으로서의 가로 기능보다는 사회·문화교류의 장(場)으로서 역할강화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협력적 계획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융합

추진으로 체감 편익의 실질적 증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람을 위한 도시 가로 구현을 위해서는 장소성, 쾌적성, 접근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적주성(livability) 개념 도입이 필요하며, 사람과 차량 간의 관계 재정립, 가로 내 복합적 토지이용 강화와 다양한 이용자 체험 기회제공이 중요하다. 둘째, 가로라는 '장소'와 이용자 활동·체험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단편적 계획·사업(closed-end plan) 추진보다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개선(open-end planning)을 위한 주제별 시행계획(action plan) 구체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이용자 행태·요구의 면밀한 분석과 협력적 추진체계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민간이익 균형을 위한 규제(디자인코드, 지구 지정 등)와 자립적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공적이양제, 보조금 등)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정책제언은 「보행법」 제정에 따른 보행친화도시 등 후속사업, 기반시설 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향후 국가·지자체가 시행할 도시·가로정비와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의 이론적 근거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도시개발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향 연구 :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ticipants' Role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 Focused on Project Financing

유재운, 정소양, 박근현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체계적인 도시공간의 조성과 주택공급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사업 추진과정 중 공공성이나 사업 자체의 타당성 등의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성과는 상당 부분 사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성격, 권한, 역량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는 사업 주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PF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이 도시발전과 주민생활 등 공익적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함께, 무리한 계획, 비용관리가 안 되는 구조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 추진에 의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공공의 역할이 취약하다는 점과 민간 입장에서 사업을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하다는 점으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선진국의 도시개발 특징을 민관협력사업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해외의 도시들은 도시개발에 있어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개발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개발의 현황분석과 해외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선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참여주체별로 역할이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각 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직접적 권한을 가급적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개발, 타당성 없이 무리한 재정투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중복 개발 등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재정적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벨로퍼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및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금력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디벨로퍼가 적극 육성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발굴·기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주체 간에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성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최근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논의하였으나, 결론으로 제시된 공공의 역할, 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정상적 역할분담, 금융권의 역할증대 등은 다른 유형의 도시개발사업에도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별, 공간범위별 특성을 고려하고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도시정책 전환기의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운용실태 분석 연구

An Analytical Study on Current Management States to Improve Urban Master Plan Policy in Urban Policy Transition Period

김상조, 정윤희, 이진희

현행 도시기본계획이 최근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사전적 계획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기본계획 관련 제도의 변천 및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당면한 주요 이슈들을 밝혀내고, 그 개선과제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1981년 「도시기본계획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었고, 이후 사회경제 및 생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법」과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변경을 통해 수립 대상 도시와 목표연도, 분석 방법 및 인구추정 방식, 수립 절차, 부문별 계획의 내용 등이 바뀌어왔으나 아직까지 그 역할과 기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 및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감소, 도시재생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시정촌 마스터플랜의 경우 작성 수준과 내용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수립이 가능하다. 영국의 LDF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 개의 계획 문서를 통합한 틀을 제시하는 전략적 정책으로 하위 문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종합계획의 구성과 내용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며, 계획 수립에 주민의견의 반영이 용이하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독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이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도시계획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구나 토지이용 지표 추정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 제시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실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담당자들 중 도시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자 정책계획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 이상이었고, 이의 원인을

주로 획일적인 수립지침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12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문별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타 부서 관계자들 역시 현재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도시기본계획의 영향이 컸다. 또한 사례로 살펴본 5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모두 인구지표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정되어 인구감소 등의 여건변화 반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지표 역시 대부분이 인구지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량과 실현량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의 실현성 역시 감소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도시기본계획의 방향과 지자체장의 의지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문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기본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의 포괄적인 협력을 통하여 전체적인 도시적 맥락 속에서 동일한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부문별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경쟁력 제고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Demographic Change and Spatial Transformation in Korea  
: Recent Development and Policy Directions

박세훈, 김동주, 정윤희, 박근현, 이은영

본 연구는 최근의 국토·도시공간의 재편현상을 인구변동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도시화율이 정체된 1990년 이후 '도시화 성숙기'의 공간변동에 주목하면서, 국토·도시공간 차원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화가 성숙기에 이른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도시인구 변동의 주요 특징과 대도시권 형성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공간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둘째, 인구규모가 큰 지역은 성장하며 작은 지역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국토공간이 대도시권과 그 외의 지역으로 양분되고 있으므로 국토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넷째, 대도시권 밖에 입지한 중소도시의 도시체계상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공간의 유형을 대도시권, 지역중심도시, 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 형성된 공간구조를 변형하기보다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둘째, 수도권 유입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향후 수도권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방대도시권 사이에서도 성숙도와 중심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내재하고 있다. 넷째, 지역중심도시는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성장도시와 쇠퇴도시로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향후의 국토·도시공간 관련 정책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실질적인 경제권이자 생활권으로 대두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도시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축소도시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대도시권은 경쟁력의 강화와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지

역중심도시에는 도심기능을 강화하고 주변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축소도시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구의 측면에서 국토·도시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도시권이 확대되는 한편 많은 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축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변동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커뮤니티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 연구

A Study 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Public Supporting System for Activating of Community Regeneration

이양건, 김재철, 이승욱, 류태희, 이유리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부처별,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의 커뮤니티 재생과 관련한 공공지원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커뮤니티 단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커뮤니티 재생을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부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산발적인 지원사업을 장소중심적으로 집중하고, 물리적 환경정비와 프로그램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공공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부처의 재정지원방식,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정부특별회계, 일반예산 등 커뮤니티 재생 관련 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도시재생 관련 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대안의 비교검토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계적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시 및 커뮤니티 재생 관련 공공지원제도의 운용 실태와 통합적 운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통합·조율할 수 있는 중추관리조직이 부재하여 특정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부처별·부서별·지자체별 지원시기와 방법이 달라 사업 간 연계 및 단계적 추진을 저해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정부부처의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위주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연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 간 연계통합이 어려울 뿐더러 공공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총괄 지원할 종합지원기가 부재하여 사업완료 후 사업평가 및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운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크게 세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소중심적인 통합화, 예산과 조직, 프로그램의 통합적 운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형태로 시범도시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지별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 부서 간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조정, 통합적 추진을 위한 조정기능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하여 단기간 내에 다양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2012년 내에 법률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의 핵심정책과제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향후 쇠퇴가 심화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단계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가는 방식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4 국토환경 · 수자원연구

# Environment & Water Resource Research

-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52
- 녹색성장 · 광역 · 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I)  
: 물 배분의 합리성 제고 정책 53
- 독일의 자연침해 제도와 정책제언 54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 관리 전략 55
-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 56
-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방향 연구 57
-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공원 · 녹지 확보전략 기초연구 58



##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Enhancing Historic-Cultural Capacity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ulture-Specific Area Development Program

채미옥, 차미숙, 문정호

본 연구는 국토·지역개발에서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역사문화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문화권 조성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실효성을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국토의 역사문화역량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해온 문화재 보호 및 문화권 관련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문화재 중심의 원형보존적 역사문화자산 관리에 치중해 있으며, 둘째, 관광개발 중심의 개발 및 문화관광개발사업 추진을 강조하여 접근해왔으며, 셋째,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과 문화재보존체계의 연계가 미흡하며, 넷째, 도시 내 역사문화유적과 공공시설의 광역적인 연계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역사문화역량 증진시책 추진동향과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역사문화역량 증진 관련 정책기조와 제도에 있어서 공통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역사문화유산 관련 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광역적인 환경기반 조성뿐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역사문화역량 제고 및 지역적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역사문화역량 증진 관련 추진주체들 간 협력과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산의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권 조성사업의 내실화와 역사문화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 조성사업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문화권 조성사업은 문화재와 주변 지역, 자연환경, 문화재와 문화재 간의 역사적 맥락을 회

복하고 조성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역사문화역량과 문화적 품격을 높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재 보존체계와 국토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수립 기준 및 지침 등에 역사문화환경 고려항목을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권 조성사업의 모니터링 추진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목표 및 성과목표에 근거한 지표(가칭 역사문화역량지표 등) 개발 및 이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녹색성장 · 광역 · 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I) : 물 배분의 합리성 제고 정책

Advanced Water Resource Management of Green Growth · Area Wide ·  
Integration Period(II): Policy to Enhance Water Allocation Rationality

김종원, 김창현, 최지용, 임동순, 류문현, 배유진, 송은서

물 배분정책은 수량관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갈등, 물 사용자 간의 갈등, 댐 용수 공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와의 갈등 등 지속적으로 물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있어왔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 사용에 따른 물값 거부 운동이 댐 상류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물 배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물 배분에서, 하천수 기득물량의 편중 배분, 댐용수의 재평가와 용수 재배분, 하천유지용수나 환경개선용수 등 새로운 용수 수요량의 확보, 광역상수도 와 지방상수도 중복투자 등 왜곡된 물값 구조에 의한 불합리한 용수배분과 자원낭비 등이 핵심적인 과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수질사고나 가뭄 등 물 부족 시, 지역 간 · 경제주체 간에 물 재배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경우 물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물 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먼저 물 배분의 기준이 되는 수리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정책방안과 같이 절차 및 제도개선을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여기에는 기득물량의 재배분, 관행수리권의 허가수리권으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댐 용수의 사용에 대한 재평가와 재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지자체 또는 물 이용자의 허가받은 사용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불필요한 허가수리권은 정부가 회수하여 필요한 용도 및 다른 사용처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물의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역 내 및 유역 간의 물 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댐 및 보의 여유물량을 보다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천

법」의 용수사용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개선용수의 보다 원활한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 즉, 신규수원 개발, 하수재처리수의 이용,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유역별 홍수기 여유물량의 저류방안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유역별 최적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독일의 자연침해 제도와 정책제언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of German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최영국, 박종순, 최인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독일이 190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것처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보호지역과 일상생활공간에서 자연침해(훼손) 문제가 등장하였다. 2003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이념으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고,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복구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 그리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및 자연생태계 훼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계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독일의 자연침해조정 도입 배경,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자연침해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제도 계획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자연침해(훼손)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 짧은 연구기간이지만 독일의 자연침해조정 제도를 심도 있게 다룬 점, 마지막으로 현행 법제도의 수용범위 내에서 도입가능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독일 자연침해조정 제도의 도입은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환경보전기본법」 등 상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자연침해 내용을 하나의 틀로 묶고 또 구체화시키는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또한 자연침해조정 제도의 도입은 「택지개발촉진법」, 「도로법」, 「하천법」 등 개별 하위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실천 수단을 마련하여 자연훼손과 생태계 단절을 다루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할 것이다. 또한 「경관법」 내에 생태적 경관의 개념을 포함한 후 경관계획을 작성하는 방

안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연침해조정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자연침해조정 제도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자연훼손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부담 원칙, 자연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개발 이전 자연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을 복원해야 하는 원칙 등은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 관리 전략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김종원, 채미옥, 최영국, 김태환, 박태선, 심우배, 김은정, 한우석, 박중순

본 연구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하천관리, 건강장수도시, 도시우수관리, 문화재 보존 등 네 가지 분야의 국토환경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하천과 주변지역 자원의 연계활용전략의 수립이다. 여기서는 하천과 주변지역 자원의 통합적 연계활용을 위한 구조물적·비구조물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물적 방안으로는 첫째, 기존 시설물 이용방안, 둘째, 신규 시설물 설치방안 등이 있으며, 비구조물적 방안으로는 첫째, 직접적 수단, 둘째, 간접적 수단, 셋째, 정책적 수단 등이 있다.

두 번째 전략은 건강장수도시의 구현이다. 여기서는 건강장수도시 조성 및 구현과 관련된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 문제점 및 향후 정책과제 그리고 미래정책 추진방안 및 그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건강과 웰빙의 관점에서 제반 도시환경의 업그레이드, 둘째, 건강과 웰빙의 가치를 도시계획 및 정책에 통합, 셋째, 건강장수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넷째, 도시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진체계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 폭우재해에 대비한 도시 우수관리시스템의 개선이다. 여기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피해증가 및 도시취약성, 적응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도시우수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추진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존 도시우수관리시스템 기준 강화 및 유지·관리, 둘째, 대형 우수관리시설물 설치, 셋째, 기존 방재시스템을 토탈방재시스템으로 확대·전환, 넷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 다섯째, 과학적 분석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여섯째, 현실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전략은 국토개발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여기서는 매장문화재를 둘

러싼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시기의 개선, 둘째, 지표조사공영제 실시, 셋째, 공공 및 민간의 발굴비용 분담체계 구축, 넷째, PUD기법과 매장문화재 보존체계의 연계, 다섯째, 「건축법」상의 대지 내 조경 및 공개공지 규정 등의 개선, 여섯째, 역사기록조사사업, 역사문화관리계획 수립 등의 기초정보 제공체계 확충, 일곱째,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방법 개선, 여덟째, 용적률거래제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 2012. 9. 14~2012. 12. 15

서지사항: 144면, 국토연 2012-56



##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

Polici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Coastal Areas in Korea

최영국, 엄기철, 박종순, 조원철, 최지연, 이문숙, 정지호, 백경진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현행 국토이용·연안관리와 연관된 법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여 연안관리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등 관련 법제도 및 계획과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연안지역 관리의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연안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안지역의 관리 방향 정립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를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연안의 육역과 해역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하여 지속가능한 연안관리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연안국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연안관리는 육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연안해역의 경우는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등 개별법적 차원에서 관리됨으로써 「연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안육지와 연안해역의 범위 설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이용 개발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연안개발의 범위와 유형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해볼 때, 연안의 이용·개발에 관한 이원적 관리체계는 연안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생태계 보전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안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안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연안육역 및 연안해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조명하고 관리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 관련 법제도와 계획체계 분석을 통해 연안관리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연안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파악하여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창출을 위한 관리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향후 추진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지속가능한 관리 방향의 기본원칙으로 법제도적 측면의 연안통합관리, 연안생태계 기반 관리, 공간적 관점에서의 지역기반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을 법제도·계획간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 연안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 지역기반 관리를 위한 기초지식 확보 등의 세 가지 관리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관리 방향을 감안하여 5개 주제를 대상으로 18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육역과 해역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보고, 통합관리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방재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수단 제시, 연안지역의 특수성과 공간적 연결성에 기초한 문제의 인식 등은 향후 관련 연구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방향 연구

The Paradigm Shift and Policy for River Management

박태선, 이문원

본 연구는 한 시대의 일반적 사상의 경향인 시대사조에 따른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과정을 고찰·전망함으로써 향후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하천관리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적 시대사조는 인본주의와 생태·환경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인간의 다의적 사고와 환경의 다원적 가치를 강조하는 회고적 모더니즘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천관리에 있어서도 하천환경의 복원 및 하천의 다목적 이용에서 새로운 하천가치 창출 및 하천관리 거버넌스 확충이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하천정책을 국내 여건, 관리기반, 관리목적, 물 분생 등으로 구분하여 연대별로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우리나라의 하천정책은 자연이용 차원의 수동적 하천행정기(1948~1951), 자연적응 차원의 소극적 하천보수기(1952~1960), 자연대응 차원의 적극적 하천개발기(1961~1995), 자연보전 차원의 적극적 하천정비기(1996~2006), 하천복원 차원의 적극적 하천정비기(2007~현재)라는 다섯 단계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의 하천관리 비전을 ‘인간의 다의적 사고와 환경의 다원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향후 하천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정신적 만족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하천문화를 창출·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하천이용자를 고려한 관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행위적 만족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전한 하천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하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연중 이용 가능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세한 안내와 적극적 홍보도 필

요하다. 셋째, 새로운 하천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하천환경조사를 토대로 하천과 주변 환경요소와의 생태적 상관성을 연구하여야 한다. 넷째, 하천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자산을 고찰·분석하고, 관련 주체들 간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법·제도적으로는 하천관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상술한 다섯 가지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하천정책을 고찰하고, 향후의 하천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위한 구체적 연구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공원·녹지 확보전략 기초연구

Applications of Replotting Methods for Urban Park and Green Space Conservation

양진홍, 구형수, 이정민, 이희라

기간 기후변화와 녹색성장과 같은 글로벌 어젠다를 중심으로 산림·녹지에 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도시숲 가꾸기 등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향한 녹색로드맵을 그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녹색 인프라를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환지방식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 및 공원화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장기규제 토지의 합리적 활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그 해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도시공원·녹지 확보라는 국가 전체의 공익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되 개인 또는 지자체에 편중된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체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대거 실효되는 등의 공원·녹지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국내외 도시공원 확보 정책수단을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으로서 환지방식을 고려한 공원녹지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지방식의 다양한 적용형태를 분석하여 보전 목적의 공익용 공원녹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 절차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환지에정지인 개발특례지역은 등가(等價)의 원칙에 따라 배정하되 전체 대상부지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정하고 공공시설 등 지역인프라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공익용 유보지(약 15%)를 포함하였다. 공익용 유보지는 향후 지역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지로서 공원·녹지와 연계하여 건강문화클러스터, 생태회랑,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도출한 환지방식 적용기준을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모의 적용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토지에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높아 현행 법제도적 한계에 대응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 성공사례가 없는 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정부재정 없이도 계획고유권한과 개발특례방식을 적용하여 국가적 과제인 도시공원·녹지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환지방식에 기초한 다양한 개발수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지방식이 도시공원·녹지 확보방안으로도 유용하며 향후 더욱 다각적인 측면에서 환지방식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국영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안정적인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국가가 공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뿐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장기규제토지에 개발특례 및 환지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도시공원을 다양한 형태로 결합 개발하여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선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5 주택토지연구

# Housing & Land Research

-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60
-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61
- 도시개발과정의 보상평가제도와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62
- 미국 감정평가제도의 전개과정과 제도기반에 관한 연구 63
- 보금자리지구 존치건축물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64
-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65
-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Rep-DSS) 구축(Ⅱ)  
: 시뮬레이션모형 수정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66
-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67
-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68
-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69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70
-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방안 71
-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Ⅰ) 72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 2008년 이후의 정책을 중심으로 73
-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Ⅱ) 74



##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Strategy and Policy to Improve the Housing Welfare and Community for Urban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손경환, 배유진

개발도상국에서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도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이 악화되고, 도시 내 많은 불량노후주거지역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구성원 사이에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이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은 악화되면서 양극화에 따른 성장동력 감소와 구성원 간의 사회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경제발전 단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주거안정 및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은 개발도상국이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당면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과 불량주거지역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상황을 참고하여 각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적합한 주택공급과 커뮤니티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World Bank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의 생활향상을 위해 많은 프로젝트를 시행해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성과는 기대했던 바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상황 악화와 도시 내 일부지역의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주택이 크게 부족하였기 때문에 주로 양적인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200만 호에 달하는 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택의 대량공급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실정과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제도와 전략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경험과 지식은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World Bank에서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도상국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커뮤니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고려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생활향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투자재원 마련, 택지개발 제도정비와 함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발전단계별 저소득층 주택정책 시행, 주택정책 체계확립, 주택금융 및 택지개발, 커뮤니티 발전 차원의 지역개발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A Rural Housing Policy for Improving Housing Service Level

강미나, 김영표, 김진범, 하수정, 김미정, 김형우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 측면에서의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농촌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농촌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농촌 주택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개발하여 주택정책에 대한 정책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하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SWOT-ERRC 기법을 이용해 농촌지역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8대 전략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농촌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되어오고 있으나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로 인하여 농촌지역이 주거 기반으로서 관심을 덜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농촌이 '농촌다움'을 찾고 거주지로서 매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촌의 주거상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농촌지역의 주거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의 수는 양호하나 빈집의 비율이 높아서 이는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노후된 주택이 많고 시설이 노후·낙후된 주택이 많아서 안전과 주거편리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후된 주택은 주로 고령가구가 거주하고 있어서 주택개·보수의 여력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재의 주택정책 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이용하여 비용대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장 주거수준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농촌의 차가가구에게 가장 큰 주거수준 향상을 나타내는 정책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정책이고, 그 다음이 2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농촌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정비 및 신규주택 공급, 귀농·귀촌인구 주택 지원 및 공급방안 마련, 저렴주택 제공, 주거비 절감, 빈집 관리 및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천적인 방안으로 귀농·귀촌가구를 위한 전문상담센터와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시범생활을 해볼 수 있는 '귀농·귀촌 체험제도'의 운영, 저렴주택 제공을 위한 자재 표준화, 표준화된 매뉴얼 작성·제공, 주거비 부담-특히 겨울 난방비 등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역시설을 한시적인 공동취사/거주공간으로 활용하여-의 경감, 빈집통합관리체계 및 포털서비스 구축, '농촌 빈집 리로케이션(Relocation) 서비스' 제도마련이 농촌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2012. 1. 2~2012. 12. 30

서지사항: 216면, 국토연 2012-47



## 도시개발과정의 보상평가제도와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Compensation Valuation System for Urban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Policy Implication to the Development Countries

정희남, 유선종, 김원보, 유기용, 허강무, 서경화, 박성진, 김기선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한국의 수용보상제도와 보상평가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상평가제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보상평가 관련 법제와 조직을 설명하였다. 보상평가의 최상위 법률은 「헌법」이며, 「토지보상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은 정당보상의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국토해양부다. 제3장에서는 보상평가의 평가주체와 평가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보상평가는 민간의 전문평가사가 담당한다. 보상평가사는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소유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평가대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제5장은 보상평가의 실무기준을 설명하였다. 보상평가의 일반원칙은 크게 세 가지, 즉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이다. 평가보고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평가보고서 원본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은 보상평가의 심사 및 검증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제7장은 ADB 등 국제기구와 한국의 보상평가 기준을 비교분석하고, 이어서 한국의 보상평가제도가 개발도상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ADB 등 국제기구는 보상평가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보상평가는 완전한 대체비용(full replacement cost)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완전한 대체비용 평가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감가상각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보상평가는 자격 있는 민간전문가가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보상평가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민간의 전문평가사가 평가하고 있다. 대체비용 기준과 시장가격 기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보상평가 결과는 ADB가 권장하

는 대체비용 평가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

한국의 보상평가제도가 개발도상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하고, 민간의 전문평가사를 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상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제도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보상평가 관련 전문연구소의 설치를 권장하며, 경제개발 초기에는 전면매수 방식보다 환지방식을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상평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록 I〉에서는 보상평가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미국 감정평가제도의 전개과정과 제도기반에 관한 연구

Evolution of Appraisal System in the U.S.A. and Its Institutional Base

정희남, 유선중, 김재환

미국의 감정평가제도는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형성 및 발전해오던 평가시장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개입하면서 점차 정비되어왔다. 보상평가 등 공적평가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온 우리와 달리, 미국의 평가제도는 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평가와 관련한 평가시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미국의 평가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는 모두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미국 평가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서술하였다. 미국 감정평가제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조직 중 하나는 감정평가재단(The Appraisal Foundation: TAF)이다. 제2장에서는 감정평가재단의 조직과 업무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연방의회의 감정평가 소위원회(Appraisal Subcommittee: ASC)다. 감정평가 소위원회는 1989년 「FIRREA법」 제정 당시 감정평가시장을 연방 차원에서 지휘 감독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제3장에서는 감정평가 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구성 등을 서술하였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말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규제가 거의 없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종 감정평가 규제장치를 마련하면서 감정평가 관련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였다. 제4장은 연방기준의 감정평가사 자격유형과 유형별 자격요건, 자격시험 실시현황, 감정평가사 등록제도 등을 살펴보고, 끝으로 민간협회가 발행하는 자격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감정평가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감정평가사가 전문성, 독립성 등을 갖추고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규율하기 위하여 통일전문평가 실무기준(Uniform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미국이 통일전문평가 실무기준을 제정하게 된 배경, 실무기준의 목적과 범위, 실무기준의 체계와 주요 내용 등을 서술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 평가검토제도의 발달과정, 평가검토제도의 목적과 기능, 평가검토사의 윤리와 자격, 평가검토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소개하였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윤리규정을 수록하였다.



## 보금자리지구 존치건축물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the Retention Building in the Bogeumjari Housing Zone

최수, 김승중, 배유진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된 공공시설, 주유소, 종교시설 소유자들의 시설물 존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유소, 종교시설 등은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 후에도 지구 내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보상하기보다는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반면 존치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당해 건축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막대한 지가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혜시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공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존치건축물 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혜시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존치건축물 선정기준 및 부담금 산정방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각종 개발법령에서 존치건축물 관련 제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택축법」상 존치건축물 관련 제도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보금자리지구 지정 전후의 지가차액을 분석한 결과 현행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으로는 존치건축물 소유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의 개선방안에서는 기존 제도의 개선은 물론 새로운 수익자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정까지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안이 모색되도록 하였다. 보금자리사업지구 존치건축물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설치의 제한)에 의해 규정된 범률을 신설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 존치에 관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보금자리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신

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금자리지구 내에 존치건축물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사업지구 내 존치건축물 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존치건축물 선정기준 및 부담금 부과기준, 관련제도 등을 정비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원활한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Advancement of Real Estate Transaction

지대식, 손경환, 김승중, 전성제, 배유진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의 선진화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거래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의 바람직한 정비·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화의 3대 개념적 요건(안전성·효율성·투명성)에 맞춰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의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과 주요국의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제도의 주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의 개념·유형 및 제도적 법체계를 개관하고, 부동산 중개·등기·거래관리로 구분하여 관련 제도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의 틀에서 제시한 거래 선진화의 3대 개념적 요건에 맞춰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및 중개업의 주요 사례(중개업 정의·범위, 거래법제, 정보제공, 중개업자 자격·능력)를 고찰하고 거래과정에 관여하는 참여주체와 거래비용구조를 비교 분석한 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진화의 3대 요건에 맞춰 우리나라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책제언으로서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거래의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는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 권원보험 활성화, 배상책임 강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거래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업 육성, 거래관리체계 개선, 정보망 연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거래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거래정보망 개선, 거래신고제 확대, 전속중개계약 유도를 제시하였다. 넷째, 「거래관리기본법(안)」 정립방향으로는 부동산거래의 기본이념, 거래통계 및 조사, 거래관리정보망 구축, 부동산산업 육성방안 및 거래관리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의 실태와 제

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대비해봄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이루는 사항을 중심으로 방향제시 차원에서 비교적 다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규제위주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바,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관련 규제 및 법령의 선진화, 서비스업 발전에 정책적으로 폭넓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II): 시뮬레이션모형 수정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Model for Real Estate Policy and Establishment of Rep-DSS(II)

이수옥, 변세일, 김재환, 김태환, 전성제, 유현지, 문지희, 김근용, 박천규, 황관석

2011년도부터 수행된 본 연구는 예측이 어려운 장래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정책담당자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도구들을 개발하여 정책 실무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년(2011~2012년)에 걸쳐 현재 도입 중이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수단의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및 정책 도입에 앞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형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개발된 모형의 행태분석 결과, 실제 부동산시장 설명력이 높아 시뮬레이션모형을 정책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형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초기단계로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는 토지부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타당성 검증결과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차원의 부동산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과 다양한 부동산시장 자료(Data)를 기반으로 원하는 정책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하고, 최적의 정책조합 도출을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은 정책담당자의 정책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작동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의 정책 현장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적 정책수단 탐색 기능을 통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모형에 대한 이해와 정책효과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이 정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공유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전담기구, ‘(가칭)부동산자료 및 정보 통합거래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급작스런 부동산시장 변동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 확장기 및 수축기별 위기단계에 맞추어 도입 가능한 다양한 정책조합으로 부동산시장 위기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중앙+지방+국토연구원’ 삼각협의체 구성으로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부동산 정책결정지원시스템(부동산 DSS)이 위기대응 매뉴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데이터 지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모형과 시스템은 부동산시장의 방향성뿐 아니라 변화 수준까지도 어렵직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모형들과 차별화되며, 모형과 시스템의 이 같은 장점들로 인하여 향후 부동산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Housing Market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김근용, 박천규, 박미선, 천현숙, 강미나, 김혜승, 최수

세계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신용경색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되는 반면, 전월세시장은 불안한 양상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높은 차입금을 안고 주택을 구매한 계층은 차입금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중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심화되고 있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동시에 내 집을 마련하여 거주하고 싶어하는 희망자를 위한 자가소유 지원방안 역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무주택 저소득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기존의 물리적인 거처의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경성적 주택정책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성적인 주거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토지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발이익 분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정책을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각각의 과제와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첫 번째,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에서는 주택시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고 그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주택시장 관리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한 후 과제를 도출하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서는 국내외 자가소유 실태를 분석하고 자가소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자가소유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현황과 실적을 분석한 후, 외국의 자가소유 촉진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자가소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세 번째,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황 및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내 민간임대주택시장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외국의 민간임대주택 현황과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민간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안은 사회적 약자의 정의 및 규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현황분석, 정책적 문제점을 바탕으로 미래 정책추진 방안과 정책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특성, 필요성과 우리나라 주거지원서비스의 공급사례 분석, 해외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수익자부담금 도입방안에서는 수익자부담금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 토지이용규제와 토지가치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수익자부담금의 범위검토와 범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A Study of the Forestland Management Policy on the Perspective of New Paradigm

손학기, 진정수, 이승복, 최수, 권용석, 배유진, 김진영, 성선용, 성영배, 엄정희, 한윤정

최근 우리나라 산지가 세계적 기후변화의 영향권에 들면서 산지에 대한 인식이 탄소흡수량 확보, 수원 함양, 재해방지, 문화 및 웰빙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산지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감안하여 산지관리정책의 새로운 발전과제를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산지관리체계의 변천을 고려시대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다. 시대별로 산지관리체계, 임업적, 공익적, 생활용도적 산지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산지관리는 3차례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무주공산으로서 산지의 자유로운 이용과 관리 및 계획이 없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979년까지는 산지구분을 통한 농·임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산지관리의 주요 목표였다. 1980년대 이후의 패러다임은 도시화·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과잉개발과 기후변화로 산지훼손 등과 같은 폐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산지에 대한 시각이 개발의 공간에서 여가 및 관광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산지와 국토, 인간과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생관계가 동반될 수 있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산지복원, 산림치유의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계획을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계와 선후관계가 설정된 통합적 산지관리계획에 진행되어야 한다. 요컨대, 본 보고서에는 미래여건변화에 대응해서 '산지관리계획을 통한 녹색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다.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현행 산지관리체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산지관리체계, 임업적·공익적·생활용도적 이용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산지관리체계의

문제를 살펴보면, 일단 산지구분과 산림기능구분이 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산지관리 관련 용도지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 산지구분조정체계에서는 거시적 생태계 연결성과 탄소흡수원 관리 기능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지특성평가제도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임업적·공익적·생활용도적 산지이용의 문제도 산지관리체계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문제를 토대로 산지관리정책의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문제점과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같은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실제 산지관리정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지관리체계에서는 산지구분조정체계의 정비 등 다섯 가지, 임업적 산지이용에서는 임업용 산지를 통한 탄소흡수기능의 증진 등 세 가지, 공익적 산지이용상의 발전과제에서는 산지관리에 국토생태축의 개념 도입 등 네 가지, 생활형 산지이용상의 발전과제에서는 산지지형 특성을 반영한 산지전용타당성평가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장단기 세부 발전과제들을 발굴했다.

이렇게 도출된 발전과제들을 실현하는 방안은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과제로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산지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전략과제를 '산지유역유형'과 '산지이용유형'을 가로와 세로축으로 구분한 교차표에 할당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과제로 선정하는 방식을 제기했다. 여기에 활용된 도시형산지, 도시주변산지 등 산지유역유형은 기존의 보전·준보전 산지의 구분에 비해 보다 세분화된 산지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Housing Support Service System

김혜승, 박미선, 천현숙, 차미숙, 김태환

본 연구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문제를 지닌 지역주민이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무형의 지원(연성 서비스)'을 주거지원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주거안정, 자립성 강화, 지역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현행 주거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및 외국의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거문제를 지닌 모든 지역주민이 주거지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특화된 전문성에 기반한 조직(가칭 '주거지원서비스센터')을 기초지자체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공급주체가 공공부문이든 민간비영리부문이든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수요자와 접촉(직접 발굴, 수요자의 전화·내방, 소개 등)하면 인테이크(접수)하고, 수요자의 정황을 사정한 후 단순한 상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지 혹은 방문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상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방문하여 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직접서비스 혹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 후 수요자의 욕구 해결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욕구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서비스를 종결하고, 만약 여전히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수요자가 시·군·구의 통합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면 될 것이다. 셋째,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비영리 주거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관련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그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 공공 및 민간의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체계여야 할 것이다. '(가칭)주거지원서비스센터'는 해당 지역에 있는 공공부문(지자체, 공사, 공단 등)과 민간부문(민간 비영리 단체, 기업, 은행, 대학 등)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주거욕구 및 여타 다양한 욕구를 적시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직접서비스 혹은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원서비스의 확대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을 위한 특별회계나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미약했던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고, 향후 주거정책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Execution Capacity Appraisal System

이승복, 배유진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금액(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공시하는 제도로서,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보호하는 각종 제도에 활용되고 있으나 평가제도의 적정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의 유사제도를 분석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념 및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현황을 정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시공능력평가제도와 유사한 사례로 사후평가체계를 구축한 영국과 우리와 유사한 점수제를 이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시공능력평가제도가 현재의 산정방식을 유지하되 정보의 정확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제도운영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세분화하고 질적인 정보도 공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실적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평가요소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타 입찰제도와 평가항목을 연계하고 실적정보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

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가시스템의 체계성을 강화하여 기술력 제고 및 건설행정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방안

A Study on Housing Policies of Low Income Single-Elderly-Households

천현숙, 강미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가구의 주거안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가구의 주거는 신체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되어야 하고 노인가구 유형별로 실태는 물론 소요의 차이 등을 감안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소비특성과 주거이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지원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 중에서도 독거노인가구를 구분하여 이들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고 노인주거지원정책을 차등화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노인연구는 대부분 가구원 중 노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독거노인가구 증가율이 높고 가구특성에서도 노인가구와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가구 유형별로 차별화된 주거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뿐 아니라 주거이동특성을 분석하여 노인가구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개선방향은 첫째, 노인가구 중에서도 도시거주가구와 농촌거주가구의 특성이 다르고 자가가구와 차가가구 특성이 다르므로 지역, 점유형태 등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만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의 시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으나 노인가구주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순위로 정책시행기준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에서 제안하는 정책개선안은 노인가구주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노인가구주가구 중에서도 여성가구나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거노인가구가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될 것이다. 소득 이외에 주거수준까지 감안하여 차등화하다 보면 독거노인가구가 우선적인 정책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차가 노인가구에게는 주거비보조가 가장 필요하므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독거노인가구에게는 주거안정화보다도 주거부담 완화가 더 긴요하다. 둘째, 자가거주 노인가구에게는 주택개조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의 경제적 상황, 신체적 상황에 따른 자립 및 안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개조사항을 추출하고 이를 위한 개조 소요비용의 일부는 재정지원하고 일부는 저리금융지원을 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 밀착형 수요대응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복지관을 중심으로 인근에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나 소규모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넷째, 독거노인가구를 위한 다세대 동거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1호 2실로 구성된 1호 주택을 2인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평면도 동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가구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다. 노인가구에 적합하게 주택을 개조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인에게 개조비용, 임대소득세 우대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한다. 여섯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노인가구 지원 및 주거복지사 양성이다. 노인가구 주거만족도에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내 거주기간이 장기간인 특성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 활성화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또 지역사회의 노인가구를 연계하여 정보와 자원을 전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주거복지사제도가 필요하다.



##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

Housing and Urban Policy Strategies Responding to Low Fertility(I)

천현숙, 김영표, 정희남, 김혜승, 이수정, 김진범, 윤운정, 오민준, 김태환

본 연구는 저출산가구의 주거소비 실태 및 수요특성, 저출산 관련 주택정책 현황 파악과 성과 평가를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로 1차연도에는 출산 자녀수에 따른 주거소비, 출산과 주거와의 연관성 파악에 중점을 두었고, 향후 2차연도에는 지역별 출산율 차이를 심층 분석하고, 도시주거환경정책과의 연관성 파악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 소요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주택 및 도시정책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주택정책 측면에서 출산을 장려하면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 공급비율을 제고할 경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정책이 금융정책에 비해 사회전체적인 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받는 가구와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의 크기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급정책과 재정, 금융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산 원인에는 출산을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주거지원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전세 자금 지원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결혼 인센티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주거부담 완화는 소득보조 효과가 있으며 출산 결정을 앞당기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향후 주거복지정책은 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분양주택, 임대주택 외에 주택바우처

도 도입되어야 한다. 바우처 도입 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내에서도 출산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지원비율을 높이게 되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목적 외에 출산율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주택금융정책도 결혼 후 연수제환을 두기보다는 생애주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수에 연동한 금리 우대를 하면 미혼모나 비혼가구 등도 모두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

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공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에게 불리한 지역거주기간이나 부양가족수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 성격이 강한 보육서비스 시설의 경우 규범적인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용자가 속한 지역사회의 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주택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보육에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출산율의 급감과 주거부담의 과중함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주거부담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또 출산을 지원하는 주택공급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 정책효과 크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본 연구의 모형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결정 방법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기간: 2012. 1. 1~2012. 12. 31

서지사항: 338면, 국토연 2012-57



##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 2008년 이후의 정책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the Housing Policy during 2008~2012 and Future Directions

배순석, 김민철, 박미선

이명박 정부는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규제 및 부동산 세금완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주거복지를 위한 재정 투입은 이전 정권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이전 정권에 비해 중산화 가능계층, 중산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민간부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반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많이 완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주거안정을 정부의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정책브랜드로 삼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재정투입 수준도 증가하였다. 재정투입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브랜드화한 사업들을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정책의 균형과 형평성이 훼손된 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예는 보금자리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프로그램이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건설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 2~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축소된 점 역시 문제다.

민간택지의 주택규모별 공급기준의 경우 현 수준의 규제가 사회통합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규모별 기준을 60m<sup>2</sup> 전후 두 가지로 단순화하는 것이 주택수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1:1 재건축이 아닌 호수가 증가하는 재건축에서 재건축 이전의 주택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85m<sup>2</sup> 이하의 주택을 60% 이상 건축하도록 하는 규제는 과도하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상당수가 주거비부담이 과하거나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열악한 환경

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대상자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하므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 소득 4분위 이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당분간 계속되어야 한다.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all or nothing 식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공적부조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라이프사이클별 주거문제에 대응한 지원방안 도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은퇴가구를 위한 보유세 경감,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 관련 세금 경감, 주택취득 후 대출이자상환에 대한 세제감면 등도 검토해야 한다.



##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II)

Policy Implications through Micro-Analysis of Real Estate Market(II)

박천규, 권수연, 전성제, 김영미, 황관석, 이수옥, 손학기, 최윤경, 김태환, 김재환, 변세일, 정희남, 전성애 외

본 연구는 지역별 부동산시장을 세분화하여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 2차연도 연구로 구분하여 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특히 이번 2차연구에서는 1차연구에서 정립된 지역별 부동산하위시장 분석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분석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분석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행정단위인 읍면동 단위의 부동산시장 관련 데이터를 발굴하여 업데이트하고 지속가능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을 다진다. 둘째, 1차연구에서 정립된 방법론을 수정 및 보완하여 미시적·다각적으로 지역별 부동산시장 특성을 분석한다. 2차연구에서는 가구의 주택탐색범위, 이주범위를 감안한 기능측면 하위시장을 추가적으로 식별하고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지역별 부동산시장을 다수의 하위시장으로 세분화하고, 하위시장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부동산하위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이 연구결과와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시장 분석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동산하위시장의 식별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하위시장의 프로파일링이다. 전자의 경우는 기능 측면과 등질 측면 부동산하위시장의 식별을 위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구축하는 선행 작업과 본격적인 시장 식별과정을 포함한다. 후자는 식별한 부동산하위시장에 대한 특성과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방법과 더불어 분석한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관련 이론 및 방법론을 검토하여 수립한 시장분석의 틀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별로 부동산하위시장을 기능 측면과 등질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동산하위시장 특성 해석 및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부동산하위시장별로 프로파일링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방안은 기능 측면 관점, 등질 측면 관점, 이 둘을 통합한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부동산시장 관련 미시적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결과는 지역별 부동산하위시장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정에 각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정책소요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수립체계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 및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시를 통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 차별화 현상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 대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동산정책의 시의성, 적소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6 국토인프라연구

# Infrastructure Research

-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방안 연구 76
- 네트워크지수를 활용한 국가교통인프라 추진전략 연구  
: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77
- 미래지향적 통합인프라 개발 방향 78
- 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79
-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 정보통신기술이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80
-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 81
- 전환기의 SOC 투자정책방향: 도로정책을 중심으로 82
-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83
-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 연구  
: 한국과 중국 산둥성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84



##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f Building Bicycle Corridors for Making Healthy National Territory

정진규, 류재영, 김태환, 서민호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간계획 분야에도 자연환경을 보존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개발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레길, 둘레길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생태회랑을 경쟁적으로 조성 중이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요구가 커지고 공공의 이익과 함께 건강, 여가 등 개인의 편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 부문에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자전거인프라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개발에 기여하고, 개인의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정주공간을 건강국토라고 정의하고, 건강국토 실현 측면에서 기존의 자전거 정책을 평가하며, 자전거회랑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현황, 자전거인프라 조성 및 이용실태 관련 문제점, 그리고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고, 건강국토 실현의 3대 구성요소인 환경·지역경제·건강 측면을 고려하여 자전거회랑 구축의 3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목표 1).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친환경적 조성, 주변의 기존 생태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주변 생태·레저시설에 대한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국토의 또 하나의 축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인프라 조성의 틀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목표 2). 인프라의 질적 개선 전략으로는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안전성, 쾌적성 제고, 교통수단 간 연계 및 수리·보관시설, 식당·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의 강화, 정보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자원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목표 3). 신규개발보다는 기존의 관광·문화자원의 접근성 제고, 연결공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콘텐츠·프로그램 발굴 등 장소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자전거회랑은 주변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자전거길의 인프라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간 연계와 여가·문화적 이용수요를 창출하여 개인의 정신·육체적 건강 향상은 물론 국토의 환경·경제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자전거회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전거인프라 및 주변 지역의 자연친화적 통합개발이 필요하며, 자전거길 및 연계·편의시설, 주변 생태·레저시설의 통합개발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기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자전거 도로망과 장래 자전거 도로망 체계 및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와 병행하여 레저형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자전거인프라 개발·정비와 주변 토지이용 및 지구단위개발을 회랑형으로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계획·제도적 사업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네트워크지수를 활용한 국가교통인프라 추진전략 연구 :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The Efficient Strategy for National Transport Infrastructure Using Network Index: Focusing on Interchanges of Expressway

김호정, 이춘용, 고용석, 김종학, 김혜란

국가교통인프라 시설은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이동성 기능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 대도시권과 산업 단지를 연결한다. 이러한 국가교통인프라 시설이 제공하는 고속의 신속한 이동성 이외에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육상교통시설은 국가 경제활동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대도시의 권역 내외 권역 간을 결속시키는 연결 '망' 즉,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점점 다양해지는 경제활동과 다양한 지역의 연결, 또 다양한 교통수단이 네트워크라는 기능을 발휘하는 인터모달(inter-modal) 교통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서 단순한 이동성 측면 이외에 안전성, 정시성 등의 수행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교통인프라 시설에 대한 여건 변화,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교통인프라 시설 가운데 적정 수준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IC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IC 주변의 교통물류거점을 객체로 하는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전국 단위의 GIS 자료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IC가 연계하는 산업단지, 항만, 주요 도시 등의 중요도에 따라 교통시설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측면에서 중심성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 이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IC가 갖는 네트워크 연계 강도를 정의하였다. 즉, 고속도로 IC가 주변 도로망과 얼마나 많은 링크로 연계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매개 중심성과 고속도로 IC가 폐쇄될 때 전체 네트워크 측면에서 매개중심성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중심성 등을 산출하여 그 값을 비교한 결과를 주변 교통여건에 반영하며, 네트워크 효과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정보중심성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도로 정의하였다. 이렇

게 정의한 교통시설의 중요도와 네트워크 연계 강도를 네트워크 지수화하기 위해 정책 스크린 매트릭스 매칭(matching)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가로축은 교통시설 중요도, 세로축은 네트워크 연계 강도로 하여 지수화하였다.

전국의 고속도로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29개 IC와 중부·대전통영고속도로 21개 IC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지수를 산출하였다. 선정된 2개 고속도로별 네트워크 지수를 산정한 결과 서해안고속도로는 교통시설의 중요도에 비해 네트워크 연계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당진IC, 송악IC, 서평택IC 등 대도시 주변 IC는 교통시설 중요도에 비해 네트워크 연계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고속도로 21개 IC는 전반적으로 교통시설 중요도에 비해 네트워크 연계 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비해 교통시설 중요도의 분포는 보다 분산되었으나 네트워크 연계 강도가 크게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으로 양분되어 IC 간 네트워크 연계 여건의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지수를 이용하여 향후 국가 기간교통망 중 간선도로망인 고속도로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네트워크 연계 강도, 교통시설 중요도 측면에서 평가한 고속도로 IC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 고속도로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IC별 네트워크 연계 강도를 산출하여, 경제적 편익 이외에 네트워크 효과를 반영한 투자평가 체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지향적 통합인프라 개발 방향

A Study on the Integrat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조남건, 이춘용, 김흥석, 정진규, 오성호, 임영태, 이백진, 서민호

본 연구는 모두 여섯 개의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1장 노후 인프라 재생전략: 건설된 지 50년이 지났거나 수명이 다 된 인프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를 예방하고, 기반시설의 장수명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노후 인프라의 재생을 위해서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요비용을 추정해야 하며, 전국 단위의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노후 인프라 시설별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고, 인프라 재생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해야 하며, 민간자본의 활용도 필요하다.

제2장 항만과 배후도시의 통합적 개발방안: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경우, 항만과 도시기능의 연계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면서도 공간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항만관리체제의 지자체 이관 이후 물류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제3장 도·농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어촌도로 확충방안: 생활밀착형 농어촌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 군도 등 상급도로와 농어촌도로의 미연결구간의 연결을 추진하고, 1.5차로 도입으로 농어촌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농공단지 및 귀농·귀촌을 위한 정주 지원형 농어촌도로 건설도 필요하다.

제4장 철도역과 철도부지를 활용한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방향: 향후 공공 소유의 철도역 및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역사·문화공간, 공공공간 등을 공급함으로써 도시재생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의존이 강하고 도심 서비스업 종사 경향이 강한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철도부지의 입체복합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심 낙후지역에 부

족했던 역사·문화공간과 공공복리시설의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 기존 역세권 개발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철도역·철도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중앙 특별 지원 중심의 '특구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인프라 시설의 효율성 증진 전략: 먼저 이동과 접근이 자유로운 인프라의 영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프라의 점과 선에서 네트워크와 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초국경적 공간 개념을 통한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프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켜 자립형 생활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프라와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권을 강화하고, 인프라 토털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증진시키며, 인프라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전략이다.

제6장 신성장동력을 위한 SOC 정책 방향: 본 연구의 3대 추진전략은 첫째, 동북아의 중심역할을 위한 개방형 SOC 연계체계 구축, 둘째,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위한 기술집약형 SOC 구축, 셋째, 해외 수출을 위한 파생 SOC 기술 축적으로 요약된다.

중점과제로는 첫째, 남북협력 SOC 구축, 둘째, 제한속도 160km/h 초고속도로망 구축, 셋째, 순수 국내 기술의 고속철도망 완성, 넷째, 대중국 및 대일본의 연계망 구축, 다섯째, 전기 및 스마트차량 대응 파생 SOC 기술 확보, 여섯째, SOC 기술 및 파생 SOC 기술개발 지원체계 확보 등이다.



## 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The Increasing Effectiveness of Legal Transportation Planning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Area

김종학, 김호정, 고용석

수도권은 국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 2위의 대도시권으로 성장하였고, 이 지역의 효율적 교통계획 수립은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법정교통계획은 중앙정부와 3개 시·도 등 4개의 계획수립 주체가 담당하고 있어 교통시설 확충 시 계획수립 주체 간 이해대립으로 원활한 계획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법정교통계획의 수평적, 수직적 위계정립이 모호해 협의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수도권의 다원화되고 복잡한 법정교통계획 체계로는 원활한 계획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수도권 주요 교통 관련 법률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계획들의 문제점을 검토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계획 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3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하고 결론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도권 교통문제는 계획수립 주체와 교통법령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간 해결은 어렵다. 미국 사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이를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처럼 계획수립 시 중앙과 지방의 소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통합하여 조정하는 것보다 시설별 담당 중앙부처와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이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소통의 채널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소통의 전제는 신뢰이고 신뢰의 전제는 만남(meeting)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조정기능

은 버스노선 조정 등 소프트 조정기능에서 탈피하여 도시철도 연장, 주요 교통시설 노선선정 등 하드웨어 조정기능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교통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능력 제고가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당근과 채찍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장기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4×10 교통수립체계에 대한 점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승용차 증가에 따른 도로망과 교통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철도망 확충문제는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교통시설 공급 정책방향에 따라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기본틀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별 법정계획에 따른 조직체계의 효율성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 리더십은 수도권 전담 교통기구 설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STIF), 일본(관동운수국), 미국 LA(SCAG) 등 해외 대도시권은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을 통해 광역교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구설립은 제4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수도권 교통체계 정비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 정보통신기술이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port Infrastructure Policy in Smart Knowledge Society  
: Focusing on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on  
Travel Behavior

이백진, 오성호, 김준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일상활동을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교통 부문의 활동패턴(Activity Pattern)과 통행행태(시공간이용행태 등)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인프라의 계획요소들(교통수요, 통행분포, 교통수단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 지식사회의 도래에 따른 개인의 통행행태 변화에 따라 교통인프라 정책수립의 계획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통인프라 정책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핵심연구 과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스마트 지식사회의 특징분석은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요소의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이용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 교통 부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두 번째 실증분석은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교통의 계획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 교통수요 부문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 조사의 시계열 자료(1999년, 2004년, 2009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서울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용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통행빈도 변화에 대해 추가 분석하였다.

둘째, 통행분포 부문에 대해서는 먼저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단위시간당 활동발생비용에 대한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활동발생비용이란 단위시간대에 특정 활동(예: 쇼핑, 교제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비율로 정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도시공간정보와 교통정보가 활

동의 공간적 분산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수단선택 부문은 스마트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따른 통행의 효용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통행 중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정서적 측면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지, 실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정책방안은 스마트 지식사회의 특징분석과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최종목표인 교통인프라 정책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

A Case Study on the U.S. Infrastructure Performance Index for Developing Appropriate Evaluation of SOC Stock in Korea

안흥기, 윤성민

최근 들어 저성장시대의 도래,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이론적인 측면 혹은 국제비교를 통해 적정 인프라 수준 등이 제시된 바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인프라의 질적 수준, 수요자 측면에서의 적정수준 등이 고려되지 못하여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물리적인 SOC 수준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 SOC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SOC 투자수준 평가 범위의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동향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개발 중인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경제경영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 에너지, 수자원 및 광대역통신망 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과지표로서 인프라성능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만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미국의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는 미국의 인구규모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36개 대도시통계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대중교통, 복합수송의 교통시설들에 대해 공급, 서비스품질, 이용률의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21개의 요소지표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계층적위계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산정되었다.

미국의 연도별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약 6%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03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연간 1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를 활용하여 현재 미국의

교통기반시설 성능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통기반시설의 성능지수가 1포인트 증가할수록 미국의 1인당 GDP가 0.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개발된 교통기반시설의 성능지수를 활용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교적 기초자료가 충실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인프라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일부 지표를 보강한다면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를 작성하는 데에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 스톡 수준뿐만 아니라 인프라 서비스 수준 등 실질적인 인프라 스톡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교통 SOC 투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SOC 투자수준의 적정성 평가 및 SOC 시설의 지역 간 배분정책 수립 시 물량기준의 스톡 수준 배분정책을 보완하고, 서비스 수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기반시설 배분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성능지수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합한 지수로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가용성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가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수작성과 표본지역선정을 위한 지역구분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전환기의 SOC 투자정책방향: 도로정책을 중심으로

A New Policy for SOC Investment in a Transition Period Focusing on the Road Policy

류재영, 임영태, 김흥석

본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의 출범, 재정여건의 변화,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 등 국내의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는 전환기를 맞아 향후 SOC 투자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과거 추이와 각 부문별 정책을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발전과정과 SOC 정책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종합하고, 특히 공간구조형성과 국가경제활동,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 부문을 중심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향후 투자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SOC 투자정책변화를 시대별, 유형별, 부문별로 살펴보고, 향후 투자여건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국토공간정책의 변화, 사회경제여건의 변화, 녹색성장정책 등 재정기조의 변화, 정보화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 남북교류와 개방화 등 주요 이슈와 정부의 대응정책, 해외 선진국의 SOC 투자정책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전환기의 도로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대별 도로투자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도시부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향후 도로투자정책 방향, 연계체계 정비를 위한 간선기능 제고방안,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살펴보았다.

우선 도로 부문의 여건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에 대해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로 및 자동차 기술개발, 국가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건설사업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기회요인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서비스와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요구증대, 위협요인으로는 도로 부문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 일부 과도한 시설공급에 따른 반대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전환기의 도로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첫째, 도시부와 수도권 간선도로의 주중/주말 교통혼잡에 미흡한 대응, 둘째, 고규격 도로의 건설과다와 중복투자, 환경훼손, 셋째, 전국 다발적인 도로공사 추

진방식, 넷째, 산업단지, 교외부 첨단산업·연구개발단지, 또는 국제교통관문, 국립공원, 여가시설 등의 국민편의와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통행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점, 다섯째, 도로 관련 계획 간 상호연계성의 부족과 장래 4만 달러 시대의 고도산업이 입지할 대도시 교외지역에 대한 광역도로망 부족 등 후기산업시대의 산업과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공간계획과 도로계획이 융합되지 않은 점, 여섯째, 도로관리체계 분산으로 효율적 투자가 미흡했고, 통합적 관리도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전환기에 추진해야 할 도로정책 방향으로 첫째, 대도시권 광역도로망 투자 등 도시부 도로의 국가역할 강화방안, 둘째,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지역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도로가치 산출방안, 셋째, 연계체계 재정비를 통한 간선기능 제고방안, 넷째,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실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조한 도시부 도로의 국가역할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권 순환도로를 적기에 건설하고, 둘째, 교통축 단위로 혼잡구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셋째, 도시계획(공간계획)과 도로계획의 융합적 발전을 위해 통합조정단계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국고지원 도로를 통합하고, 가로망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부를 포함하는 (가칭)국가도로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앙과 지방정부 간 투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섯째, 중요사업에 집중 가능한 국가재정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A Study of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Costs Sharing Systems for Infrastruc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조남건, 김흥석, 임영태, 박종일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인프라 사업비용을 분담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사업 착수단계부터 협상이 지연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투자분담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전문가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외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중앙과 지방이 비용을 분담하는 인프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협약을 통해 투자분담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현행 법규에 의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가 ‘투자협약’을 통한 투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투자협약을 통해 투자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프라 투자협약제도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투자비용을 분담하는 인프라 사업 중 사업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투자협약’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인프라 사업의 중요도, 지방정부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국고를 차등 지원하도록 현행 규정을 보다 실천력 있게 보완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인프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인프라 기금은 사업의 중요도가 인정되어 ‘투자협약’을 체결한 인프라 사업에만 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기금지출을 억제한다.

넷째, (가칭)사전예산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정부

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비 확보방안을 검증하도록 한다. 특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원조달 가능성’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다섯째, 예산집행의 모니터링을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실적에 따라 익년도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벌칙을 부여하도록 한다.

여섯째, 투자협약을 맺은 인프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보완한다.

이러한 투자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제안된 개선방안에 대해 현행법의 관련 내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집행의 실천성을 높였다.



##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 연구 : 한국과 중국 산둥성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llaborative Issues between Korea - China Port Regions

임영태, 류재영, 이동우, 권영섭, 이미영

최근 중국경제가 급부상하고 동북아 경제권 내 물류거점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대중국과의 친밀한 교류와 협력 도모를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간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협력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한·중 간 물적, 인적 교류 촉진의 장애요인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이를 통해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사업의 실천전략 제시를 주안점으로 한다.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한·중 항만지역 간의 교류현황을 분석하였고, 중국현지의 전문가와 관련 기관 CEO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한·중 항만지역 간 물류, 산업, 인적교류분야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중 항만지역 간 물류, 산업 협력전략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 간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민감성이 덜한 물류, 산업, 관광 부문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으로 항만통관환경개선, 한·중 양국 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 간 조율,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항만터미널 효율의 합리적 조정과 관광 부문에서의 문화콘텐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물적, 인적 교류 부문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중 항만지역 간 물류 및 산업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산둥성 내에 한국 제조, 물류기업 통관법인 설립하고, 한계기업을 위한 철수 및 이전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항만지역 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 크루즈 항로 증설 및 마리나 관

광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 중국과의 마리나 연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관법인 설립, 해외공동지원센터, 철수·이전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한·중 항만지역 간 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한·중 항만지역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중·일 FTA로 가기 위한 사전실험단계로서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를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한·중 물류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중국과의 정책적 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한·중 FTA 및 경제공동체에 대비한 양국의 주요 항만지역의 물류, 산업 연계 및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어젠다(agenda)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 7 국토정보연구

# Geo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 연구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86
-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공간정보 수시갱신방안 87
- 공간정보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 88
-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 방안 89
-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90
- 스마트사회에 대응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체계 재정립 방안 91
-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Ⅳ)  
: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92



##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 연구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Usage in Developing Countries: Focused on Strategies and Policy Agendas for Overseas Market Expansion

최병남, 강혜경, 한선희, 성혜정, 김대중

1995년부터 시작한 국가GIS 구축사업으로 행정업무 생산성 및 대민서비스가 대폭 향상되었으며, 경제·사회 활동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국내 공간정보 시장의 성장이 정체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세계 공간정보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지원협조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부가 ODA 규모를 2009년 국민총소득 대비 0.1% 수준에서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해외 공간정보시장은 국내 공간정보시장의 양적 규모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공간정보기업이 해외진출을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적절히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 전략은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의 상황여건을 기반으로 도출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악순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의 메커니즘을 선순환 체계로 전환시키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4대 전략을 제시한다. 첫 번째 전략은 개발도상국이 처한 현황과 환경,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知彼戰略으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수요특성 탐색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 공간정보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수요특성에 맞추어 공간정보 가치창출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臨戰戰略으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정책 시나리오 대응전략’이다. 세 번째 전략은 정책시나리오 대응전략에 따라 개발도상국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된 메커니즘을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臨戰戰略으로 ‘개발도상국 공간정보 환경개선 방안 맞춤전략’이다. 네 번째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국제경쟁력 있는 무장을 확보하는 知己戰略으로 ‘국내 공간정보기업

역량 강화전략’이다.

이상의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공간정보지식생태계 활성화, 공간정보지식플랫폼 구축, 공간정보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다. 기업의 4대 전략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공간정보시장 정보네트워크, 글로벌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체계적인 ODA 자금, 국가 공간정보기술 R&D 성과 상품화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략지원정책을 전담할 주체로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공간정보 수시갱신방안

A Study on Management of Framework Data for the Co-utiliza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김미정, 오지영, 김민철

본 연구는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 이후부터 구축된 기본공간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정의, 생산체계, 유지관리체계, 물리적 환경, 논리적 환경을 재정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본공간정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자료로서 공통성을 가져야 하며 둘째,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자료들의 위치기준 또는 참조자료가 되는 참조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셋째, 다른 부가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기본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자료로서 다른 자료의 위치기준 또는 참조자료가 되며,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간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본공간정보 생산체계는 통합기관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기본공간정보를 빠르고 통일성 있게 일괄 수정하는 체계의 ‘버전 2.0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정 구축해야 하는 기본공간정보의 객체는 철도경계, 철도중심, 도로경계, 도로중심, 하천경계, 하천중심, 호수, 건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객체들은 생산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생산되며, 수정 생산된 기본공간정보는 다시 생산기관에 제공하여 업무의 바탕데이터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공간정보 관리체계는 국토의 수시변동에 대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갱신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기본공간정보 객체는 건물, 도로, 행정경계다. 지적 및 새 주소는 현재의 실시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그 외 기본공간정보들도 변화 정도에 따라 1년 혹은 2~3년의 갱신주기를 적용하여 실효성과 현재성을 모두 만족하는 갱신체계를 제

시하였다.

기본공간정보의 물리적 체계인 관리시스템은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구축되어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기본공간정보 객체들을 취합하는 형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표준이 필요하다.

기본공간정보의 논리적 체계는 현재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생산·관리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절차, 방법,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개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공간정보의 공동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에서부터 논리적인 체계까지 큰 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협력체계와 추진주체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므로, 기본공간정보와 관련된 기관 및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체계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간정보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

Study on a Specification for Running National Geospatial Standards System  
: Approach to Encourage Implementation/Conformance of Geospatial Standards

강해경, 최병남, 성혜정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꾸준히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많은 공간정보표준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공간정보표준의 활용(적용)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어왔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간정보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본 연구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표준적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공간정보표준적용을 둘러싼 제반활동을 제도로 정비하고자 ‘공간정보표준적용지침(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침(안)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들이 공간정보표준의 이해당사자로서 공간정보표준체계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공간정보표준 활동이 누락되거나 취약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간정보표준적용지침(안) 마련을 위한 접근방법은 공간정보표준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 접근방법 및 고려사항을 검토할 때 OGC 표준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차례 검토를 받았으며, 공간정보표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국가 전문가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검토를 받았다. 또, 칠레(국가자산부)의 경우 칠레 공간정보표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고려사항들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간정보표준적용지침(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실에서 유관기관들 간의 업무협력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업무효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일정기간

시범운영하여 보완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공간정보표준 활동의 중심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공간정보시장 규모를 고려해볼 때 독립된 공간정보표준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현 공간정보 관련 기관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구기간: 2012. 7. 15~2012. 10. 15  
서지사항: 126면, 국토연 2012-13

1) 국토해양부, 2008. 국가 GIS지원연구: 국가 GIS표준체계확립연구, pp107-115; 국토해양부, 2009. 국가공간정보표준화사업, pp42-44.



##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 방안

The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Location Model for Collaborative Facility Planning

임은선, 차미숙, 이영주

최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키워드는 참여와 소통, 그리고 협력이다. 특히 스마트폰, 위치기반 SNS 등이 사회 전반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의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을 둘러싼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형성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적·협력적인 입지모형을 개발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협력적 입지모형은 공공시설의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입지선정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생발전을 실현해가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계획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절차적 합리성과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협력적 입지모형은 기능적으로 웹·모바일 GIS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 채널과 각종 분석기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모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학습(mutual learning)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공시설의 성공적인 입지결정은 시설의 공급자(정부, 시행자 등)와 이용자(주민, 민간 등)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참여지원도구는 주민참여에 기반한 절차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주민들의 시설 이용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체감지표를 생성하고, 주민선호도 조사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과학적 분석도구는 의사결정정보의 과학성에 기반한 내용적 합리성(substantial rationality)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설의 입지기준, 주민의견의 반영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시설이용성이나 부지의 적합도를 분석하며, 대안의 과학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청원통합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광역체육시설의 입지선정과정을 적용하였고, 서귀포시 노인복지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 대해 시나리오

를 설정하여 협력적 입지모형을 실험적으로 적용하였다. 실험적용 결과, 지오웹(Geoweb)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채널은 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데 유용하였고, 지방정부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도구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를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입지결정 절차와 내용의 ‘개방화’, 둘째, 수요자 참여·소통에 기반한 ‘현장화’, 셋째, 형평과 효율이 조화된 ‘협력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협력적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지방행정체계 개편 및 도시권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적 공공시설이나 기초생활시설 등의 입지계획을 수립할 때, 이 모형에서 제시한 협력절차와 방법은 지역별 시설의 입지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틀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 간 수혜의 격차를 줄여가고 유해시설의 편중을 사전에 예방하는 주민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A Study on Safe City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Spatial and Temporal Simulation Analyses of Crime

김걸, 강호제, 이재용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예방 이론과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을 고찰하고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시공간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 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계획과정에서 안전도시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도시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 접근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도시의 범죄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침해하고 각종 사회조직을 파괴하며 이웃 간 상호불신을 야기하는 주된 요소다. 이러한 범죄문제는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어 그 심각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추세다.

본 연구에서는 2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방법을 활용해 범죄유형별, 토지이용별, 시간대별, 계절별 범죄발생특성을 분석하였다.

사례지역 분석결과, 주로 쇠퇴한 골목길,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점지역, 주거와 녹지가 혼재된 점지역, 유흥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범죄다발지구(Hot spot)가 형성되었다. 이는 물리적 환경이 범죄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범죄발생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을 범죄취약지구 인근에 조성하는 한편, 범죄다발지역의 자연감시성을 확대하고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공격공간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할 수 있다.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결과와 더불어 기존의

범죄예방이론, 국내외 제도 및 지침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요소, 공간적 위계 및 영역에 따른 계획요소, 사회·경제·문화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 내에 적용하는 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

법제도적으로 현행 가이드라인 형태의 CPTED 설계지침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과의 연계를 통해 법률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스마트사회에 대응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체계 재정립 방안

Redesigning NSDI System in Smart Society

최병남, 박종택, 김미정, 한선희

본 연구는 최근의 스마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인프라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는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2001)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반개념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NSDI에 대해 이론적, 체계적 연구가 매우 미흡했고, 외국의 NSDI를 부분적으로 모방 도입하여 대부분의 연구는 선진 외국의 국가별 공간정보인프라를 비교해 공통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공간정보인프라를 제안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인프라는 우리나라의 제도 및 행정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축되었다.

더구나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에 의해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개념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스마트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보 유통체계, 공간정보기술 R&D 전략, 공간정보정책수행체계, 공간정보법제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간정보유통체계 개선방안으로 공간정보유통의 기본전제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유통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사고를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유통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간정보기술 R&D 전략 개선방안으로 독점 개발방식과 오픈소스 개발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 전략에는 첫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전략, 둘째, 주요 우수 소프트웨어 보완전략, 셋째, 첨단기술 분야 집중전략, 넷째, 특화시장 침투전략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전략 중에서 '고객가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의 선택이 중요하다.

셋째, 공간정보정책 수행체계 개선방안으로 기능적

인 측면에서 상·하위 체계를 수직적으로 연계하고, 하위체계들을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각 정책 추진기관들 간에 상호 협력하는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법제체계는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의 대상영역, 타 법제도와와의 관계 등을 재정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융합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V) :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alizing the Strategies of New Digital Convergence Space(IV)  
: Focusing on the Strategies for Convergence GI(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s

정문섭, 조춘만, 김민철, 박은지, 김지은

본 연구는 스마트사회의 도래와 진전에 따라 공간정보가 기여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점검해보고, 특히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나 통신망 등과 연계된 시대적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추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사회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초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사 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발굴을 목적으로 국내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최근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서비스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제도 기반의 의료·관광서비스를 실험사업으로 구축 및 적용하고, 제도·기술 등의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추진방안 제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정보 및 타 정보의 융복합에 있어서 기존의 정보에 공간정보를 어떤 형태로 결합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로 활용할 것인가, 어떤 결과물의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 등의 속성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둘째, 정보의 현장성과 실시간성 확보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서비스 데이터화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제시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관련 국내의 추진 시사점과 국내 수요분석 및 실험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향후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주요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인본주의적 디지털통합공간 창조'를 추진목표로 하여 '선도사업을 통한 확산,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기반확충과 분야 간 협력체계 구축'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5대 선도사업 즉, '스마트 의료·관광', '지능형 문화·교육', '부동산 선진화', '스마트 방재·안전' 그리고 '스마트 교통·물류' 서비스를 도출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대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공간정보와 인문정보 연계활용', '핵심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도출 방법론' 그리고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 관련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와 사회·경제 데이터 간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핵심 기반기술 고도화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셋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발지침을 만들어 중앙 및 각 지자체에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 주도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표준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중앙과 지자체에 적극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 주도의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문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 추진체계가 요구된다.

## 8 색인

# Index

- 과제명 색인 94
- 연구자명 색인 96

## 과제명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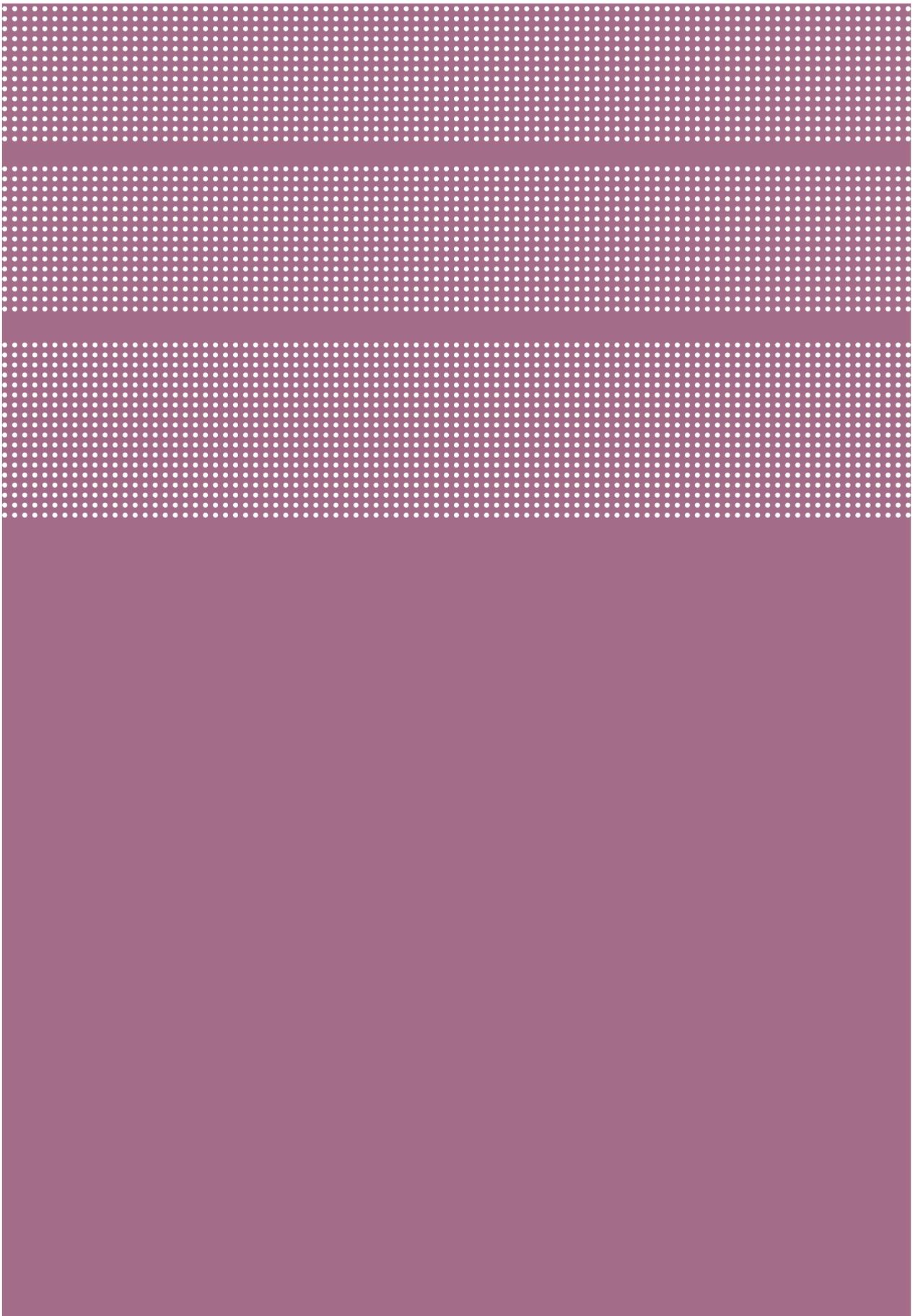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 연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86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60
개발사업 검증제도(안)의 적용 및 실효성 조사 연구: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 작성을 중심으로	22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회랑 구축방안 연구	76
건전한 도시생활기반 정비와 환경보전 방안	42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	23
공간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본공간정보 수시갱신방안	87
공간정보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	88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 방안	89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34
국토발전 미래 어젠다와 정책방향	24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와 문화권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52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III)	35
국토품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자원 활용방안 연구	25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화 전략 연구: 여유로운 가로환경 조성방안	43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II): 도시권 정책의 실천전략	26
기성시까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44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45
네트워크지수를 활용한 국가교통인프라 추진전략 연구: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77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II): 물 배분의 합리성 제고 정책	53
농촌지역의 주거품격 향상을 위한 농촌 주택정책 방안 연구	61
도시 가로의 적주성(livability) 도입방안 연구	46
도시개발과정의 보상평가제도와 개도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62
도시개발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향 연구: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중심으로	47
도시정책 전환기의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운용실태 분석 연구	48
독일의 자연침해 제도와 정책제언	54
미국 감정평가제도의 전개과정과 제도기반에 관한 연구	63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	27
미래국토 개척과 신균형발전 전략	28
미래지향적 통합인프라 개발 방향	78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90
보금자리지구 준치건축물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64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65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II) : 시뮬레이션모형 수정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66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67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29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환경 관리 전략	5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건강장수도시 실태진단 연구	36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68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69
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79
스마트사회에 대응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체계 재정립 방안	91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정보통신기술이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80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7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49
인구저성장시대의 도·농 상생발전 전략 연구	30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의 주거지원방안	71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정책 방향 연구(I)	72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	81
전환기의 SOC 투자정책방향: 도로정책을 중심으로	82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연구: 2008년 이후의 정책을 중심으로	73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83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	56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연구	37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3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38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II)	74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V):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92
커뮤니티 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 연구	50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I)	32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방향 연구	57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사례분석 연구	39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 연구: 한국과 중국 산둥성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84
행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연구	40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공원·녹지 확보전략 기초연구	58

## 연구자명 색인

강미나	61, 67, 71	김태환2	66, 69, 72, 74
강민규	24	김형우	61
강혜경	86, 88	김혜란	77
강호제	37, 38, 90	김혜승	67, 69, 72
고용석	77, 79	김호정	77, 79
구형수	30, 58	김홍식	78, 82, 83
권수연	74	남기찬	26, 28
권영섭	34, 39, 84	류문현	53
권용석	68	류승환	38
김 걸	90	류재영	76, 82, 84
김광익	37, 40	류태희	50
김근용	66, 67	문정호	28, 52
김기선	62	문지희	66
김대종	86	민범식	42, 43
김동근	43	민성희	23, 26, 34, 35
김동주	24, 26, 28, 49	박경현	25
김동한	27, 35	박근현	45, 47, 49
김명수	24	박미선	67, 69, 73
김미정	61, 87, 91	박성진	62
김민철	73, 87, 92	박세훈	32, 49
김상조	42, 44, 48	박은지	92
김선희	27, 36	박정은	42, 43, 44
김성수	42	박정호	22, 23, 24, 27, 28, 38
김승종	64, 65	박종순	54, 55, 56
김영미	74	박종일	83
김영표	61, 72	박종택	30, 91
김원보	62	박천규	66, 67, 74
김은정	36, 39, 55	박태선	55, 57
김재욱	36, 39	배순석	73
김재철	44, 50	배유진	53, 60, 64, 65, 68, 70
김재환	63, 66, 74	백경진	56
김종원	53, 55	백승현	27
김중학	77, 79	변세일	22, 66, 74
김준기	35, 80	변필성	30, 37, 40
김지은	92	서경화	62
김진범	37, 61, 72	서민호	46, 76, 78
김진영	68	서연미	38
김창현	30, 53	서태성	22, 40
김천규	29, 32	성신용	68
김태영	35	성영배	68
김태환	36, 39, 40, 55, 76	성혜정	86, 88

손경환	60, 65	임동순	53
손학기	27, 68, 74	임영태	39, 78, 82, 83, 84
송은서	53	임은선	35, 89
신혜원	32	임지영	27
심우배	55	장은교	25, 31
안홍기	22, 35, 81	장철순	25, 37, 38
양진홍	36, 43, 58	전성애	74
엄기철	56	전성제	65, 66, 74
엄정희	68	정문섭	92
오민준	72	정소양	44, 47
오성호	78, 80	정윤희	45, 48, 49
오지영	87	정지호	56
왕광익	45	정진규	46, 76, 78
유기용	62	정희남	62, 63, 72, 74
유선종	62, 63	조남건	78, 83
유재윤	42, 47	조원철	56
유현지	66	조춘만	92
윤성민	81	조판기	42
윤영모	26, 40	주미진	26
윤윤정	72	지대식	65
이건민	28	진정수	68
이동우	37, 84	차미숙	37, 39, 52, 69, 89
이문숙	56	채미옥	52, 55
이문원	57	천현숙	67, 69, 71, 72
이미영	36, 84	최명섭	35
이백진	29, 78, 80	최병남	86, 88, 91
이상준	28, 29, 32	최 수	64, 67, 68
이수욱	66, 74	최영국	39, 54, 55, 56
이순자	25, 28, 31	최윤경	74
이승복	68, 70	최인태	54
이승욱	50	최지연	56
이영주	89	최지용	53
이왕건	50	하수정	34, 61, 72
이용우	27, 28	한선희	86, 91
이유리	50	한우석	55
이은영	49	한윤정	68
이재용	90	허강무	62
이정민	58	허재완	24
이진희	45, 48	황관석	66, 74
이춘용	77, 78		
이희라	58		



# AFRICA

# AMERICA

# EUROPE

Chapter

# III

## 국제협력사업

---

1. 국제학술교류	100
2. 개도국 대상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108
3.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114

---

## 1. 국제학술교류

국토연구원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국토 관련 연구 및 정책 홍보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기구의 전문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각국의 교수, 연구기관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토 관련 선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 2012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국토연구원은 OECD,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2012년 4월 27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12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정부의 의뢰로 OECD가 발간한 「2012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는 한국 도시구조의 변화를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성장정책과 도시지역에서의 실행방안을 서술하고 있다. 이 행사는 보고서의 발간을 기념하여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최되었으며, 두 세션으로 나누어 '2012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표' 및 '도시경쟁력 강화와 녹색도시활성화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허경욱 주불 OECD 한국 대사,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였으며,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2012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는 OECD 측에서 국토해양부에 보고서를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OECD의 조아킴 올리베이라 마틴스(Joaquim Oliveira Martins) 지역개발정책국장이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기반 개발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산 또따또가 사례를 통해 도시 재활성화의 수단으로서 문화클러스터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이번 OECD 보고서 발간의 의미 및 한국의 미래 도시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이 토론회가 도시경쟁력 및 녹색도시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고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한국형 그린-스마트시티 정책워크숍

국토연구원은 2012년 5월 17~1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의 베트남건축도시농촌연구원(VIAP) 12층 강당에서 한국형 그린-스마트시티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베트남도시계획개발협회(VUPDA), 하노이 건축대학교(HAU)가 공동주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베트남 측(베트남도시계획개발협회장, 하노이 건축대학교 총장 및 부총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측(이우중 학회장, 이상호 U시티위원장, 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측(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조진철 연구위원, 왕광익 책임연구원, 이재용 책임연구원)의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 측 강사진들이 그린-스마트시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모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제공하여 교육성과를 극대화하였다. 주요 강의주제 및 발표자는 △ 한국의 스마트 그린시티 및 U시티(이상호 U시티위원장), △ 스마트 그린시티 구축사례, 제1차 유비

쿼터스종합계획(이재용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국의 스마트시티 법제도(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 △ 한국의 그린시티 구축사례(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다.

그동안 이뤄진 행사는 직접 초청연수를 개최하고 KOICA 등으로부터 위탁연수를 개최한 것이었으나, 이번 워크숍은 현지에서 개최된 최초의 행사로, 초청연수로 다져진 상호 우호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현지에서 그린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그린-스마트시티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건설부 차관(Nguyen thanh Nghi)이 국토연구원 일행을 별도로 초대하였고, 민간기업과 정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린-스마트시티에 대한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하는 한편, 국토연구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 2012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국토연구원은 2012년 5월 22일 제주발전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중국 토지감측규획원(土地勘测规划院)과 공동으로 2012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 박재길 부원장 외 8인, 제주발전연구원 양영오 원장 외 6인, 중국 토지감측규획원 쯔오지엔춘 부원장 외 5인, 저장대학교 박인

성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이 '한국의 국토계획 추진과 발전 전략',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시대별 추진 및 성과',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중국 측에서는 박인성 저장대학교 교수가 '중국 부동산시장의 형성과정과 보장성주택 정책 동향', 야오리 토지감측규획원 부처장이 '중국 건설용지 관리정책', 샤오린 토지감측규획원 고급공정사가 '중국 제3차 토지이용계획의 특징과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중국의 국토정책, 농촌정책, 토지이용계획 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 측 연구진은 중국 보장성주택의 공급계획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중국 측 연구진은 국



토종합계획, 새마을운동 등을 통한 한국의 지역개발사업에 주목하면서 중국에도 이러한 개발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 향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제안하였다.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는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양국의 국토 및 토지정책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과 중국을 번갈아 오가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 도시재생과 콤팩트시티 국제세미나

국토연구원은 국토해양부, OECD와 공동으로 2012년 6월 28일 국토연구원 G20홀에서 도시재생과 Compact City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 및 선진국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Compact City 사례분석을 통해 Compact City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먼저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의 개회사, 김성완 도시재생사업단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이우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기조강연으로 컨퍼런스를 시작하였다. 발표는 '세션1: 도시재생정책'과 '세션2: 도시재생정책으로서 Compact City'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도시재생: 발전과 Compact City', Alven H. Lam 미국 HUD 부장의 '미국도시재생정책 소개', Michael Parkinson 영국 John Moores 대학 교수의 'OECD 국가



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례',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의 '도시재생 방향' 등 네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도시재생정책과 사례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등 거버넌스의 역할과 퍼블릭 하우징을 비

롯한 공공 복지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강명구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장 기반의 도시재생으로, 어느 한 지역이 쇠퇴하더라도 토지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이 이산화되면서 내재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적하였다. 구자훈 교수는 광역경제권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경제기반의 재생에 대해 강조하였다.

세션1 발표를 마친 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운영태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상훈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토론과 발표자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왕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도시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을 통해 접근해야 하며, 고령화, 소득격차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의 점진적 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계획체계, 거버넌스, 상향식(Bottom-up) 재생기법, 공공지원 등 크게 네 가지 축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

안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케이스케 하나키 도쿄대학교 교수의 'Compact City 개발의 환경 인센티브', 켄타로 아카호시 국무교통성 사무관의 '일본의 Compact City 정책', OECD 사무국의 타다시 마츠모토의 '2012, OECD Compact City 보고서의 주요 연구결과', OECD 사무국 이현지의 '한국형 Compact City 정책의 효과 분석방법', 김대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Compact City 정책의 효과분석 방법'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발표를 마친 후 안건혁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황기연 홍익대학교 교수,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의 토론과 발표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콤팩트시티 도시정책이 지역경제에 규모와 방법 측면에서 끼칠 영향 및 그 파급효과와 역 주변 지역의 개발과 지역성장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분석 및 후속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컨퍼런스를 마무리하였다.

## 제1회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 워크숍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 공동주관으로 2012년 9월 12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세계은행본부 13층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시분야 상호 지식교류(Peer-to-Peer Knowledge Sharing in Urban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아래 세계은행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녹색도시, 문화재 보전개발, 도시방재, 주택공급 및 주택금융 등 8개 소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도시분야 지식을 공유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박양호 원장,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이련주 선임연구위원 등 11명이 참석하였고, 세계은행에서는 Zoubida Allaoua FEUD 국장, Abha Joshi-Ghani 섹터장을 비롯한 9명의 도시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된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은 세



계은행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발표 이후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 관계자들과 논의하였다. 앞으로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은 지속적인 사업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UKP를 통한 도시분야 지식교류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도시개발 전략을 세계은행과 공유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통합적 도시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1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2012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건설경제연구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제21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을 전주에서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국토연구원 박재길 부원장 외 7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홍수 원장 외 3인, 일본건설경제연구소 모리시타 노리키 상임이사 외 3인, 토요대학교 안상경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양국의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지속가능한 공생발전, 자유주제를 바탕으로 총 3개의 세션과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1세션에서는 양국의 건설경제 전망을 주제로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이 ‘한국 건설산업 및 경제 전망’, 수나미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이사가 ‘일본 건설산업 전망 및 인프라 유지보수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의 지속가능한 공생발전에서는 배유진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한국 하도급의 공정성 강화’, 수나미 이사가 ‘일본의 중층하도급 구조’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 3세션 자유주제 발표에서는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일 양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 안상경 토요대학교 교수가 ‘한·일 양국의 시행사와 건설기업의 경쟁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일본의 유지보수 투자전망, 건설산업 신수요 창출, 일본 전문 시행사 개발자로서의 역할 등에 대하여 한국 측이 질문하였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각종 보호제도와 일용직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외에도 한국 주택경기,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은 양국의 건설산업 이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에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워크숍 이후에도 수시로 질의서 및 기관 방문을 통해 양국의 건설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 ICG – TEK 2012

ICG-TEK(International Conference on Sharing Geospatial Technology, Experience and Knowledge)는 공간정보기술과 경험, 지식을 교류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2012년 10월 11일~1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측량학회, 한국공간정보학회

가 후원하여 ‘소셜 인터페이스를 위한 공간정보 혁신’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호주 멜버른대학의 Abbas Rajabifard 교수가 공간정보를 통한 정부, 산업,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그리고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간정보 혁신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1세션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등 공간정보 관련 국내의 전문가 5인이 동아시아의 공간정보 혁신과 지원정책에 대해 각각 발제하였다. 이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개도국에서의 공간정보 적용, 공간정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NSDI에 민간부분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둘째 날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칠레, 우루과이, 페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의 공간정보 실무자들이 각국의 NSDI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 각국의 실무자들은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공간정보포럼 및 공간정보 관련 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NSDI와 관련한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국제세미나 참석자들은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사였으며, 만족스러운 결



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국제세미나는 다양한 국가의 공간정보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워크숍 및 포럼 등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작업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 도시화지식플랫폼(UKP) 남아시아지역 워크숍

2012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국토연구원 강당 및 대구 EXCO에서 ‘남아시아 지역의 녹색도시’를 주제로 도시화지식플랫폼(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 UKP) 남아시아지역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지난 9월 국토연구원이 UKP Academy로 지정된 이래 처음 진행되는 제1회 UKP Academy 교육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Abha Joshi-Ghani WBI Director, Ming Zhang South Asia Region Sector Manager 외 25명의 세계은행 임직원과 Kinlay Dorjee 부탄 Thimphu Thromde 시장, Rohan Senevirathne 스리랑카 차관보 등 12명의 고위관료들이 방한하였고, 국토연구원 임직원, EDCF, KOICA,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녹색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발표를 하고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는 ‘남아시아 도시의 녹색도시를 위한 정책



및 사례(참가 6개국), ‘한국의 저탄소도시’, ‘한국의 스마트시티’,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대중교통회랑계획’, ‘녹색성장을 위한 ODA’ 등 1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 후에는 각 도시가 처한 상황에 맞게 어떻게 녹색도시 정책 및 사례를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방안을 모색했다.

## 제23차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EAROPH) 세계대회

국토연구원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 컨벤션센터(EXCO)에서 세계 22개 국가의 도시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아시아 태평양지역개발기구(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lanning and Human Settlements: EAROPH) 세계대회(The 23rd EAROPH World Congress)를 대구광역시와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세계대회에서는 ‘Green City for Human Betterment(시민행복을 위한 녹색도시 구현)’라는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도시민의 행복과 함께 도시성장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목표로 녹색 도시로의 비전에 다가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기조연설에서는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Abha Joshi-Ghani 세계은행연구소(WBI) 국장, Khairiah Talha EAROPH 명예회장이 녹색도시 개발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발전방향에 관해 강연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녹색도시를 위한 다양



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노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의 녹색도시를 위한 노력과 실제 사례들이 자국의 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세계대회와 동시에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이 차기 EAROPH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후 2년간 EAROPH를 이끌게 되었다.

## 활동기반 교통시뮬레이션 적용과 ICT 영향에 관한 국제세미나

2012년 10월 19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Application of Activity-Based Transportation Modeling in Simulation and ICT Impacts’란 주제로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와 이주대학교 TOD센터가 공동주최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교통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수요추정 4단계 모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사결정 및 통행행태 과정 이해를 전제로 새롭게 통행수요를 추정하는 활동기반 교통시뮬레이션 접근방법론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특



히 세미나 기조연설을 맡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대학의 Timmermans 교수는 통행수요 예측을 위해 2000년

대 초 아인트호벤대학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규칙기반의 인지심리학적 모형인 ALBATROSS 모형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세션 1에서는 ‘활동기반 모형을 적용한 실제 활동 시뮬레이션 연구사례’를 주제로 벨기에 하셀트대학 Bellemans 교수가 ‘ICT 환경을 위한 Feathers 시스템’을 발표했고, 네덜란드 아인트호벤대학 Rasouli 연구원은 ‘ALBATROSS의 불확실성 모델’, 조창현 경희대학교 교수는 ‘맥락적 의사결정 기반 분석법(Contextual Analysis)에 의한 개인 공간학습’을 발표하였다.

이후 세션 2에서는 ‘ICT 영향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라는 주제로 히로시마대학의 Zhang이 다차원적 접근방

법을 적용한 ‘활동기반 접근에서 생활접근으로’라는 일본 사례를 발표하였고, 김준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통행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인가’라는 제목으로 통행 시간 가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국가 R&D 우수성과로 선정된 한국에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ICT 최신 사례를 발표하였다.

국제세미나 이후에도 각 연구자들은 향후 활동모형기반의 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토연구원-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 공동워크숍

국토연구원은 2012년 11월 22일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회의실에서 국토연구원과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간의 MOU 체결을 기념하고, 양국 도시분야 간의 연구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한·일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Planning Issues and Policy Responses in a Post-development Era in Japan and Korea’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Ogawa Tomiyoshi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부소장의 축사에 이어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발표주제는 ‘최근 일본 도시구조에 관한 동향과 과제’, ‘일본 도시재생전략의 개요’, 그리고 ‘어린이의 외출에 관한 보호자의 방범안심감을 향상시키는 생활도로 계획’이었으며, 한국 측은 ‘인구변동에 따른 국토공간의 재편과 정책과제’,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각의 발표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양국이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또는 특징적으로 가진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시사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번 공동워크숍은 국토와 도시공간에 대한 주제부



터 가로환경의 정비와 개선에 대한 주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거시적·미시적인 연구발표와 토론을 통해 양국 도시분야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원활한 연구교류와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한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2. 개도국 대상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식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토·지역·도시·교통 분야에서의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대한 해외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베트남도시계획개발협회(VUPDA) 임원진 대상 정책자문 세미나

국토연구원은 2012년 2월 23일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베트남도시계획개발협회(VUPDA) 임원진 3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U-City 및 녹색도시 분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의 U-City 정책과 개선전략, 기후변화와 녹색도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여 베트남의 도시개발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방문단은 U-City 관련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여 U-City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U-City 정책과 녹색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김걸 연구위원이 ‘U-City 정책과 개선전략’을, 왕광익 책임연구원이 ‘기후변화와 녹색도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당일 현장학습으로 송도신도시(IFEZ)와 U-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고, 동



단 U-City정보센터와 성남시 도시통합운영센터 등 한국의 U-City 운영 및 개발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강의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토대로 현장에 적용한 실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베트남 고위급 대상 한국의 토지법 제도 정책자문

국토연구원은 2012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정관계 고위급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토지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 주제는 한국의 토지법제도 일반, 토지이용계획, 토지수용(보상), 토지자금 운용, 이주대책, 토지평가, 지하공간개발, 토지관리 조직 내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의 외 프로그램으로는 제주도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연구원, 국토해양부,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평가협회 방문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진행되었다.

방문단은 한국의 토지 관련 전반적인 법제도와 토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들으면서 베트남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토지이용방안을 모색하고, 토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의 토지관리시스템과 토지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한 강의 및 세미나와 연계된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의 역할과 수행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적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및 기관장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 인도 국립도시경영연구소(NIUM) 설립자문

국토연구원은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에서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는 현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안드라 프라데시 개발프로젝트(ADMDP)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은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국립도시경영연구소(NIUM)를 설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의 경험과 사례전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인도 국립도시문제연구소에서는 인도 건설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개발 분야 연수를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이를 준비하기 위해 업무협의회도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및 조진철 연구위원, 이의진 연구원이 정책자문에 참석했으며, 정책자문을 통해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와 세계은행 인도사무소는 향후 설립할 인도 국립도시경영 연구소에 대해 국토연구원과 지속가능한 협력구조 방안



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도 정부 공무원 대상 초빙 연구연수를 국토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도시계획 부문 경험을 보다 많은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베트남 정부 대표단 대상 국토·토지분야 국유재산 관리 정책자문

국토연구원은 2012년 6월 5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Nguyen Huu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을 포함한 베트남 공무원 대표단을 대상으로 국토·토지분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국토연구원 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국토자산의 현재 가치와 자산의 분류방법, 자산의 구성, 관리방법과 앞으로의 국토자산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였

고 김승중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토지수용과 보상정책의 배경, 수용과 보상에 따른 현행 조건, 법적 절차,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의를 마친 후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의 자산관리 모델, 토지수용, 보상절차 등을 베트남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대표단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베트남

의 국토·토지자산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가치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정책자문을 통해서 배운 한국의 국토·자산관리 정책과 경험이 베트남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 중남미 장관급 방한단 내원 및 정책자문

국토연구원은 2012년 7월 3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중남미 장관급 방한단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에 관심이 있는 중남미 국가의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국가발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2012년 국가개발 미래 비전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토개발 사례와 우수성을 소개하여 중남미 국가에 각종 사업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정책자문에서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계획연구 본부장은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 한국의 경제·국토개발전략, 시대별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지역개발의 최근 이슈에 대해 소개하였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파테말라와 에콰도르의 경제개발 정책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에 한국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정책방



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남미 고위급 대표단은 이번 강의가 한국의 주요 개발정책과 노하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으며, 국토연구원이 지난 33년간 축적해온 국토·인프라 개발 연구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해 활발한 지식교류협력 활동을 해온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 베트남 호치민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워크숍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2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토연구원과 MOU를 맺고 있는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VUPDA)의 요청으로 베트남도시계

획개발협회와 호치민시전략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호치민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국의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전수 및 건설링

을 진행했다.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은 호치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보네트워크 구축 구상 및 관련 기구 운영에 대해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하고, 호치민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제안 및 국토연구원과의 협력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호치민시전략연구원 관계자는 사공호상 소장의 제안에 따라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 적극 추진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인력 초청연수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카자흐스탄 정부 방문단 내원 및 정책자문

국토연구원은 2012년 7월 19일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카자흐스탄 주택·시설·건설청의 요청으로 한국의 주택정책 및 신도시개발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카자흐스탄 주택·시설·건설청 및 유관기관 소속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한국의 신도시 개발과 서민주택 정책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카자흐스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은 카자흐스탄 대표단에게 한국형 신도시 개발의 배경 및 추진과정 변화, 한국형 신도시의 추진내용, 한국형 신도시 정책의 추진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강미나 연구위원은 한국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저소득층의 개념과 주거문제,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분석 및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한 전략에 대해 소개하였다.

카자흐스탄 대표단은 이번 정책자문을 통해 한국의



서민주택 보급과 도시개발 경험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자국의 신도시 개발, 서민주택 보급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베트남 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GDLA) 및 도시계획개발협회와 업무협의회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베트남 토지행정청(GDLA) 및 도시계획개발협회와 업무협

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KOICA에서 ODA사업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하

여 베트남 토지행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보시스템(LMIS)의 구축계획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은 한국의 토지정보화에 대한 경험과 GIS기술을 활용하여 베트남 전국에 지속가능한 통합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중장기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전략 및 로드맵 수립,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전수 및 교육 등 추가 필요사항을 토의하였다.

한편 베트남도시계획개발협회와 진행한 업무협의회에서 베트남 건설부는 한국의 U-City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국토연구원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였다. 또한 베트남 건설부가 추진할 계획



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롱베이 개발계획에 관한 세미나 참석 요청 및 협력을 요청하였다.

## 세계은행 수자원 교통인프라에 대한 정책자문

국토연구원은 2012년 10월 10일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세계은행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의 교통수자원정보통신부(Transport, Water, ICT Department) 국장인 Jose Luis Irigoyen과 수자원 교통인프라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Jose 국장은 추진 중인 ① 저탄소배출 대중교통, ② 도로안정성, ③ 개선된 도시교통계획, 밀도 증대 및 에너지효율의 효율성 증가가 결합된 주거 및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된 도시, ④ 규제, 기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활성화, ⑤ 정책수립의 산업별 교차통합 등의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참석자들도 한국의 녹색도시성장과 저탄소배출 교통시스템 및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와 연구를 소개하면서 Jose 국장과 함께 세계은행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정책자문을 통해 세계은행에서 추진하는 최신 프로젝트의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국토연구원의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던 동시에 국토연구원과 세계은행이 향후 국제개발협력연구기관으로서 상호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국토연구원의 해외개발 프로젝트



진출 기회와 질적인 역량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미주개발은행(IDB) 대표단 내원 및 간담회

국토연구원은 2012년 10월 25일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 IDB Ana Maria Rodriguez 개발협력국장, Luiz Ros OFM 국장, Antonio Garcia 경쟁력혁신팀 선임전문가로 구성된 미주개발은행(IDB)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주개발은행 대표단은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2 IDB-KSP 중남미 2개 도시 IO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사업’의 진행상황을 논의하고 주요 관심사인 지속가능성장도시에 대해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토연구원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주요 역할과 기능, 2012년도 주요 사업 실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IDB와 국토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SP)인 ‘지속가능 신흥도시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였고, 대표단은 도시통합관제센터(Integrated Operation Control Center: IOCC)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



였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할 예정인 IOCC 설계, 브라질 공무원 초빙 사업계획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Ana 국장은 IDB가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금융·비금융프로그램과 프로젝트, 개발성과 평가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IDB가 추진하는 중남미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연구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도시연합(Cities Alliance) 방문단 내원 및 정책자문

국토연구원은 2012년 11월 5일 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에서 도시연합(Cities Alliance) 방문단과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도시연합의 내원과 정책자문은 도시연합의 주요 활동 및 사업을 소개하고, 도시슬럼화 등의 도시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국토연구원은 기관 소개 및 한국의 서민주택 공급과 주택금융에 대해 소개하였다.

도시연합의 William Cobbett 매니저는 유례없는 속도로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나라로 한국을 강조했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 성공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시화 및 도시개발 경험 공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토연구원의 강점인 주거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자문을 통해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도시연합은 도시, 서민주택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도시연합의 동남아시아지역 프로젝트 확장 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시연합의 자금유입을 통한 도시분야 국제교류협력활동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녹색도시분야에서 지식교류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 3.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도상국의 중견 공무원이나 연수생을 위해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은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 축적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정책사례를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는 '연수프로그램' 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해외 개발협력사업 실무자들에게 관련 지식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자체 및 위탁연수로 실시되며 강의, 현장학습, 산업시찰, 워크숍, 어드바이저 미팅, 정책보고서 작성, 문화 및 친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개발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MDB 조달 사업 참여 제안서 작성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1 연수프로그램

#####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 국토·지역개발계획 및 정책과정

기간: 2012. 4. 23~6. 1

참석: 개발도상국 7개국 12명

네팔(Tara Prasad Pandey 물적계획 및 공공사업부 차관, Bhubneshwar Prasad Deo 물적계획 및 공공사업부 선임책임엔지니어), 몽골(Bayarjargal Ganbayar 지적측량부 총책임자, Gongor Uranbaigal 도시계획디자인연구소 전문가), 베트남(Viet Vu Hong VIAP 계획부 총책임자, Nguyen Minh Duc 도시관리 및 개발부 전문가), 인도네시아(Dodi Nurdian 국가개발계획부 수지원 및 관개부 전문가), 조지아(Nino Gventsadze 도시계획부 팀장, Tamar Frangishvili 국제협력부 EU프로그램조정 및 협력팀장), 카자흐스탄(Ainar Ospanova 건설주택시설행 전문가, Turebek Saubayevich Zhuntrybayev 행정사법부 건설주택시설행 국장)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는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계획과 정책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경험하여 참여국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아시아 각 국가와 국토연구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수요자 중심의 자기 주도형 연구연수로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과 사례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수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수과정 동안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고, 강의와 당일 현장학습 및 산업시찰을 바탕으로 연구지도를 받으면서 각국 정책에 맞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연수생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강의 및 토론

의 기본 주제를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주제는 국토개발 개관, 농촌지역 개발정책, 지역개발정책, 인프라개발정책, 수자원관리, 국가공간정보정책, 공적개발원조 등으로 세분화하여 총 15개의 정규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수생의 관심주제를 조사한 후 토지정보시스템, 농촌도로개발정책, 도시개발정책 등 3개의 선택식 강의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현장견학은 강의 및 토론을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토 및 도시개발의 실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현장견학은 당일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기관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산업시찰의 경우 총 두 차례에 걸친 2박 3일간의 지방 산업시찰을 통

해 교통인프라, 자연환경, 도시 및 농촌생활 등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드바이저 미팅은 연수생들의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국토연구원 관련 연구자(책임급 이상)를 지도교수로 선정하여 Planning & Policy Report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들은 자국의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보고서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수기간 동안 총 4회의어드바이저 미팅을 진행하였다.



###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VUPDA) 그린·스마트시티 교육 워크숍

기간: 2012. 5. 17~5. 18

참석: 베트남 도시계획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교수 등

Tran Ngoc Chinh(도시계획개발협회장), 건설부 전 차관 및 부회장, 하노이건축대학교 총장 및 부총장 외 교수 및 학생, 180여 명의 건설부 및 지자체 대표, 하노이 건축도시농촌연구원 연구진 등

베트남 VUPDA 그린·스마트시티 교육 워크숍은 기존의 자체·위탁연수와는 달리 현지에서 직접 개최한 최초의 현지 교육 워크숍이다. 그동안 초청연수를 통해 다져진 국토연구원과 베트남도시계획개발협회 간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현지에서 그린·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 건축도시농촌연구원(VIAP) 12층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한국형 그린·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도시계획개발협회(VUPDA), 하노이건축대학교(HAU)와 공동으로 베트남의 도시계획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모델 및 경험 전수 교육을 실시했으며, 모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발급함

으로써 이번 교육 워크숍의 참가 의미를 극대화하였다.

강의 프로그램은 한국의 그린·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법제도, 그린시티, U시티, 도시계획 등 총 5개의 강의로 구성되었고, 참가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향후 그린·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베트남의 도시계획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형 모델 및 경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국의 그린·스마트시티 정책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의 사례를 베트남의 신도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개발 수요 발굴 및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

이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민간기업과 베트남 정부의 논의를 가시화하는 데 이번



워크숍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민관협력 해외도 시개발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었다.



##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연수

기간: 2012. 5. 7~5. 14

참석: 네팔 고위급 정책결정자 4명

Tana Gautam 문화부 차관, Rajendra Bahudur Thapa 문화부 국장, Temba Shera 문화부 과장, Bharat Mani Subedi 고고학부 차장

KOICA에서 위탁하여 진행한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연수는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비전을 수립하는 동시에, 한국의 도시계획 정책 및 역사지역 보존제도를 소개하여 네팔 룸비니지역 계획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 연수는 강의 32%, 당일 현장학습 및 산업시

찰 43%, 워크숍 10%, 문화 및 친교 15%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토연구원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수생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해 소개하고, 연수와 과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강의와 현장견학 학습, 산업시찰 등을 통해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강의로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정책과 과제,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 토지정책, 주택정책, 고고학 개요 및 보존사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 정책, 문화보전정책의 변화흐름 및 사례, 국토인프라정책 등 총 8개의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연수생들이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도 서울을 탐방함으로써 서울의 구조 및 개발 진행상황을

이해하고, 서울 내 역사문화유적지 견학을 통해 도심의 전통문화 유적지 보호에 대해 연수생들이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고속도로 및 국도를 이용한 2박 3일간의 산업시찰을 통해 교통인프라, 자연환경, 도시 및 농촌생활 등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연수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양동마을과 불국사 및 석굴암 방문은 류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과 관련하여 연수생들에게 유적지 관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KOICA 위탁연수: 아프리카 국토·도시개발 과정

기간: 2012. 6. 4~6. 20

참석: 아프리카 8개국 19명

에티오피아(Sahle Fersha Dadiye Addis Ababa시정부 부국장, Muhammed Hamda Wako Oromia 도시계획원 부국장), 케냐(Nyadesa Kenneth Omondi 지방정부부 선임정책수립가, Philip Osoro Amawata 지방정부부 건축견적감독사, Mwaura Samuel Mwangi Nakuru 시정부 엔지니어), 모로코(Nadia Aboutaib 주택도시계획 및 시정책부 도시서비스정책부장, Hasna Meftaj 주택주거지역계획 및 도시정책부 행정관, Omar Marsli 주택부 선임행정관), 모잠비크(Juvenalia Ernesto Mendiata 주행정부 지방행정개발관리부국장, Rui Francisco Costa 주택건설금융사 회장, Zefanias Fernando Chitsungo 공공시설 및 주택부 국장), 나이지리아(Edna Deimi Tobi 연방토지주택 및 도시개발부 부국장, Ahmad Tijjani Isa Kano주 도심개발청 프로젝트 건축사, Unwana Akpan Idut Akwa Ibom주 시정 주거계획부 선임정책관), 시에라리온(Sahr Monyewah Morsay 토지부 정책관, 튀니지(Radhia Ben Aziza 지역개발 및 계획부 인프라관리 주임엔지니어, Faical Mansri 지역개발 및 계획부 인프라 선임엔지니어, Badreddine Rabaiya 지역개발 및 계획부 관리 및 평가국 주임엔지니어), 우간다(Godwin Othieno Kampalt 행정수도청 건설계획관)

KOICA에서 위탁하여 진행한 아프리카 국토·도시개발 과정은 한국의 국토개발과 도시형성 정책 및 경험을 아프리카 국토분야 중견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전수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3주간 실시되었다.

연수생들은 국토개발, 도시개발, 지역개발, 교통 및 인프라, 수자원 관리, 저소득층 주거정책, 토지정책, 새마을운동 정책, GIS정책 등 총 9개 분야의 강의를 통해 국토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Country Report

발표를 통해 연수기간 동안 해당국가에 적용 가능한 Action Plan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8개 국가의 Country Report 중 모잠비크에서 발표한 국별 보고서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in Mozambique: Challenges'가 문제해결을 위한 모잠비크의 기본적인 철학과 원칙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우수 보고서로 선정되었다.

또한 2박 3일간 세종시, 수자원공사, 새만금지구, 전주 한옥마을, 여수 Expo 등을 시찰함으로써 국토 및 도

시개발 현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학습 및 산업시찰은 해당기관에서 브리핑 형식으로 프

리젠테이션을 먼저 진행하고 연수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관련 시설을 시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중간관리자급 초청연수

기간: 2012. 11. 2~11. 9

참석: 네팔 문화부 공무원 10명

Karma Sangbo Sherpa(룸비니개발 트러스트 부의장), Bishnu Raj Karki(문화, 관광 및 민간항공부 차관보(국장)), Rajendra Sigdel(문화, 관광 및 민간항공부 차관), Khyam Bahadur Thapa(문화, 관광 및 민간항공부 차관), Madan Raj Mishra(문화, 관광 및 민간항공부 차관), Saraswati Singh(Hanumandhoka Durbar 박물관 발전의회 국장), Aruna Nakarmi(문화재 보호 및 궁전관리 사무소 실장), Gopi Lal Nepal(문화, 관광 및 민간항공부 법무관), Narendra Paudel(문화, 관광 및 민간항공부 담당 사무관), Prabin Poudyal(문화, 관광 및 민간항공부 담당 사무관)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중간관리자급 초청연수는 2012년 5월 KOICA에서 위탁하여 실시한 고위급 네팔 공무원 초청연수에 이어 중간급 공무원들을 초청한 두번째 위탁연수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고고학 개요 및 보존사례’, ‘문화보존정책 변화흐름 및 사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정책과 과제’, ‘한국의 토지관리정책’, ‘한국의 주택정책’, ‘한국의 국토인프라정책’, ‘한국의 지역계획 및 녹색도시계획’ 등 한국의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주제로 총 7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자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과 관련 시설을 방문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서울의 도시형태 및 구조, 도심의 유적지 보호 현장 등 사례지구를 돌아보고 운영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초청연수를 통해 한국의 도시계획 및 제도, 문화재 보전정책,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 고고학 등에 관한 경험을 전수하고, 관련 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네팔 룸비니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자문 연수: 토지수용과 재정착

기간: 2012. 3. 4~3. 10

참석: 몽골 12명

Bold Tsengel(도로·교통·건설 및 도시개발부 차관), Navaansamdan Ganbyamba(국회의원), Batblieg Chinzorig(ADB 책임자), Dorjgotov Munkhbaatar(MRTCUD 도시개발 및 토지정책부 사무국장), Erdenbat Erdenesuren(국회안보외교정책위원회 자문관), Radnaabazar Gankhuyag(토지정책 및 도시개발부 국장), Sanjperlee Enkhtsetseg(국회법무서기 법률자문관), Badamjav Bayarmaa(국회 환경·식품·농업위원회 직원), Chandag Bat-erdene(사법내무부 입법정책부 전문가), Togtokh Soyolkhuu(울란바토르시 토지관리 및 계획부 상급전문가), Tsevegjav Erdenetsetseg(울란바토르시 도시개발부 건설 및 계획부 건축가), Gombodorj Bolormaa(MRTCUD 도시개발 및 토지정책부 전문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지원으로 몽골 토지수용, 재정착 및 토지관리 법령과 제도개선 사업을 위해 몽골 도로교통건설도시계획부(Ministry of Road,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Urban Planning)가 주축이 된 고위급 정책조사단을 대상으로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자문 연수과정이 실시되었다. 이번 정책자문 과정은 국토연구원 최초로 국제 금융기구인 ADB에서 직접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며, Navaansamdan Ganbyamba 국회의원 및 Bold Tsengel MRTCUD 차관을 포함하여 울란바타르시, 몽골 국회 상임위, 토지관리청 및 ADB 프로젝트 책임자로 구성된 몽골 조사단은 강의와 유관기관 방문 및 현장답사로 구성된 5일간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몽골 조사단은 향후 자국의 토지 관련 정책 개선과 발

전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정책 및 제도·발전과 관련된 주제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주요 강의 주제는 ‘토지수용 및 재정착 관련 정책과 법제’, ‘한국의 토지 및 도시개발 정책’, ‘토지관리 제도 및 시스템’, ‘토지가치 평가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안양 U통합관제센터, 한국감정평가협회, LH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한국의 토지관리 및 계획수립 현장을 견학하고 토지정책에 관련된 기관을 방문했다.

연수를 통해 조사단은 한국의 토지정책과 토지관리 및 운영, 특히 수용과 이주에 관해 몽골에 적용 가능한 방안과 향후 협력을 논의하는 귀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사단은 국토연구원, 국토해양부와 토지정책, 국토정보시스템, 공간정보인프라, 국토개발계획, 탈 집



중화와 위성도시개발, 주택정책, 역량개발 등의 분야에 대해 향후 밀접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고, 구체적인 협

력사업 추진 시에 KOICA, 몽골 정부, 그리고 필요한 경우 ADB의 재정지원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베트남 건설공무원교육원(AMC),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연수과정

기간: 2012. 8. 20~8. 31

참석: 베트남 고위공무원 22명

Bui Duc Hung(AMC 의장), Le Cao Tuan(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 중앙위원회 부국장), Nguyen Van Binh(베트남전국건축근로자연합 의장), Tran Quoc Thai(국무총리실 부서기), Pham Cong Thanh(Thai Binh 건설부 국장), Nguyen Thai Binh(Phu Yen 건설부 국장), Nguyen Tien Nghia(Yen Bai 건설부 부국장), Huynh Thanh Canh(Nghe An 건설부 부국장), Cao Van Ket(Quang Tri 건설부 부국장), Nguyen Thanh Lam(Dong Nai 건설부 부국장), Huynh Quoc Ca(Bac Lieu 건설부 부국장), Le Quang Trung(Lam Dong 건설부 부국장), Vu Minh Thanh(Ak lac 건설부 부국장), Dam Van Huan(하노이시 Long Bien 인민위원회 도시관리팀 팀장), Pham Huu Tao(호치민시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 중앙위원회실장), Vu Van Huan(인사조직부서 부장), Chu Thi Yen(연수연구국제관계원 부원장), Dao Thi Huong Tra(건축도시지역계획 건축계획제2센터 부센터장), Hoang Thi Toi(주택관리 및 부동산시장국 행정부팀장), Nguyen Cong Nguyen(계획 및 재정부 부서장), Tran Thi Dung(도시개발국행정실 부실장), Nguyen Tuan Anh(건축건설계획부 실무관)

베트남 AMC,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연수과정은 베트남의 건설도시공무원연수기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택 및 부동산 개발계획, 정책수단, GIS 및 주택 금융에 대해 소개하고, 연수를 통해 베트남의 주택 및 부동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강의주제는 한국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정

책 및 부동산 개발 총론, 주택 및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정책 수단, 주택 및 부동산 개발을 위한 GIS, 주택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운영, 주택금융 등 한국의 주택정책 및 행정부서의 역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6개의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와 관련된 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행정도시의 현황, 수자원관리, 산업 발전의 역사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강의를 바탕으로 한 지식과 현장에서의 정책반영을 동시에 경험하는 일정이 진행되었

다. 연수 마지막 날 실시한 워크숍에서는 연수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베트남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베트남 AMC,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 위탁 교육연수

기간: 2012. 12. 13~12. 14

참석: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등 9명

Pham Thi Huyen(건설부 공무원), Trinh Thi Loan(건설부 공무원), Doan Thi Thanh(건설부 실장), Ngo Thi Khanh Van(건설부 공무원), Nguyen Le Duc(건설부 공무원), Hoang Phuong(건설부 공무원), Dang Thi Hai Yen(건설부 공무원), Nguyen Thi Thanh Huyen(건설부 공무원), Nguyen Thi Thu Nhan(건설공무원교육원 부소장)

베트남 AMC,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 위탁 교육연수는 베트남 건설부 산하 공무원 9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고위 공무원 연수를 통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 도시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강의 주제는 한국의 대중교통,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개발 계획 등의 3개 강의로 구성되었으며, 단기 연수임을 감안해 베트남의 국토 및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내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판교 신도시 및 청계천 방문 등의 현장학습과 산업시찰을 통해 강의를 바탕으로 한 지식과 현장에서의 정책반영을 동시에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다.

이틀간 진행된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연수는 양 기관

이 향후 공동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지역개발, 교통 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상호 교류 및 사업진출 확대 가능성을 마련한 기회가 되었다고 참가자들은 평가했다. 또한 국토연구원과 AMC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연수를 통해 주택 및 부동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성해가기로 약속했다.



## 미얀마 고위급 공무원 국토·도시계획 정책 초청연수

기간: 2012. 10. 28~11. 3

참석: 미얀마 고위공무원 12명

Khin San Yee(국가계획경제개발부 차관), Maung Maung Tint(국가계획경제개발부 국장), Kyaw Soe Thein(국가계획경제개발부 해외경제협력과장), Myint Myint Wai(국가계획경제개발부 계획과장), Aung Khine(국가계획경제개발부 계획과장), Kyaw Aye Thein(국가계획경제개발부 계획과장), Tin Thein(국가계획경제개발부 계획과장), Thein Aung(국가계획경제개발부 계획과 사무관), Ze Ya(국가계획경제개발부 계획과 사무관), Khin Hla Hla(국가계획경제개발부 계획과 사무관), Kyaw Than(국가계획경제개발부 계획과 사무관), Hla Hla Mon(국가계획경제개발부 계획과 사무관)

미얀마 고위급 공무원 국토·도시계획 정책 초청연수는 미얀마의 국가 경제개발 계획부의 차관을 비롯해 국장 및 과장급 등 고위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으로, 국토해양부와 국내 미얀마 수주지원 및 물산업 개척단 파견(6. 17~22)에 대한 후속조치이자 미얀마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의 도시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실시된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개발계획, 토지정책 및 주택금융, 수자원, 교통 및 인프라 정책 등 총 7개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국토개발 및 관리분야에 대한 세미나와 현장견학 및 산업시찰 등으로 구성되었다.

미얀마 고위 공무원 방문단은 연수를 통해서 한국의 국토개발 및 관리분야의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접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도시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국토연구원과 미얀마 국가계획경제개발부의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었으며 향후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지역개발,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양국의 상호 교류 및 국내 기업의 미얀마 국토개발 사업의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 2 국내 교육프로그램

### 글로벌개발협력 아카데미

기간: 2012. 11. 6, 11. 8

참석: 국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해외개발협력 부서 실무자 20명

김병철(한국플랜트산업협회 팀장), 이선욱(LH공사 과장), 김혜경(시공테크 선임) 등 20명

글로벌개발협력 아카데미는 국제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의 발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해외개발협력 관련 부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Proposal 작성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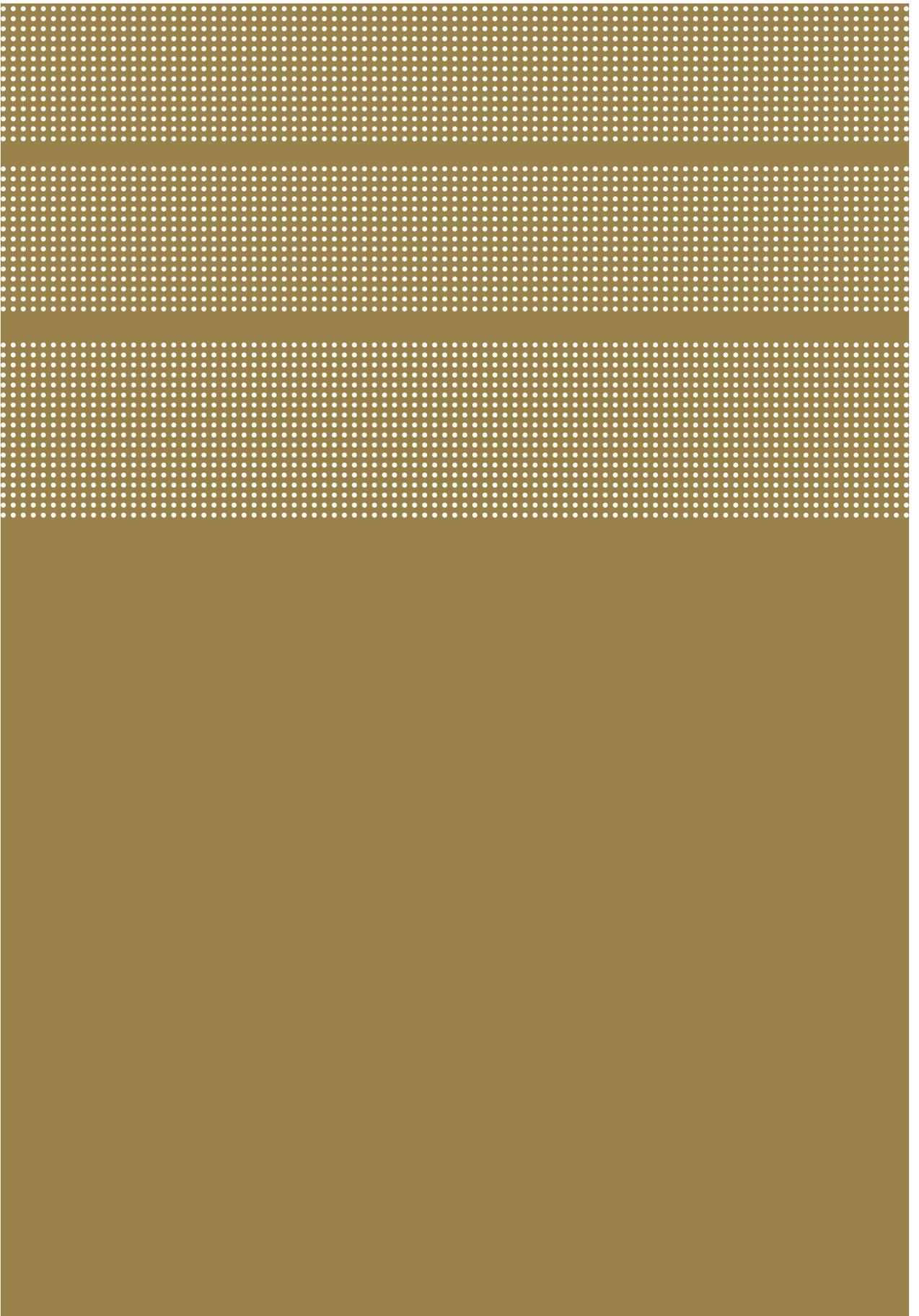
이 교육은 1일차 강의와 2일차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최성수 교수, 합미자 ABC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전 ADB 프로젝트 담당수석), 이상의 동일엔지니어링 부회장, 박정배 삼보기술단 전무 및 조형연 다산건설턴트 부사장이 진행한 총 5개 강의를 있었다. 2일차에는 수강생 전원과 강사 3인의 맞춤형 실습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 전원이 개인 PC를 사용하여 1일차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MDB 컨설턴트 등록, 정보 수집, Proposal 작성을 실습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강사들은 MDB 사업 실패와 성공 사례, 주의 사

항 등도 자세하게 전달하였으며, 수강생들이 겪는 해외 사업 준비의 어려운 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통해서 수강생들은 국제개발은행의 프로젝트 발주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사업 발주 시스템의 이해와 정보 수집 분야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향후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수강생과 강사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해외진출을 위해 건설, 시공, 용역, 컨설팅 분야의 MDB 발주사업 참여 실무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Chapter

# IV

## 연구지원활동

---

1. 연구지원활동	126
2. 연구 관련 주요 행사 · 교육	138

---

# 1. 연구지원활동

## ‘2012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개최

국토연구원 원우회와 기독교신우회, 가톨릭교우회, 국불회 등 동호회는 2012년 1월 18일 강당에서 ‘2012 국토연구원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기증한 도서, 의류, 아동용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스포츠용품부터 회화작품, 수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수백여 점에 달하는 다양한 기증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별 기증품을 경매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국토연구원 직원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증품 구매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친 이번 바자회에서는 100만 원에 가까운 수익금을 거두었



다. 수익금 전액 및 기증품들은 관내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되었다.

## ‘국토연구원-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협력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2년 3월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14층 회의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택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전 원장, 김근용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유재운 전 기획경영본부장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종대 사장, 태용렬 부사장, 차경만 주택금융연구소장 등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연구사업 개발 및 추진, 인력 교류 및 현안과제에 대한 자문 등 상호 전문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 ‘2012년 전 직원 한마음 연찬회’ 개최

‘2012년 국토연구원 전 직원 한마음 연찬회’가 2012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찬회는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하는 좋은 직장문화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연찬회에서 첫째 날에는 섬진강 수변길, 최 참판댁, 청매실 농원 견학, 전 직원의 화합을 도모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하였고, 둘째 날에는 순천만 갈대숲을 견학하였다.

특히 청매실 농원 견학 후에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된 홍쌍리 여사의 특강을 듣기도 하였다.

이어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열린 슈퍼스타-KRIHS 대회에서는 각 본부별로 선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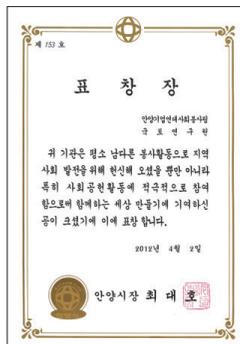
직원들이 콩트와 노래, 춤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돋웠다. 직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웃고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사회봉사활동 기여 공로 ‘안양시장 표창장’ 수상

국토연구원이 2012년 4월 2일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안양시장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국토연구원은 2006년부터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이번엔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안양시 소재 9개 기업이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연대사회공헌팀에 소속되어 김장김치 나누기와 연탄 배달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안양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청소와 식사 보조를 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국토연구원의 봉사활동은 지난해 제18회 자원봉사대축제 시상식에서 거버넌스상을 수상하며 인정



받은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2년 4월 6일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는 2011년 12월 발표한 국무총리실 주관 범부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그로 인해 재해의 일상화, 피해양상의 대형화가 초래됨으로써 대응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범부처 차원에서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는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도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방재에 관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심우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센터장을 맡았다.

개소식 행사에는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 박재길 부



원장, 김종원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장, 유재윤 기획경영본부장 등과 국토해양부 한만희 제1차관, 정병운 국토정책국장,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 최입락 도시정책과장, 송재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 위원장 및 허수용 국무총리실 재난관리개선 TF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 ‘2011년도 연구성과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2년 5월 14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2011년도 연구성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창조적 연구를 선도하고, 관련 정책연구의 성과를 창출·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한 연구과제를 시상하기 위해 매년 연구성과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연구보고서’, ‘정부정책기여’, ‘산·학·연 협동연구’의 3개 부문으로 시상이 거행되었다.

이에 따라 최우수연구상 1개 과제, 우수연구상 3개 과제,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한 연구과제에 대해 최우수정책기여상 1개 과제와 우수정책기여상 1개 과제, 산·학·연 기관 간 협력적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제시한 연구과제에 대해 최우수산·학·연협동연구상 1개 과제와 우수산·학·연협동연구상 1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우수연구상 수상자

포상	과제명	연구책임자
최우수상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	서민호
우수상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손학기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방안 연구	박천규
	개발행위허가제 개편에 따른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세훈

### 정책기여상 수상자

포상	과제명	연구책임자
최우수상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 수립을 위한 연구	고용석
우수상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II)	심우배

### 산·학·연 협동연구상 수상자

포상	과제명	연구책임자
최우수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반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강호제
우수상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도로부문) 개선방안 연구	김호정

## ‘건설교통 R&D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2년 5월 11일 엘타워에서 ‘국가 건설교통 R&D의 발전방향 제고’를 위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국가 건설교통 R&D 추진 과제 및 신성장동력 사업과제 발굴을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인력교류 및 발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연구원을 포함한 4개 기관은 건설교통 추진과제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는 등 정기적으로 모임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 ‘한-러 극동포럼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2년 5월 2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한-러 극동포럼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이병욱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정택 한국APEC학회장이 협약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 등 협약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를 비롯한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2012년 7월에 한-러

극동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발전을 도모해나가고 있다.



### ‘2011 종합청렴도 1위 기념패’ 수상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2012년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청렴선도클럽(Clean Champion Club: CC Club) 창립식에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수여하는 2011년 종합청렴도 1위 기념패를 받았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패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기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타 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기념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청렴선도클럽 창립식은 청렴 우수기관 및 우수



청렴시책을 발굴·확산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직유관단체 부문(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 1위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제13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국토연구원은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제13회 전국지리올림피아드’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

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타국과 상호 협력하는 자세를 함양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2년 5월 23일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동상 이상 입상자 399명을 대상으로 6월 9일 전국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전국대회

결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 44명이 가려졌다.

시상식은 6월 16일 서울대학교 동원생활관에서 개최되었다.

대상 수상자는 김지형(대전외고), 금상 수상자는 우경민(진주고), 배지용(수원외고), 김예원(수원외고), 은상 수상자는 홍순호(대일외고), 박현호(효원고), 전세진(공주대부고), 방승현(계양고), 김세경(수원외고), 최규문(공주대부고), 문병민(평택고), 박수현(전북여고), 이좌성(대전외고), 박종민(대원외고) 등이다.



## ‘국토연구원-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MOU’ 체결

국토연구원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APEC학회,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극동경제개발센터와 공동주관으로 2012년 7월 19일~20일 양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극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 정일호 기획경영본부장,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및 이윤호 경제통상대사, 이욱헌 유럽국장, 이양구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김학소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장,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한-러 양국 간 물류시스템, 수질환경정책 및 환동해권 개발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물류, 환경, 지역개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으며,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간 협력의제를 발굴하였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2012년 7월 19일 러시아 극동연



방대학교와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과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교류 및 협력강화, 국토 관련 공동연구, 인적자원 교류 등 공동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2년 8월 8일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 후에는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계획평가

제도 설명회’를 열어,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을 맡게 된 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제도의 취지와 평가대상, 평가절차 등에 대해 설

명하였다.

국토계획평가센터는 앞으로 계획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고 국토계획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번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개소는 국토기본법 및 시행령,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 아카데미’ 로 지정

국토연구원은 2012년 9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과 도시화지식플랫폼 아카데미(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Academy: UKP Academy)의 지정,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세계은행이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을 교육·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시화지식플랫폼 아카데미는 향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교육하고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 프로젝트에 기술을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차관 및 국장급)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교육 후에는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 수료증을 발급한다.

1차 교육은 세계은행의 본부 및 남아시아 지역 8개 국가(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40여 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6일~19일까지 실시되었다.



또한 이번 체결식에서는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 도시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인도·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이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며, 서민주택정책 및 개발 등의 기술지원을 세계은행과 함께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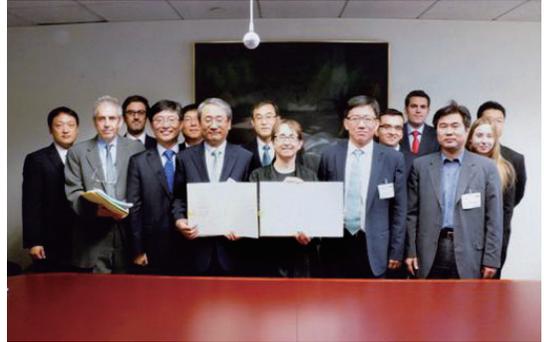
### ‘국토연구원-IDB MOU’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2년 9월 13일 IDB 본부에서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와의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개발 프로젝트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이련주 선임연구위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조진철 연구위원과 IDB측의 Bernardo Guillamon Manager(Office of Outreach and Partnerships), 박충근 국장(기획재정부), 최성규 부부장(수출입은행)이 참석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실무회의에서는 양 기관 간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국토연구원이 도시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 공유하였다.



### ‘국토연구원-조지워싱턴대학교 MOU’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2년 9월 13일 St. Regist 호텔에서 조지워싱턴대학교와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개발 프로젝트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원장,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채미옥 문화국토연구센터장, 강미나 연구위원, 한우석 책임연구위원, 왕광익 책임연구위원, 김승중 책임연구위원, 이련주 선임연구위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조진철 연구위원, 김상무 연구위원과 조지워싱턴대학교의 Steve Lerman 교무처장, John I. Carruthers 교수가 참석하였다.

양해각서 조인식에서는 향후 양 기관 간의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2회 전국 중학생 국토올림피아드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2년 10월 6일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동 2층 회의장에서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 국토교육협회의와 공동 주최한 ‘제2회 전국 중학생 국토올림피아드’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국토올림피아드는 중학생의 지리적 안목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상호협력적인 태도를 기르고 국토의 친근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었다.

이번 국토올림피아드 대회는 전국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2일(월)부터 25일까지 지역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한 후 8월 25일 지역별 시험을 치렀으며, 이후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 8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국토올림픽아드 전국대회를 실시하였다. 시험 문제는 중학교 국토지리 교육과정 내용과 최근 시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응시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및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출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국토지리학회, EBS, 국토교육협의회, 전국지리교사연합회, 기타 국토올림픽아드 관계자 20여 명, 수상자 20명이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박양호 원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국토연구원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2012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전문 도서관 부문에서 국토연구원도서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2007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는 공공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병영 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 5개 관종의 총 3,123개 도서관이 참여해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43개 기관이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12년 10월 1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9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도서관은 ‘2003년도 전국 전자도서관 경



진대회 우수상’과 ‘2012년 국회도서관장 공로패’를 수상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토분야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1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소년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는 ‘제1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시상식을 2012년 11월 1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 문현석 소년한국일보사장, 진병호 안성보개초등학교장 등 대회 관계자와 어린이, 지도교사, 학부모 등 약 12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상인 개인 대상은 부산 중리초등학교 5학년 김규나 어린이가 수상하였다. ‘번호길 만들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길과 가족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짜임새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도교사 대상 수상자는 서울 양진초등학교 임소정 교사가 선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357명의 입상자가 수상하였다.

단체상으로는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소의초등학교,



대암초등학교, 양진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선정되었다. 단체상 입상 학교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전국의 다양한 장소를 탐방하였다.

국토연구원은 미래에 국토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에게 국토의 가치를 알리고자 1996년부터 매년 국토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해왔다.

## ‘국토연구원 -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 MoC 체결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2년 11월 22일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와 협력각서를 체결하였다.

MoC는 한·일 간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츠쿠바 시에 위치한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에서 체결되었다. 체결식은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Shuhei Kazusa 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Ogawa Tomiyoshi 부소장의 기관 소개, 국토연구원 박재길 부원장의 축사와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의 기관 소개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양 기관 대표자들의 협력각서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 ‘국토연구원-해외건설협회 MOU 체결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2년 12월 4일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업 발전과 수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분야 연구 및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연구,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건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해외건설협회 최재덕 회장, 신승철 부회장, 김효원 전문이사, 김종현 이사, 김태엽 실장, 권오훈 팀장 및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 정일호 기획경영본부장,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조진철 연구위원, 윤하중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이 참석하였다.



국토연구원과 해외건설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교류 및 협력강화, 해외건설분야 공동연구, 정보교류 등 공동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제1회 국토탐방대회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2년 12월 12일 강당에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소년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주관한 ‘제1회 국토탐방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국토탐방(현장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건강한 국토관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일반탐방과 기획탐방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일반탐방은 전국 공모를 통해 탐방을 신청한 총 22개 학교 가운데 탐방 계획 심사를 거쳐 6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기획탐방은 다문화가정 어린이,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선정하여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8개 학교와 단체(경기도다문화협회)의 약 300여 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전북, 충남 지역의 21개 장소를 탐방하였다.

국토탐방대회는 정해진 길을 따라 찾아가는 다른 체험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탐방장소 100곳(국토 100선)’을 이용하여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개성 있고 독창적인 ‘국토탐방 길’을 만들어 함께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상식은 참가한 학교의 탐방 계획서, 탐방 활동, 참가 어린이들의 소감문을 평가하여 탐방 우수학교, 지도교사, 개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탐방우수학교상은 평창 방림초등학교, 충주 용산초등학교, 전남 점암초등학교, 안성 마전초등학교가 수상하였으며 지도교사 부문 대상은 신은숙 교사가, 개인 부문 대상은 5학년 이영화 어린이가 수상하였다.

## ‘국토연구원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MOU 체결식’ 개최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2012년 12월 28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토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융복합연구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국토관리제도와 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이재봉 원장, 유해운 산업진흥본부장, 조대연 건설사업본부장, 신영방 교통사업본부장, 신현옥 기획예산실장, 이갑재 경영정보실장, 구영성 미래전략실장과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원장, 민범식 도시연구본부장, 조남건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정일호 기획경영본부장, 심우배 국가도시



방재연구센터장, 정문섭 연구위원, 전준호 연구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 ‘제1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올해로 11회를 맞은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2012년 12월 28일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우수논문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5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국토정책 활용성, 연구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논문 1편과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하였다.

이날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논문과 수상자는 ▲최우수상: 조선 후기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건강장수도시의 한국적 원형 탐구를 위한 문헌 고찰(최원석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인문한국 교수), ▲우수상: 계획인구는 왜 정확히 추정되지 못하는가?-경북의 23개 시·군을 대상으로(김준형 대구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전임강사), 민간투자사업 Soft Toll(BTO+Shadow Toll) 방식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김도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외



3인)다.

수상자에게는 연구 장려를 위한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 2. 연구 관련 주요 행사 · 교육

### 1 워크숍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반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워크숍	1.4~5	대전 계룡스파텔	보고서 진행사항 검토 및 연구진 협의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워크숍	1.19	6층 회의실	연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논의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연구진 워크숍	1.19~20	진주 동방관광호텔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 방법론 검토 및 앱개발 방향 논의와 범죄분석 자료수집 협의
IDB-KSP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중남미 3개 도시의 ICT 현황조사 및 분석보고서 작성 컨설팅 용역 워크숍	1.26~27	양지 소나무펜션	중남미 3개 도시(산타아나, 몬테비데오, 고이아니아) ICT 진단 및 분석 부분, Action Plan 부분 작성 검토
북한 수자원사업 마스터플랜(수자원개발전략 및 추진과제) 수립연구 전문가 워크숍	2.1~2	서울교육문화회관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내용 보완 협의
2011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산학연계 워크숍	2.3	인하대	대학원별 특화전략 및 성과발표, 산업체가 바라는 인재상 등 발표 및 토론
KOPSS 관리도구 사용자교육 워크숍	2.16	10층 중회의실	데이터마트 관리도구 사용방법 교육 및 의견 수렴
201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도시정책 정보화사업의 정보 공동 활용 워크숍	3.2	3층 중회의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 관련 정보화 사업의 현황을 토대로 효율적인 정보공유의 필요성 및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추진방안 논의
2012 부동산시장 현장 워크숍	3.6(1차) 12.10(2차) 12.17(3차)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1차) 부동산114 광주·전라지사(2차) 부산 센텀시티(3차)	대구·경북지역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전망과 정책과제 논의(1차), 광주·전라지역 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전망과 정책과제 논의(2차), 부산·울산·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전망, 관련 현안 과제 및 정책방안 모색(3차)
TAMU CHSD-KRIHS 공동 워크숍	3.9	미국 텍사스A&M대	주제1: 한국의 고령화와 건강장수도시의 필요성, 주제2: 미국의 Active Living 연구 동향, 주제3: Access to Nature for Older Adults - Promoting Health through Landscape Design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역할 정립 및 로드맵 작성 연구 워크숍	3.20	과천 그레이스호텔	도시방재 어젠다 및 상시업무 발굴 논의
2011년도 주거실태조사 워크숍	4.4	3층 중회의실	2011년도 주거실태조사 개요, 표본설계 및 실시, 주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OECD-국토연구원 도시정책 공동 워크숍	4.27	3층 중회의실	2012년 OECD 한국도시정책 보고서 발간 기념세미나에 관한 논의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워크숍	5.3~4	제주 대명콘도	글로벌 협력 및 개발도상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활용 촉진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과 방법론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4대강살리기 사업 백서 발간 관련 용역 워크숍(1차), 4대강 일대 현장 답사 및 연구진 워크숍(2차)	5.4(1차) 7.23~25(2차)	8층 회의실(1차) 낙동강 일대 및 한국국학진흥원(2차)	백서 원고작성과 윤문작업을 위한 토론과 작성지침 논의 (1차), 4대강백서 총론면 내용 검수(2차)
융·복합연구과제 개발 및 직원상생 발전을 위한 워크숍	5.9~10	대전 한화콘도	융·복합 연구과제 개발(제1부), 직원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제2부)
U-City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 워크숍	5.10	청주 갤러리호텔	U-City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6차연도) 연구방향 설정 및 제2차 U-City 종합계획 수립 방안 논의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 도시 기술개발 워크숍	5.15~16(1차) 7.20(2차) 9.24~25(3차) 10.19(4차) 11.15~16 (5차) 12.3(6차)	춘천시청(1차) 블루몬테(2차) 춘천(3차) 과천시민회관(4차) 등아대(5차)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6차)	각 기관별 과제 진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1차), 중간평가 제출서류 및 최종보고서 준비 논의(2차), 기관별 역할분담 및 연구방향 설정 논의(3차), 기관별 연구내용 연계 및 연구추진 상황 점검(4차), 평가단 착수 보고 및 기관 간 연구 추진상황 공유·토론(5차), 폭우 재해 분석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방향 및 GUI 구성 논의 (6차)
2012년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워크숍	5.23~24	경주 대명리조트	산업입지정보망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제발표, 산업입지 정책 및 산업단지 관리방안 논의
도로안전성 분석기법 개발 연구 워 크숍	5.31~6.1	인천 골든스카이 리조트	각 연구기관별 관련 문헌 고찰, 분석방법론 등 발표 및 토론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지역 및 교통인프라 개발정책에 관한 워크숍	6.12	10층 중회의실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지역 및 교통인프라 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방법론, 주요 이슈, 정책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호의견 발표 및 집중토론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 구 전문가 워크숍	6.12	과천시민회관	민자고속도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발표 및 토론
2012년 산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연 구 워크숍	6.25	서울대	산지의 보전 및 복원 분야 추진과제 검토
중남미 고위급 대표단 방원 및 워크숍	7.3	3층 중회의실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 전수 및 국가발전 비전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국토개발인프라 정책자문
강화도서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타 당성 조사 현장 자문 및 워크숍	7.4~5	강화군 삼산면	건강문화클러스터 및 강화도원 조성방향 자문 및 현장 답사
도시적 접근을 통한 항만정책 발전 방향 워크숍	7.16~17	여수 디오션호텔 및 EXPO	향후 항만정책발전 현황과 방향 및 전략과제 등 논의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 워크숍	8.2	8층 회의실	고도보존 및 육성지구의 행위제한 작성 방안 논의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워크숍	8.7~10	제천시청 및 제1한방명의촌 명암산채건강마을	각 실과별 주요 사업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제시, 사업 및 정책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시설 및 지역 등 현지조사
산림복지 지원을 위한 산지관리제 도 기반 구축 연구 연구진 워크숍	8.16~17	영덕군청 및 영주시청, 안동호반자연 휴양림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영주테라피단지 현장답사 및 중간보고서 내용 검토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II) 연구진 합동 워크숍	9.3~4	9층 회의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 수정 및 협동작업
제1차 WB·KRIHS 정례 워크숍	9.11~15	세계은행 본부	Peer-to-Peer Knowledge Sharing in Urban Development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베트남 호치민 국립정치행정 아카데미 원장일행 간담회 및 워크숍	9.19	3층 소회의실 및 4층 ECOLE	한국의 국토이용(토지개발, 수용, 보상 등)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특강
제21회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9.25~27	전주 짜즈어라운드호텔	주제1: 건설경제 검토, 주제2: 지속가능한 공생발전, 주제3: 자유주제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지원 워크숍	10.12	10층 중회의실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과 지역발전전략 관련 발표 및 토론
도시화지식플랫폼(UKP) 남아시아 지역 워크숍	10.16~19	대구 EXCO	녹색 도시 개발현황에 대한 남아시아지역 국가(Green City in South Asian Countries)의 지식 교류와 역량 강화 모색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의 구축 연구(Ⅲ) 워크숍	10.17(1차) 11.16(2차)	7층 회의실(1차) 8층 회의실(2차)	모형 간 연계시물레이션에 관한 워크숍(1차), 최종보고서 작성 및 모형 간 연계시물레이션 최종점검(2차)
기후변화 적응 안전도시 시스템 개발 실무자 워크숍	10.29	블루문테	폭우재해 분석시스템 개발 방향 논의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 워크숍	11.2	과천 장미의 언덕 회의실	관련 실과 협의사항 결과보고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Ⅲ) 연구협의회 및 워크숍	11.6	서울대	도시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단독주택 실태분석을 통한 사업화 방안 수립 워크숍	11.15~16	곤지암리조트	연구보고서(사업화 방안 부분)에 대한 전반적 의견개진 및 집중토의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Ⅰ) 시나리오 워크숍	11.16	6층 회의실	미래 국토공간구조 시나리오 논의
재해대비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11.26	강당	2012년 도시 수해특성 분석 및 국토해양부 도시방재 정책 소개
2012 KSP-IDB 공동건설링 중남미 2개 도시통합관제센터(II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 사업 연구진 워크숍	11.27	4층 ECOLE	도시통합관제센터 제1차 설계안 최종 검토 및 수정 사항 논의
한국-베트남 주택정책 공동 워크숍	12.7	베트남 도시지역계획 연구소(VIAP)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및 커뮤니티 발전 전략 논의
중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연구(Ⅰ) 워크숍	12.26	10층 중회의실	수원지역 중전부동산 활용계획(안) 협의

## 2 세미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인프라21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1.12(62차) 1.26(63차) 2.28(64차) 2.29(65차) 3.15(66차) 4.25(67차) 6.1(68차) 6.4(69차) 6.18(70차) 8.16(71차) 11.20(72차)	10층 중회의실 (62, 63, 66, 67, 68, 70차) 3층 소회의실 (64, 71차) 8층 회의실 (65, 69, 72차)	지자체 교통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교통관리시스템(62차), Model and Algorithm for Solving Real Time Dial-a-ride Problem(63차), 아시아인 국가의 교통정책 방향과 과제(64차), 해운항만물류의 미래와 과제(65차), Trip-making Utility Positive or Negative?(66차), Comparative Study of New Urbanist and Suburban Neighborhoods in the US-Travel Behavior, Physical Activity and Health(67차),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도전과 기회(68차), Green Transportation for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69차), Traffic Safety Research in Virginia DOT - Policy, Management, and Engineering Solutions(70차), Global Comparison of Port-Region Linkages(71차), 법정 교통계획의 실태 분석을 통한 실효성 증대 방안(72차)
지역연구 세미나	1.20(1차) 7.12(2차)	6층 회의실	Integrated Assessment of the Economic Structural Change and Sustainability in the Chicago Region (1차),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물류효과 평가체계 구축(2차)
TR808 세미나	1.20(36차) 1.31(37차) 2.16(38차) 3.22(39차) 8.21(40차) 11.20(41차) 11.29(42차) 12.11(43차) 12.20(44차)	8층 회의실	나를 변화시키는 연구의 지혜(36차), 글로벌 공급 사슬에서의 항만(도시)기능과 물류부문 육성전략(37차), 도시와 교통을 연계한 대중교통회랑 모델 소개(38차), 동영상 차트 Gapminder 소개(39차), 교통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동심리학적 접근(40차), 장소감과 통행패턴의 관계-산타버바라 쇼핑물 사례(41차), 유럽의 통합도로 관리 사례 소개(42차), 유럽의 유료도로 요금수납 체계(43차), Car sharing 정책 소개(44차)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VUPDA) 정책자문 세미나	2.23	4층 ECOLE	한국의 U-city, 녹색도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주최 2012 통일 경제·인프라분야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공동 세미나	2.23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도 북한경제 및 인프라 연구부문 연구성과 발표
국토계획 세미나	3.13	4층 ECOLE	한국의 국토계획 및 현재 이슈 논의
국토정책시물레이션모형의 구축 연구(III) 전문가 초청세미나	3.13	8층 회의실	PECAS 모형의 개요 및 구조 소개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국토계획연구부문	3.13	3층 중회의실	주제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 활성화 전략, 주제2: 도시권 육성방향과 추진전략, 주제3: 메가트렌드와 지역의 미래예측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지역연구부문	3.13	3층 중회의실	주제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주제2: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주제3: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국토환경·수자원 연구부문	3.14	3층 중회의실	주제1: 녹색국토 구축을 위한 강·산·해 통합관리 추진방안, 주제2: 기후변화 대응 물 관리 정책방안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도시연구부문	3.15	3층 중회의실	주제1: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주제2: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주제3: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주제4: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주택토지연구부문	3.15	3층 중회의실	주제1: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주제2: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국토인프라연구부문	3.16	3층 중회의실	주제1: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 주제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방향, 주제3: 교통부문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향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국토정보연구부문	3.16	3층 중회의실	주제1: 스마트사회와 공간정보정책 방향, 주제2: 차세대 공간정보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 주제3: 협력적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주제4: 합리적 국토정책의사결정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세계은행과의 남아시아 UKP 런칭세미나	3.20~21	스리랑카 콜롬보	국토연구원 소개 및 각국 대표단과의 협력 방안 논의, 한국의 ODA 정책 소개
북한 연구회 세미나	3.22(1차) 4.30(2차) 5.31(3차) 7.11(4차) 8.24(5차) 8.24(6차) 9.12(7차) 9.20(8차) 10.18(9차) 12.4(10차)	6층 회의실 (1, 2, 4, 5, 6, 7, 8, 10차) 6층 작업실 (3차) 10층 중회의실 (9차)	향후 북한의 변화전망과 대응과제(1차),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의 산업 및 인프라 실태 논의(2차), 북한국토정보 시스템 구축 방향(3차),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망과 과제(4차), 북일관계 현황과 향후 협력과제(5차), 대북정책 20년의 회고와 전망(6차), 강원도의 남북협력과제(7차),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남북협력과제/정치상황을 고려한 남북협력과제/사업 실현성을 고려한 남북협력과제(8차) 동독의 함흥 재건 사례와 시사점(9차), 2013년 남북관계 전망(10차)
공간정보포럼 세미나	4.17(1차) 5.17(2차) 6.21(3차) 7.19(4차) 8.16(5차) 9.20(6차) 10.18(7차) 11.15(8차)	강당(1차) 3층 중회의실 (2, 3, 4, 5, 6, 7, 8차)	공간정보 주요 이슈 및 전략적 방안 논의(1차), 국가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기대와 전망에 대한 논의(2차), 공간정보시장의 미래비전과 새로운 비즈니스 코어(3차), 지오클라우드 컴퓨팅 토크(4차), “재난+GIS=방재”(5차), 공간정보 해외진출 전략(6차)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위기인가, 기회인가(7차), 공간 민주화(8차)
중국 산시성 자원형 경제종합 개혁 지구 조사단 방문 및 세미나	4.24	8층 회의실	국토연구원 연구분야 소개, 한국 산업단지개발의 전개 과정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경험의 중국 확대 및 참여 가능성, ADL과의 한·중연구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세미나	4.26	3층 중회의실	노화혁명의 도래와 지역사회의 대응(기조강연), 주제1: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장수도시 조성의 필요성, 주제2: 건강장수도시의 조성현황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운영위원회 세미나	5.2	여성가족부	보건복지의 격차와 모순에 대한 논의
베트남 공무원 대표단 방문 관련 국토·토지분야 국유재산 관리 세미나	6.5	3층 중회의실	2012 한-베 국토·토지분야 경제통상 네트워크사업 추진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주체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	6.15	대한주택보증	주제1: 도시재생·개발의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향, 주제2: 디벨로퍼의 역할과 민관협동 추진체계, 주제3: 민간금융의 도시개발·재생 참여확대 방안
해의 개발협력 역량강화 세미나	6.20	강당	국제개발은행(MDB) 발주사업 참여전략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공공지원 제도 세미나	7.18	대한주택보증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과제 도출 및 지원방안 논의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전문가 세미나	7.20	3층 중회의실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예측 및 기후변화적응 안전도시 시스템 개발 방향, 폭우재해 적응 도시설계기술 개발 방향 논의
국토인프라연구본부·아주대 TOD센터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10.19	강당	Applications of Activity-Based Transportation Modeling in Simulation and ICT Impacts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新 국토해양정책방향 세미나	11.5	강당	국토해양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일본 국토정책종합연구소(NILIM)와 MOU 체결식 및 제1차 NILIM-KRIHS 공동 세미나	11.22	일본 국토정책종합연구소	국토정책종합연구소와 연구분야 협력 강화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11.22	강당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이론 성과 회고 및 미래 방향 모색
2012년 도시수해 평가 전문가 세미나	11.27	3층 중회의실	2012년 주요 도시지역의 수해특성 분석 및 도시방재 정책방안 논의

### 3 간담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략보고서 작성 관련 원내 북한전문가 간담회	1.5	6층 회의실	국토분야의 새로운 대북경협 추진과제 논의
2012년도 국토교통분야 융복합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	1.11	용산공원조성 추진기획단	용산공원 - 철도·전철·지하철통합역세권 - 수변배후 공간 복합개발방안, 2012년도 주요 발주사업 동향 및 향후 국토연구원과 지속적 네트워크 확대 방안, 용산공원 융복합공간정보서비스사업 도입 등 논의
2011년도 한-아랍에미리트(UAE) ICT분야 협력사업: 한국의 국가 GIS 경험과 양국 협력방안 정책 간담회	1.12	4층 ECOLE	아부다비시스템정보센터(ADSIC) 대표단과 한국 국가 GIS 경험 및 기관 간 협력방안 토의
2012년도 한중물류 정책 간담회	1.12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한중물류 정책방향 및 한중물류 정책과제 토의
2012년 글로벌개발협력포럼 운영계획 간담회	1.18	4층 ECOLE	2012년 글로벌개발협력포럼 운영방향 및 계획 등 논의
도로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	1.18	8층 회의실	3개 연구기관의 전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관련 협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공항교통분야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	1.27	한국공항공사	신규 연구주제 논의, 공항교통분야 현안 파악 등
2012년도 국토물류분야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	2.3	국토해양부	도시물류 체계적 정비방안 및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 2012년도 주요 사업동향 및 향후 국토연구원과의 네트워크 확대, 해외 물류연구사업 공조방안 등 논의
국토해양부 출입기자 간담회	2.13	정부종합청사	연구성과 홍보 방안 등 논의
AfDB의 르완다 국토정책·도시계획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의 간담회	2.13	4층 ECOLE	르완다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도로건설 관련 정책간담회	2.15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현안 문제 및 정책 추진방안 등 협의
중국 현지 전문가 간담회	2.17	중국 단둥시 요동학원조선 반도연구소	압록강유역의 수자원관리 실태와 과제
SOC 정책포럼 준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27(1차) 2.28(2차)	건설회관(1차) 프레스센터(2차)	SOC분야 연구기관의 참여방안, 향후 협력 등 논의(1차), 산학연관 분야 교통물류 분야의 주요 포럼 운영 동향, 우수사례 소개, 향후 포럼구성 및 협력방안 논의(2차)
몽골 건설계획교통부와의 업무협력을 위한 간담회	3.9	3층 세미나실	몽골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 차관을 포함한 고위급 방문단과 국토연구원 및 국토해양부 간 협력 가능성 모색
Anthony Gad Bigio 세계은행 도시문화유산 부서 책임자 방문 간담회	3.14	4층 ECOLE	도시 문화유산 및 보존정책에 관한 최근 이슈 및 국토연구원과의 협력방안 논의
자전거정책 연구기관·단체 전문가 간담회	4.19	서울역 회의실	유관 연구기관과 단체의 공동학술 행사 추진(웹진 발행, 정책세미나 개최), 지속가능한 자전거 정책기조 등 논의
자전거 전문가 간담회	5.3	서울역 회의실	국토 종주자전거길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자전거 안전성 개선방안 논의
글로벌개발협력포럼 회원사와 개도국 연수생과의 간담회	5.7	4층 ECOLE	포럼 회원사 소개 및 질의응답
미얀마 NSDI 구축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조찬간담회	5.24	10층 중회의실	미얀마 개방화에 따른 NSDI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2012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구축사업 관련 부산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KOPSS 구축을 위한 간담회	6.18(부산) 6.19(서울)	부산광역시청(부산) 10층 소회의실(서울)	KOPSS 시연 및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협조사항 등 논의
코레일-국토연구원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간담회	6.19	코레일철도연구원	하반기 연구과제 및 2013년도 연구과제 개발
국토연구원-한국도로학회 정책 간담회	6.26	8층 회의실	도로현안 및 향후 도로정책방향 등 학회와 연구협력 강화방안 논의
2012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특성화대학원 발전방향 간담회	6.27	강당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성과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
2013년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7.4	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연구원	철도분야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논의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글로벌개발협력 포털 사이트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간담회	7.24	4층 ECOLE	민간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One Stop Shop 포털 사이트 구축 및 MDB 발주사업 참여를 위한 실무자 교육사업 논의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연구 전문가 간담회	8.16	6층 회의실	경기도의 남북협력과제 논의
주택·도시개발 금융 전문가 간담회	8.31	8층 회의실	최근 시장현안 검토 및 정책방향 논의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 관리제도 개선 연구 간담회	9.12	산림청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2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 공간정보 거점대학 간담회(1차),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간담회(2차)	9.19(1차) 9.21(2차)	10층 중회의실	거점대학 발전방안 모색 및 디지털국토엑스포 준비 관련 협의(1차), 특성화대학원 발전방안 모색 및 디지털국토엑스포 준비 관련 협의(2차)
세계은행과의 업무 협력을 위한 간담회	9.21	4층 ECOLE	국토연구원 소개 및 16개 분야 교육과정 소개, 국토연구원-세계은행 공동 e-learning과정 운영 가능성 모색
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과 연구협력 관련 정책간담회	11.8	국토해양부	2013년 남북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방안 논의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 부문 간담회	11.19(1차) 11.20(2차)	3층 중회의실(1차) 6층 회의실(2차)	공공부문 요구사항 수렴 및 논의(1차), 민간부문 요구사항 수렴 및 논의(2차)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 도입방안 연구 정책간담회	11.19(1차) 11.20(2차) 11.26(3차)	10층 중회의실 (1, 3차) 국토해양부(2차)	부동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전환기의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발전방향 전문가 간담회	11.29	서울파이낸스센터	복지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관련 전문분야 간 협력방안 논의
수도권정책 간담회 개최	11.30	6층 회의실	외국의 수도권 규제정책 사례 발표 및 토론
도시정책 관련 간담회	12.7	10층 중회의실	도시정책에 대한 연구현황 파악 및 협력 요청
해외전문가 초청 간담회	12.26	10층 중회의실	2013 한반도 정세와 북미관계 전망

## 4 설명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경기도 KOPSS 도입 사업 설명회	1.17	경기도 인재개발원	KOPSS 사업개요, 5대 분석모형, 경기도 구축계획 등
한국의 문화유적 및 고도보존계획 설명회	3.15	8층 회의실	한국의 문화유적 보존정책과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고도보존계획 설명
토지적성평가제도 설명회	3.16	8층 회의실	한국의 토지적성평가제도와 일본의 토지적성평가제도 비교 논의
지자체 도로정비기본계획 협의 설명회	3.28	강당	지자체 도로정비기본계획 협의기준 개정(안)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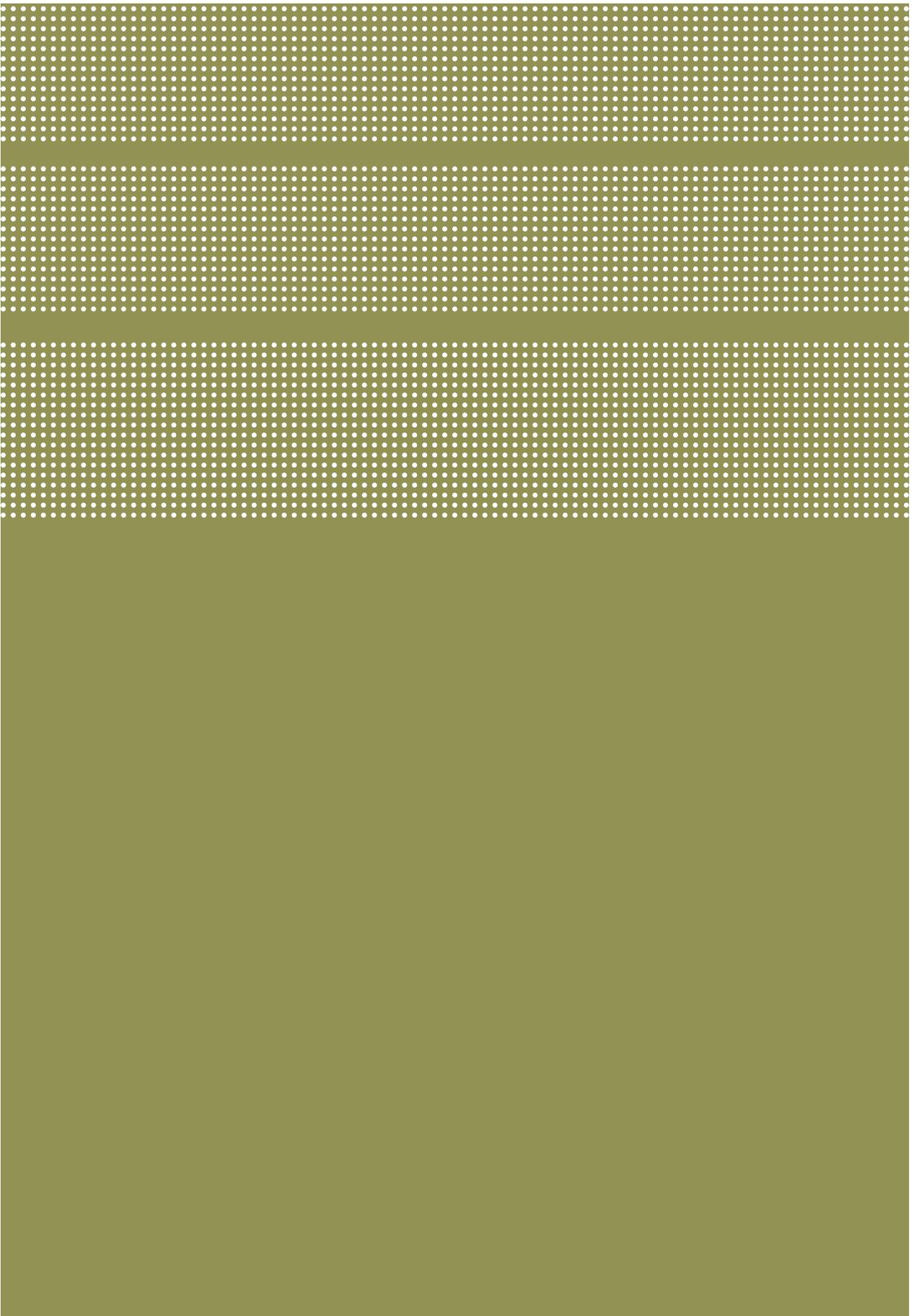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2012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 설명회	5.1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업무 혁신을 위한 KOPSS 활용방안 및 발전 방안 논의
지역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검증 체계 구축 및 검증을 위한 연구 - 경남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사업설명회	6.18	8층 회의실	경남 신발전지역 지역개발 사업설명 및 검증방안 논의
국토계획평가 제도 설명회	6.27(1차) 9.25(2차)	3층 중회의실	국토계획평가 절차 및 방법 등 설명(1차), 국토계획평가 목적, 절차 및 방법과 제도 운영방안 등 논의(2차)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식 및 제도 설명회	8.8	강당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및 평가방법 설명, 질의 및 응답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각 지자체 설명회	8.13(1차) 8.17(2차) 11.28(3, 4차) 11.29(5차) 11.30(6차) 12.3(7차)	서울시청(1차) 부산시청(2차) 안산시 상록구청(3차) 광주광역시청(4차) 강원도 인제개발원(5차) 대전 인제교육원(6차) 경남도청(7차)	각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KOPSS의 정의와 활용방안, KOPSS의 도입방법과 구축을 위한 설명

## 5 토론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환경수도(저탄소 녹색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 토론회	2.3	수원시청	환경수도 추진과제 검토 및 시민과 전문가의견 수렴 등 종합적 논의
2012년 OECD 한국도시정책 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4.27	강당	2012년 OECD 한국도시정책 보고서 발표 및 토론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기술개발 R&D 전략 찬반토론회	4.27	10층 중회의실	공간정보기술개발 R&D 전략에 관한 토론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토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 방향 전문가 토론회	5.4	강당	주제1: 국토계획과 교통인프라 변화와 시사, 주제2: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의 도로기능 제고 방안, 주제3: 도시부 도로의 국가역할 강화 방안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정책 토론회	12.13	대전역	지역정책 관련 주요 이슈 토론
새 지식 공유 토론회	12.17	6층 회의실	유진벨재단의 대북 다제내성 결핵치료프로그램, 그리고 몇 가지 제안

## 6 공청회

회의명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내용
신교통수단 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 공청회	4.26	강당	신교통수단 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 설명 및 질의·응답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공청회	5.29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연구성과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련 지자체 등 의견 수렴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9.7	대전 한국철도공사	환영사 낭독,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및 종합토론
고도지역 행위제한 개선방안 공청회	9.26	대전 천연기념물 센터	고도지역 행위제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 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12.14	알펜시아 리조트	특구종합계획(안) 설명 및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수렴





Chapter

# V

## 정기간행물 발간

1. 국토(363호~374호)	150
2. 국토연구(72권~75권)	156
3. 국토정책Brief(356호~414호)	157
4. 도로정책Brief(51호~62호)	159
5. 건설경제(69권~72권)	161

# 1. 국토(363호~374호)

## 363호 2012. 01

### 국토시론

국토정책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의 창조 박양호

### 짧은 글 긴 생각

도전과 낭만을 찾아 떠나는 끝과 끝의 여행 유지성

### 특집 | 국민생활 변화 맞춤형 국토정책 방향

- 1.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생활국토 정책방향 박재길
- 2. 국민생활 변화동향과 국토정책 과제: 생활국토 창조 이용우
- 3.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를 활용한 도시·지역재생방안 이왕건
- 4. 지역사회 맞춤형 생활안전망 강화방안 김현호
- 5. 국민활력 증진을 위한 수변공간 활용방안 양진홍
- 6.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보행권 확보 임삼진
- 7. 기후변화 적응형 안전한 국토만들기 신상영

### 용어풀이 161

생활국토 외 박근현

### 이슈와 사람 86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선희

### 세계의 도시 161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București) 이호창

### 가던 길 멈추고

### e-interview

폴 로리스(Paul Lawless): 영국 '뉴딜커뮤니티' 10년 프로그램의 평가와 교훈 양도식

### 글로벌정보

20여 년 만에 재개통하는 파리-모스크바 관광철도 외

### 해외리포트

바르셀로나 22@지구의 미래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주희선

### 지역통신

시영아파트, 시민공간으로 탈바꿈 외

###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20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주요 내용 배유진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주요 내용 이의진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축하메시지

국토연구원 단신 | '2012년도 사무식 및 2011년 중무식' 개최 외

### KRIHS 보고서

스마트 인프라 투자 평가 방법론: 스마트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오성호 외 지음) 박은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박세훈 외 지음) 오경석

### 간추린 소식

###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 독자와 함께

###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3

직산현 관아(稷山縣官衙)와 천안십경 박영순

## 364호 2012. 02

### 국토시론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생발전 모색 박진근

### 짧은 글 긴 생각

유쾌한 증독 최호열

### 특집 | 공생발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 1. 국토분야의 공생발전 정책개념과 추진방향 문정호
- 2. 지역 간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장재홍
- 3. 도시-농산어촌 공생발전 추진방향 김정연
- 4. 주민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 박학룡
- 5.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의 적정개발과 공생발전 전략 장철순
- 6.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도시 및 지역정책 과제 최병두
- 7. 통일 이후 독일의 공생발전 노력 권용석

### 용어풀이 162

공정사회 외 윤영모

### 지역통신

제2기 그린부산사업 본격 추진 외

이슈와 사람 87 | 이상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대학교 총장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공생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김민철

### 세계의 도시 162

인도 최대의 경제·금융 중심지, 뭄바이(Mumbai) 도용복

### 가던 길 멈추고

### e-interview

케빈 오코너(Kevin O'Connor): 세계화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와 아시아-태평양 도시의 성장 김형민, 김태성

### 국토논단

영국의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활용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차미숙, 윤운정

### 해외리포트

외레순(Øresund) 지역의 복합형 도시개발: 말뚝 베스트라 함넨과 코펜하겐

외레스타드(Ørestad) 서연미

동일본 대지진 부흥계획과 일본의 수도기능 분담 재논의 임화진

### 글로벌정보

파리 트람웨이 3호선의 Art Station Project 외

###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단신 | '2012 국토연구원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개최 외

### 자료회원 가입안내

### KRIHS 보고서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조춘만 외 지음) 이승일

농어촌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어촌뉴타운사업 발전방안(최혁재 외 지음) 윤원근

### 간추린 소식

###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 독자와 함께

###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4

청주 흥덕사지(興德寺址)와 직지(直指) 박영순

365호 2012. 03

국토시론

한미FTA, 열린 국토의 새로운 도약

홍성웅

짧은 글 긴 생각

아파트와 바꾼 집

박철수

특집 | 한미FTA와 국토정책 대응방안

1. 한미FTA에 대응한 국토해양분야의 현안 및 정책과제
2. 한미FTA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3. 한미FTA와 미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4.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이 부동산법에 미치는 영향
5. 한미FTA와 농촌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6. 한미FTA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7. 한미FTA와 물류분야의 대응과제

박건수  
김동수  
빈재익  
김지엽  
문한필  
장철순  
임재경

용어풀이 163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의

김승중

지역통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공원화 추진 외

이슈와 사람 88 |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는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승중

세계의 도시 163

유럽 건축문화의 샐러드 보울(bowl), 탈린(Tallinn)

서진석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피터 로우(Peter G. Rowe): 건축, 도시설계 그리고 동아시아 도시들

정상훈

해외리포트

일본 다마누타운 첫마을 재건축사업의 추진경위 및 특징

김중은

글로벌정보

프랑스, 사회보장주택 100년사(1912~2012) 전시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2012 통일 경제·인프라분야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세미나’ 주요 내용

신혜원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신동빈 연구위원, 캄보디아 정부훈장 받아 외

간추린 소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5

상당산성(上黨山城)과 청주팔경

박영순

366호 2012. 04

국토시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방향

김정호

짧은 글 긴 생각

봄날의 강가에서

김동정

특집 |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주택정책방향

1. 주거복지 4.0 시대를 향한 주택정책방향
2. 고령화에 대응한 역모기지 대출제도 활성화방안
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는 주거지원 정책방향
4. 다문화사회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 외국인의 주거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5. 농어촌 정주환경 변화와 농어촌주택 정책방안
6. 주택산업 구조변화와 개보수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일본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주택시장의 대응동향

용어풀이 164

베이비붐 세대 외

김태환

이슈와 사람 89 | 양승조 국회의원

“100년을 내다보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천현숙

세계의 도시 164

다섯 가지 키워드로 읽는 방콕의 풍경

권태호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프레드릭 스타이너(Frederick R. Steiner): 지구환경의 위기와 생태적 계획의 비전

김진오

해외리포트 싱가포르의 전략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플래닝

변세일

정책해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김철중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박정호, 윤영모, 정소양, 구형수, 권수연, 배유진, 박종일, 구민상, 김소라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연구원 단신 | ‘남아시아 UKP 런칭 세미나’ 개최 외

글로벌정보 폐교시설 개조를 통한 저소득층 노인용 복합주거시설 공급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특별기고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해외도시개발 전략

이상정

지역통신 부산시 새주소 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 외

KRIHS 보고서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방안 연구(이수숙 외 지음)  
정의철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신동빈 외 지음)  
이상호

간추린 소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6

청원 문(文義) 문화재단지와 문산관(文山館)

박영순

367호 2012. 05

국토시론

교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김한영

짧은 글 긴 생각

멘토 유행이 편치 않은 이유 장강영

특집 | 친환경 교통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 친환경 신교통수단 개발현황과 향후 과제 이상문
- 2. 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향 오성호
-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평가 필요성 류재영
- 4. 친환경자동차의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 김원규
- 5. 친환경 철도교통의 발전 방향 양근울
- 6. 사람 중심의 도시가 건강한 도시다 김은희

영어들이 165

신교통수단 박종일

정책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김기선

해외리포트

미국 광역계획기구(MPO)의 참여형 광역개발계획 정보시스템 활용 동향 및 시사점 김대중, 임은선, 김태영

지역통신 갈맷길 700리 위성 상세안내도 제작·배포 외

이슈와 사람 90 | 박찬석 전 경북대학교 총장, 전 국회의원 "복잡한 도시교통, 자전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류재영

세계의 도시 165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거인, 아스타나(Astana) 권대환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안드릭 슈마카(Jan-Dirk Schmöcker): 대중 심리를 고려한 교통행동 분석 김정화

글로벌정보

도시디자인 설계공모 당선작, 파리시내 시범 설치 중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2012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주요 내용 박근현
-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 주요 내용 지승희
- '공간정보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 주요 내용 성해정
- '2012년 제1차 한반도포럼' 주요 내용 신혜원
-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식' 개최 외

KRIHS 보고서

- 자연친화적 산지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순학기 외 지음) 김용관
- 지역별 부동산시장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1)(박천규 외 지음) 정봉현

간추린 소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7

구녀산성(九女山城)과 청원옥화구경(淸原玉華九景) 박영순

368호 2012. 06

국토시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공간계획을 통한 범죄예방 박재길

짧은 글 긴 생각

열심히 일한 그대, 세상을 경험하라 나효우

특집 | 생활국토 창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전략과 정책방향 김걸, 장환영
- 2. 범죄의 시·공간적 연구동향과 국내 범죄연구의 과제 김영호
- 3. 범죄예방과 두려움 감소를 위한 환경설계 사례와 시사점 문태현
- 4. 미국의 도시 범죄예방 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용길
- 5. 일본의 방범형 안전도시·마을 만들기 사례 이왕건, 류태희
- 6.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ICT 활용사례와 시사점 채명기, 이재석

영어들이 166

안전도시 외 장환영

해외리포트

일본의 환경미래도시 왕광익  
중국의 부동산시장과 주택정책 동향 박인성

이슈와 사람 91 |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안전한 삶을 위한 응복합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김걸

세계의 도시 166

공존과 갈등 사이의 도시, 베이루트(Beirut) 이상욱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앤디 토폴리(Andy Topley): Creative Sheffield의 성공적 도시재생사업과 파트 너십 양도식

글로벌정보

마르세이유시, 도시 범죄 대처를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외

지역통신

사상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도심 속 보리밭길 조성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국토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 방향 전문가 토론회' 주요 내용 김혜란
- '2차 이코-포럼(ICO-FORUM) & 문화국토포럼' 주요 내용 황병준
- 국토연구원 단신 | '2011년도 연구성과 시상식' 개최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 시공간패턴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예측 및 활용방안 연구(김대중 외 지음) 김학열
-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대중교통회랑 구축방안(서민호 외 지음) 이승일

간추린 소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8

보은 속리산 법주사(法住寺)와 팔상전(捌相殿) 박영순

369호 2012. 07

국토시론

산을 더 산답게, 강을 더 강답게

최정호

짧은 글 긴 생각

마을은 관계망이다

위성남

특집 | 강과 한국인의 삶

1. 강과 한국의 역대 왕도
2. 한강의 문화유산과 생활민속
3. 낙동강의 나무
4. 금강의 강경포구와 덕유정
5. 영산강의 인문지리와 삶
6. 생활 속의 강

오순제  
박태순  
신정일  
오석민  
이윤선  
김선희

용어풀이 167

치산치수(治山治水) 외

구형수

정책해설

「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연호

이슈와 사람 92 | 김용택 시인

“자연이 해준 말을 시로 받아냈습니다”

양진홍

세계의 도시 167

역사·문화 키워드로 본 자그레브(Zagreb)

김철민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마크 래핑(Mark B. Lapping): 잊혀진 지역과 사람들을 위한 계획-미국의 농어촌 계획 및 식량 계획

김유승

해외리포트

런던의 도시이미지 강화를 위한 경관관리방안

이진희

지역통신 녹색도시 부산 만들기, 도심 자투리땅 녹화계획 추진 외

글로벌정보

에스투에르, 루아르 강을 중심으로 한 낭트-생나제르 대도시권 통합 프로젝트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해외 개발협력 역량강화 세미나’ 주요 내용 박소연
-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주체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 주요 내용 정소양
- ‘2012 폭우재해 대비 전문가 세미나 및 지자체 교육’ 주요 내용 지승희
- ‘2012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배유진
-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2011 종합청렴도 1위 기념패 수상’ 외

KRIHS 보고서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김승중 외 지음) 박성진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차미숙 외 지음) 이상호

간추린 소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49

삼년산성과 속리산팔연경(俗離山八緣景)

박영순

370호 2012. 08

국토시론

세종시 출범에 즈음하여

최병선

짧은 글 긴 생각

숲과 사람이 하나된 마을을 꿈꾸며

김태영

특집 | 세종시 출범과 국가균형발전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도입과 건설 전략
2.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의 광역적 연계발전전략
3. 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가능지구’ 활성화 방안
4.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신규 편입지역의 동반 발전 방안
5.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행·재정 체제 구축 방안

조수창  
오용준  
장철순  
강현수  
조경훈

용어풀이 16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외

이진희

지역통신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개장 외

글로벌정보

시민 이동수단 다각화를 위한 5가지 친환경 도시 교통수단 도입 외

이슈와 사람 93 |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철순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1

건강도시 원주, 시민의 건강증진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김태환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폴 워델(Paul Waddell): UrbanSim-주민참여를 위한 도시시뮬레이션 플랫폼

김형규

해외리포트

캐나다 오타와의 행정수도계획 및 관리 체계

김재철

일본 오사키지구의 도시재생 사례: 바람길 확보를 중심으로

지승희

정책해설

-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의 의미와 주요 내용 조은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최중욱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워크숍’ 주요 내용 이범현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공공지원제도 세미나’ 주요 내용 전성연
- 국토연구원 단신 | ‘한-러 극동포럼’ 개최 및 국토연구원-러시아 극동연방대 학교 MOU 체결 외

KRIHS 보고서

-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장철순 외 지음) 이동민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이영주 외 지음) 진영호

간추린 소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50

옥천 이지당(二止堂)과 옥주사마소(沃州司馬所)

박영순

371호 2012. 09

국토시론

글로벌 개발협력에도 한류(韓流)가 기대된다 박재길

짧은 글 긴 생각

숲, 가까이에서 즐기기 김은희

특집 | 글로벌 개발협력의 현황과 전망

-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과 과제 강주홍
- 2. 무상 ODA사업의 성과와 개선 과제: KOICA를 중심으로 장재윤
- 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최근 성과와 동향 장영훈
- 4.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성과와 과제: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을 중심으로 이태희
- 5. 해외건설 신흥시장 현황과 진출 확대 방안 김구철
- 6. 세계은행의 국토개발 업무지원 방향 최성수
- 7. 국토연구원 GDP센터의 글로벌 개발협력사업 추진현황 사공호상

용어풀이 169

2011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2011) 최성진

정책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김민철

해외리포트

일본의 주택보증제도 김민철

지역통신

공원활동가 양성 강좌 개설 외

이슈와 사람 94 | 이창식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국제협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사공호상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2

자전거 천국 창원, 대한민국 건강도시운동의 발상지 임영태, 김은정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크리스틴 윌리엄스(Kristine Williams): 이동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Access Management의 적용 이찬영

글로벌정보

대륙별 공적개발원조 전략 추진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국토계획평가 제도 설명회’ 주요 내용 박정호  
 국토연구원 단신 | ‘태국 공간정보 및 우주공간기술개발국(GISTDA) 기술단’ 내원 외

KRIHS 보고서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박세훈 외 지음) 이소영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 고령층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 분석을 중심으로(김준기 외 지음) 최기주

간추린 소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51

옥천의 백제성왕 유적비와 관산성지(管山城址) 박영순

372호 2012. 10

국토시론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과제 박현경

짧은 글 긴 생각

마음을 이어주는 마을만들기 이근호

특집 | 여성친화도시

- 1. 여성친화도시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최성지
-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례 및 개선과제: 지역사회 생활여건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최유진
- 3.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계획과 건축 강미선
- 4.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도시계획 구성요소 박태원, 천현숙
- 5. 서울시 여행(女幸)프로젝트의 성과와 시사점 이재림
- 6. 여성친화도시가 지향하는 핵심가치 홍미희

용어풀이 170

여성친화도시 윤윤정

정책해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박기범

해외리포트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통한 SCAG의 지역교통계획 민성희, 안홍기

이슈와 사람 95 |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천현숙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3

미래 건강도시의 메카를 지향하는 강동구(江東區) 최영국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칼 모니스미스(Carl Monismith):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과 정책 김창모

글로벌정보

릴(Lille)시의 여성친화정책 외

지역통신

‘수직농장 희망마을’ 개소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1회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 워크숍’ 주요 내용 김상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2012~2020) 공청회’ 주요 내용 추민경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 아카데미’로 지정 외

KRIHS 보고서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이상준 외 지음) 김원배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최병남 외 지음) 조우석

간추린 소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52

정지용(鄭芝溶) 시인의 생가와 옥천삼팔경(沃川三八景) 박영순

373호 2012. 11

국토시론

국토에서 감동 찾기 권용우

짧은 글 긴 생각

혼자 걸어보자 전형일

특집 | 감동이 있는 국토 만들기

- 1. 생활국토 발현과 국토정책 재정렬 박재길
- 2. 어린이 국토탐방대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이강식, 이승욱, 김영빈
- 3. 행복을 찾게 해주는 숲 김의식
- 4. 문화유산 해설 현황 및 향후 과제 최경은
- 5. 건강국토 체형형 자전거길 조성 정진규, 김태환
- 6. 보행도시로 가는 굽은 골목길 오성훈

영어풀이 171

국토교육 외 이승욱

정책해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박용선

해외리포트

독일의 '30ha' 도시관리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권용석

지역통신

해안경관 조망공간 조성사업 완료 외

이슈와 사람 96 | 유근배 국토지리학회장,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지역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국토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강식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4

백두대간이 빛어낸 약초 · 한방 건강도시, 제천 차미숙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에스테반 토하 곤잘레스(Esteban Tohá González): 칠레의 공간정보인프라정책 강혜경

글로벌정보

리옹, 빛의 축제를 통해 도시조명 분야 선도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 ICG-TEK 2012' 주요 내용 오지영
- '제21차 한 · 일 건설경제워크숍' 주요 내용 이승훈, 석재성
- 'Urban Design Asia 2012' 주요 내용 이희원

국토연구원 단신 | 제23차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EAROPH) 세계대회 외

제1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수상작 및 입상작 발표

KRIHS 보고서

-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심우배 외 지음) 정명운
- 녹색성장 · 광역 · 통합시대의 선진적 수자원 관리방안(김중원 외 지음) 이병기
- 박두호

간추린 소식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53

충북 영동 영국사(寧國寺)와 난계사(蘭溪祠) 박영순

374호 2012. 12

국토시론

포스트성장시대, 계획스타일도 당연히 달라져야 권원용

짧은 글 긴 생각

내가 본 한국 도시발전의 비결 플라비오 유아가

특집 | 포스트성장시대의 국토계획 방향

- 1. 시대환경의 변화와 공간계획의 새로운 길 최병선
- 2. 거시적 국토계획의 한계와 실효성 제고방안 김현수
- 3. 도시기본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의 사례 양재섭
- 4. 국토계획 환경변화와 교통부문 정책 이용재
- 5. 맞춤형 커뮤니티 계획의 필요성과 실천과제 이영은
- 6. 정부주도 계획의 한계와 주민참여 계획 황희연
- 7. 계획의 집행력 제고와 중기재정계획 활성화 이원희

영어풀이 172 포스트성장시대의 공간계획 패러다임

정책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손동권

지역통신 계획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부산 복합결집지수 개발 외

이슈와 사람 97 | 운영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사람과 과정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상조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5

천혜의 자연환경과 건강장수섬, 울릉도 권영섭

가던 길 멈추고

e-interview

영국의 템스게이트웨이 국가도시재생사업과 런던템스게이트웨이 개발공사 양도식

해외리포트

외국의 통행료 수납 무인화 정책 및 기술동향 김혜란  
호주의 역모기지 제도와 시사점 박찬규, 배유진

글로벌정보 그랑파리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외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 '대내 · 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세미나' 주요 내용 서관호
- 2012년 재해 대비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및 '전문가 세미나' 주요 내용 지승희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계획 4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개최 외

자료회원 가입안내

KRIHS 보고서

-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이왕건 외 지음) 문채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김창현 외 지음) 이병기

간추린 소식

2012년 국토 총목차(통권 363~374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54

영동군 양산면 비단강숲마을을 봉수대와 영동군 삼팔경 박영순

## 2. 국토연구(72권~75권)

### 72권 2012. 03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특성에 관한 연구  
 목승준, 김용철, 성현곤  
 서울시 토지 이용과 밀도의 시·공간 변화 연구(1980~2007) 강창덕  
 실물음션 기법을 이용한 도로사업의 경제성 평가 강동진, 송병록, 노정현  
 자연공실률에 의한 서울 오피스 임대료 조정과정: 오피스 규모별 차이를 중심으로 민성훈, 고성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장영길, 이춘섭  
 택배산업의 네트워크 최적화에 관한 연구 조용훈, 박동주, 박형준, 박찬익, 엄인섭  
 공간계량경제 접근방법을 이용한 농지가격추정에 관한 연구: 수도권 근교농지를 중심으로 송용철, 박한수  
 계획연구는 왜 정확히 추정되지 못하는가?: 경북의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김준형  
 건강도시 지표 및 지수 개발과 수도권 지역의 적용에 관한 연구 김은정

### 73권 2012. 06

조선후기의 주거관과 이상적 거주환경 논의: 건강장수도시의 한국적 원형 탐구를 위한 문헌 고찰 최원석  
 Lessons from Businesses Preparedness, Response, and Planning: Natural Disaster Experience in Texas 김현, 김현우  
 세력권 방식의 공간적 연관성을 이용한 인구분포변화 분석 김효용  
 미혼 직장여성의 네트워크거주 실태분석 최정민, 박영미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적정성의 평가 류덕현  
 주택자산이 가구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선택에 미치는 영향 임미화, 정의철  
 서울 오피스 NOI 증가율과 위험프리미엄 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민성훈, 고성수  
 공간회귀분석을 활용한 통행발생모형 추정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진창중, 이항숙, 추상호  
 임대주택사업의 사업성 분석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유성호, 이용범, 유선종  
 저스트성장(Just Growth) 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유형 분석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양광식  
 토지 합병을 통한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화 방안: 청주시의 공공유지 합병을 사례로 조영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사례로 이왕기, 정승현  
 도시홍수조절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빗물운영기법 도출: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김원현  
 지식외부효과가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수준 변수를 이용한 다층적 모형의 설계 조성철, 임업  
 교외간선도로의 차등시간 분포에 대한 사례 연구 박창수, 장진환  
 해외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명수  
 결합개발방식 적용 사례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김주진, 송영현, 김육연

### 74권 2012. 09

철도여객 운임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이재민, 한상용  
 주거입지 선호의식 분석: 주거입지 요소별 한계수준과 가구특성별 격차를 중심으로 이백진, 서민호, 김혜란, 정일호  
 초월대수 비용함수를 이용한 하수도 부문의 규모의 경제성 평가 박선영, 유승훈, 김중원  
 상류지역 개발과 오염총량관리제를 고려한 하천수질관리 비용배분 방안 여규동, 김길호, 정영훈, 이상원  
 한미 리츠가격지수의 수익률 및 변동성 특성비교 분석 서원형, 유정석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광역행정 사례분석: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김진수, 서순탁  
 민간투자사업 Soft Toll(BTO+Shadow Toll) 방식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도일, 강동석, 김윤식, 현창택  
 미국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용창  
 한·EU FTA를 활용한 한미배후단지 기업유치 Biz 모델 개발 이성우, 오연선  
 활동요소가 통행수단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선택적 활동을 중심으로 추상호  
 지역 차원 균형발전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의 경우 최병호, 이근재, 정재희  
 지역개발사업 관련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이순자, 문정호, 장은교, 박형서, 김강민, 김재신  
 연령과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손철, 산디아 사마라상혜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향상을 위한 미국 도시재생정책의 성과와 한계: 미국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신원, 김혜승  
 30~40대 아파트 거주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거 선호 김예성, 고진수  
 동일본대진재로 인한 도시시스템 변화와 지역부흥전략에 관한 연구: 도호쿠지방 미야기현을 중심으로 이호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지역수자원계획 평가 최시중, 강성규, 문장원, 서재승, 이동률  
 미국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도입 현황 및 요구에 관한 연구 권오정

### 75권 2012. 12

투자이론에 기초한 임대인의 보증금 비중 선택모형 이창무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당사국 간의 선호체계 비교 연구 원준중, 안건혁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취업 이동을 중심으로 심재현, 김의준  
 커뮤니티 개발과정에서의 자산지도화기법(Asset Mapping) 활용 사례 연구 최현선, 오윤경, 이지연  
 행위자 기반 도시모형의 장점 및 한계 분석에 관한 연구 김동한  
 역사문화환경 보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관리(PM) 적용평가 연구: 수원 화성(華城)을 대상으로 이지은, 정성  
 오피스시장의 시장 자본환원을 추정에 관한 연구: 서울권역을 대상으로 이동준, 이용만

### 3. 국토정책Brief(356호~414호)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356	1. 2	개도국 교육연수의 효과와 시사점	사호공상, 송효진
357	1. 9	2012년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전망	이수욱, 박천규, 황관석, 변세일, 전성제
358	1. 16	금융위기와 유럽 국가의 주택금융정책	박미선
359	1. 25	한·미·일 공간정보기술 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신동빈, 강혜경, 성해정
360	1. 25	2011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김재환, 박천규, 변세일
361	1. 30	고속도로를 활용한 대중교통 환승시설 도입방안	김홍석
362	2. 6	연령대별·권역별 수도권 전출·입 인구 동향과 시사점	이동우
363	2. 13	건설경기 동향 및 2012년 전망	김민철, 윤하중
364	2. 20	2012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김재환, 박천규, 변세일
365	2. 27	도시 이동성 문제, 세계적으로 더욱 심각	이진희, 고용석, 김현식
366	3. 5	미국 사회기반시설 성능지수의 개발방향과 시사점 -교통기반시설의 성능지수를 중심으로-	안홍기, 윤성민
367	3. 12	지역사회통합지표의 개발과 정책적 활용	차미숙 외
368	3. 19	2012년 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김재환, 박천규, 변세일
369	3. 26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 추진전략	이왕건, 박정은
370	3. 26	중국지역정책의 변화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김천규
371	4. 2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천현숙
372	4. 2	도시 품격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역량 제고 방안	채미옥
373	4. 9	고령층의 주거입지 및 통행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김준기
374	4. 16	지역별 부동산하위시장 유형화 및 정책방향	박천규, 이수욱, 권수연, 손학기, 전성제
375	4. 16	영국의 공간정보 무상유통정책과 시사점	김동한, 최병남
376	4. 23	대중교통회랑을 활용한 녹색도시 조성방안	서민호, 정진규
377	4. 23	2012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문지희, 김재환, 박천규, 변세일
378	4. 30	위기 극복과 프런티어 도전을 위한 「일본재생 기본전략」과 시사점	이동우
379	5. 7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네덜란드의 전략환경평가 사례와 시사점	이용우, 이지원
380	5. 14	예술가가 도시를 바꾼다: 문화클러스터의 현황 및 발전과제	박세훈, 정소양
381	5. 21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의 가뭄 취약성과 정책방안	심우배, 한우석
382	5. 21	2012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전성제, 최윤경, 문지희, 김재환, 박천규, 변세일
383	5. 29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정책방향	이수욱, 박천규, 최윤경
384	6. 4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	김창현
385	6. 11	우리나라의 지역소득통계(Regional Income Statistics) 구축현황 및 개선방향	강민규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386	6. 18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민범식, 이왕건
387	6. 25	2012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김태환, 문지희, 김재환, 최윤경, 변세일, 박천규, 전성제
388	7. 2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취약성 분석 및 도시방재방안	심우배, 지승희
389	7. 9	폭우에 대비한 대만의 토지이용 관리방향과 시사점	김승중
390	7. 23	신교통수단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과 정책적 함의	오성호, 박종일
391	7. 23	2012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김태환, 문지희, 김재환
392	7. 30	해외 공동체토지신탁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 미국 챔플레인 하우스 트러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	전은호, 이순자
393	8. 6	낙후지역의 인구·고용 변화(2000~2010년)와 정책적 시사점	변필성
394	8. 13	동계올림픽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추진	왕광익
395	8. 20	2012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김태환, 문지희, 김재환
396	8. 27	국토 품격 제고의 "국토 셀" 특성화 모델: 신안군 증도 사례	김선희, 백경진
397	9. 03	사람 중심의, 모두의 삶이 있는 가로 만들기: 미국 통합가로(Complete Streets) 구축 사례	서민호, 이윤석
398	9. 10	영국의 도로사업 사후평가 제도와 시사점	김혜란
399	9. 17	물 복지와 물 값	김중원, 송은서
400	9. 24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독일의 자연친해조정과 시사점	최영국, 최인태
401	9. 24	2012년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김태환, 문지희, 김재환
402	10. 2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재해 대응 안전도시 구축방안	한우석
403	10. 15	선진국의 교량 유지보수 전략 및 시사점	배유진
404	10. 22	일본의 「국제전략총합특구」 제도: 대도시 국제경쟁력 제고에 대한 시사점	이동우
405	10. 22	2012년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김태환, 문지희, 김재환
406	10. 29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전략과 정책방향	김걸, 장환영
407	11. 05	고량자 인구이동과 국토·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민성희, 박정호
408	11. 12	참여형 공간정보 추세와 국가공간정보정책의 대응	최병남, 강혜경, 성혜정
409	11. 19	2012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김태환, 문지희, 김재환
410	11. 26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 지수의 도입	허수정
411	12. 10	미국 애틀랜타광역권의 활력지구 육성(Livable Centers Initiative)과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재철
412	12. 17	외국의 주거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및 공급체계 - 영국, 미국, 독일의 사례 검토 및 시사점 -	김혜승
413	12. 24	2012년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동향	이수욱, 김태환, 문지희, 김재환
414	12. 31	시민의 건강정수도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어디가 건강하게 오래 사나?	김은정, 김태환

## 4. 도로정책Brief(51호~62호)

### 51호 2012. 01

**칼럼** | 효과적인 광역 교통행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해외정책동향**

1. 미국 MPO의 역할과 SCAG 활동
2. 미국의 여객통행 데이터 구축 및 활용
3. 노변주차장을 공원으로: 샌프란시스코의 Parklet
4. 미국 연방·주정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이슈** | TOD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간추린 소식**

1. 2012년 도로 551km 개통·463km 착공 예정
2. 2010년 교통부문 에너지소비 분석 결과 발표

김광식

민성희  
백호중  
김민영  
김종학  
구자훈

### 54호 2012. 04

**칼럼** | 도로투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해외정책동향**

1. 민간투자협력, 새로운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
2. 미국의 새로운 연방 교통법안 그리고 MPO
3.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을 위한 도시·교통 통합 전략
4. 교통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 동향

**이슈** | 도시부 도로 설계 개선 서둘러야

**간추린 소식**

1. 길포럼, 2012 정기총회 개최
2. 국토해양부, 국도 첨단도로관리 기술로 지자체 지원 실시

문동주

김혜란  
이찬영  
김태호  
김민영  
김경석

### 52호 2012. 02

**칼럼** | 한일해저터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해외정책동향**

1. 도로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외 정책 동향
2. 일본 도로 인프라 건설 LCA평가 기술 개발
3. 도시 적주성과 교통
4. 지그재그 노면표시의 안정성 효과 실험

**이슈** | 지자체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간추린 소식**

1.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 개선사업' 계획 확정
2. 2011년 첫 시행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박경부

한동희  
이유화  
서민호  
김혜란  
김호정

### 55호 2012. 05

**칼럼** | 남북 및 다자협력을 통한 한반도 경제권 구축 방안

**해외정책동향**

1. 토지이용과 교통을 융합한 계획체계
2. 일본의 도로특정재원제도 폐지: 논의와 시사점
3. 교통인프라 시설의 건강영향평가
4. 러시아의 원격조명제어를 통한 에너지 저감 정책

**이슈** | 하이패스 교통정보시스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간추린 소식**

1. 국토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2. 차량운행 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 결과

김원배

이승호  
최소림  
김준기  
김상록  
남궁성

### 53호 2012. 03

**칼럼** | 자전거도로 정책,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해외정책동향**

1. 해외의 화물운송과 도로투자 필요성
2. 해외 과적단속 제도 및 운영과 국내 개선사례
3.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
4. 긴급 제설작업 구간지정 및 운영

**이슈** | 휴게소 변화의 新 물결 "복합휴게소"

**간추린 소식**

1. 국토연구원 '제4회 도로연구 성과발표 연찬회' 개최
2. 한국도로공사 '교통정책 종합 개선대책' 수립

오수보

김태승  
권순민  
김태호  
양충현  
최윤택

### 56호 2012. 06

**칼럼** | 도시부 도로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방안

**해외정책동향**

1. 일본의 향후 고속도로망 정비방향 재설정
2. 미국 연간 도로주행거리 감소와 시사점
3. 일본 동경권 고속도로 요금제의 변화: 대거리요금제
4. 미국 재건축권(BABs) 도입배경 및 시사점

**이슈** | 교통투자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대안

**간추린 소식**

1.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개최(SOC)
2. 2012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3. 건산연, 차기 정부 건설·주택정책 세미나 개최

김호정

김중은  
이찬영  
고용석  
송재인  
김태승

57호 2012. 07

<b>칼럼</b>   20-50 클럽 가입과 도로의 과제	조남건
<b>해외정책동향</b>	
1. 미국의 부주의 운전 근절 정책	오성호
2. 일본 신토메이고속도로 개통과 시사점	백승걸
3. 화물자동차 적재물 관리 규정 도입의 필요성	김동규
4. 영국 유료고속도로(M6 TOLL)의 변화와 시사점	강선욱
<b>이슈</b>   도로부문 경쟁력 강화 전략	이용재
<b>간추린 소식</b>	
1. 제21회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2.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 2020' 수립	

58호 2012. 08

<b>칼럼</b>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새로운 교통안전 패러다임	이수범
<b>해외정책동향</b>	
1.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와 회계기준	도명식
2.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영국의 선진계획기법	이윤석
3. 미국 교통계획관련 법률의 위계 및 기관간 협조체계	김창모
4. 런던 올림픽 도로교통 대책	김민영
<b>이슈</b>   차량 내 화상표시용장치 기술가이드라인 필요성	김인석
<b>간추린 소식</b>	
1.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및 제도 설명회 개최	
2. 교통세법 2015년 말까지 존속	

59호 2012. 09

<b>칼럼</b>   도로투자 평가체계의 전환 필요	이승호
<b>해외정책동향</b>	
1. 프랑스 교통관련 법정체계 현황	안정화
2. 해외 사례로 본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	강승모
3. 미국의 전략적 도로안전계획 수립절차	권영준
4. 유럽 주요 도시의 승용차 의존도 지수	연복모
<b>이슈</b>   도로의 세계화에 대비한 우리의 자세	하만복
<b>간추린 소식</b>	
1. WEF 2012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60호 2012. 10

<b>칼럼</b>   민자고속도로의 성과와 나아갈 길	윤하중
<b>해외정책동향</b>	
1. 미국의 새로운 자동차 연비 기준	이찬영
2. 영국의 지방교통계획을 위한 국고 보조금 지원체계	박경아
3. 미국 보행 및 자전거 교통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박준환
4. 일본의 지열 이용 도로용설 시스템	손유진
<b>이슈</b>   도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도시 생활도로 정비사업 활성화	이동민
<b>간추린 소식</b>	
1. 국토해양부, 2013년 예산안 편성	
2. 대한교통학회, 차세대고속도로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61호 2012. 11

<b>칼럼</b>   성숙시대 생활권 중심 인프라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일호
<b>해외정책동향</b>	
1. 중남미 도로사업을 위한 관문 미주개발은행①	이성관
2. 토지이용·교통활동·환경영향에 대한 연계 사례	양충현
3. 일본의 스마트폰 기반 자전거 세어링 시스템	임상연
<b>지역소식</b>   서울연구원 소개 및 서울시 교통정책 동향	고준호
<b>해외통신</b>	
노르웨이 -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Climate and Transport" 완료	
네덜란드 - 2013년부터 도입될 스마트하이웨이 공개	
호주 - 과속 대형차량 분석 결과 발표	
<b>간추린 소식</b>	
도로정책브리프 독자 설문조사 결과	

62호 2012. 12

<b>칼럼</b>   교통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 투자 필요	박용석
<b>해외정책동향</b>	
1. 중남미 도로사업을 위한 관문 미주개발은행②	이성관
2. 능동적 교통·수요관리와 도로용량편람	송동윤
3. 100년의 PIARC와 서울 세계도로대회	고준식
<b>지역소식</b>   강원발전연구원 소개 및 강원도 특성화 교통정책	노승만
<b>해외통신</b>	
미국 - 통근자들 간의 실시간 네트워킹이 통근에 긍정적 영향	
영국 - Accessibility Action Plan & Equality Action Plan 발표	
<b>간추린 소식</b>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 사업 본격화	

## 5. 건설경제(69권~72권)

### 69권 2012. 봄호

#### 건설경기 진단

2012년 상반기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윤하중, 김민철
2012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및 소비심리 동향	이수욱, 최윤경, 황관석
2012년 상반기 해외건설 전망	정창구

#### 특집: 건설사업 부문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제도 중장기 방향	김재영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부문 투자 방안	이상호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박홍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외건설 진출 확대 방안	김중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부문의 과제	이홍일

#### 지상중계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1차)	배유진
-----------------------------	-----

#### 외국의 건설정보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친환경 도시 건설 - 독일 뮌헨과 중국 동탄 -	김광석, 안명의
---	----------

#### 주요 건설통계

### 71권 2012. 가을호

#### 건설경기 진단

최근의 건설경기 점검 및 동향 분석	윤하중, 김민철
2012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및 소비심리 동향	이수욱, 문지희, 황관석
최근 해외건설 동향 및 향후전망	정창구

#### 특집: 저성장시대의 건설 산업 정책 과제

건설산업의 부실업체 스크리닝 필요성과 개선 방안	차상헌
건설생산체계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	권혁진
해외건설의 수익성 확보 방안	김태엽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구현경

#### 논단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바람	김재영
--------------------	-----

#### 지상중계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3차)	석재성
-----------------------------	-----

#### 외국의 건설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주요 해외사례	고용석
------------------------	-----

#### 주요 건설통계

### 70권 2012. 여름호

#### 건설경기 진단

2012년 2/4분기 건설경기 동향 및 향후 전망	윤하중, 김민철
2012년 2/4분기 부동산시장 및 소비심리 동향	이수욱, 문지희, 황관석
해외건설시장 현황과 하반기 전망	정창구

#### 특집: 건설산업의 주요 과제

건설수주물량 확대와 건설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	안광섭
공생발전을 위해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김정환
기능인력의 역할과 현황 진단 및 개선 과제	심규범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공급체계 모색	김갑진

#### 지상중계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2차)	박대근
-----------------------------	-----

#### 외국의 건설정보

중국과 브라질의 고속철도 건설 현황	허경희
---------------------	-----

#### 주요 건설통계

### 72권 2012. 겨울호

#### 건설경기 진단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2013년 전망과 대응	윤하중, 김민철
2013년 해외건설 전망	정창구

#### 특집: 박근혜 정부에 건설 분야의 바람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정책 과제	환창환
건설경제 민주화를 통한 참여주체간 공생발전 도모	김중진
설비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김경희

#### 논단

건설 여건 변화와 경영상태 변화 분석	김명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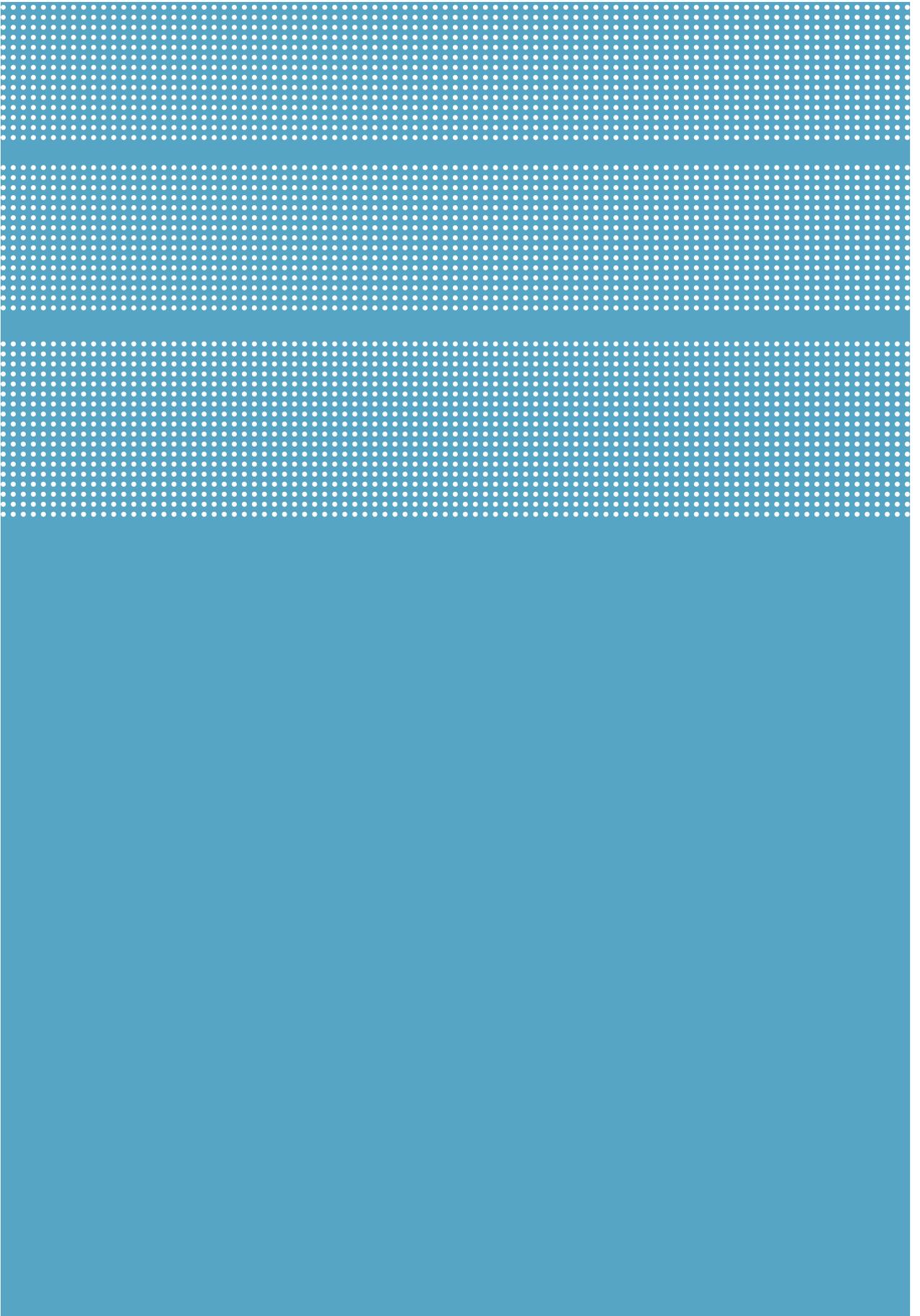
#### 지상중계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4차)	박대근
-----------------------------	-----

#### 외국의 건설정보

일본의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주거 및 주거방식의 추진대책	배유진
----------------------------------	-----

#### 주요 건설통계



Chapter

# VI

## 부서소개

---

1. 부서별 업무소개	164
2. 부서별 인원현황	167

---

## 1. 부서별 업무소개

### 국토계획 연구본부

국토계획연구본부는 국토계획 및 정책연구,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연구, 미래국토연구, 국토계획평가 등 국토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장단기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첫째, 국토의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국토 신성장거점 등 국책사업 추진 지원, 도시권 육성, 낙후지역 발전 등 국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셋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발전방안과 동북아의 상생발전을 연구하고, 넷째, 바람직한 국토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미래 국토 발전전망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며, 다섯째,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정착과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토계획연구본부는 우리 국토와 관련한 창의적, 실용적, 미래지향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미래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 지역연구본부

지역연구본부는 각종 지역계획 수립 및 수도권정책, 지역정책, 산업입지정책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지역의 자립적 특화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정책을 발굴하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및 입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수행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계량분석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역연구본부는 창의적·실천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 지역정책 관련 정부부처, 지역발전위원회, 권역별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도시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과 제도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 가져야 할 모습으로서 일상, 편리한 생활도시, 매력적인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한다. 실천단계에서는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정책방안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설계,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에 관한 법제도 발전방안도 제시한다.

도시연구본부는 연구원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국토연구센터,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국토환경· 수자원 연구본부

국토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토환경, 수자원, 문화·역사, 관광, 건강장수도시 구축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의 환경계획을 선도하기 위하여 산림, 녹지, 하천, 해안 등의 환경과 생태계를 중시하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자원관리, 방재국토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문화국토의 실현과 건강한 도시생활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건강장수도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국토연구센터,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 등 3개 센터와 융복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주택토지 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국가적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택, 토지 및 건설경제와 관련된 시장분석,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부동산 시장분석 및 전망, 부동산 정책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등 부동산 시장연구, 둘째, 주택종합계획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거복지정책연구, 셋째,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 토지수급 및 관리 등 토지정책연구, 넷째, SOC·건설경기 동향, SOC 투자 및 정책평가, 건설산업 및 제도 등 건설경제연구다.

### 국토인프라 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교통인프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국도로망·철도망 계획, 광역종합교통정책, 국가물류정책 및 계획,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녹색교통정책 개발 등 국가 및 권역, 도시 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중점 연구분야로 국가 및 권역 발전 지원을 위한 주요 교통정책 개발, 연계교통 기반 중장기 교통투자계획 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도로·철도 간 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물류교통 계획 및 녹색물류정책,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국토정보 연구본부

국토정보연구본부는 국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활용·분석 등을 위한 정책·계획·기술·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선진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되는 국토정보 기술 및 지식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국토(공간)정보정책에 적응력 높은 국토정보지식 생산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정보연구본부는 국토정보 기술 및 지식 생태계의 허브가 되고자 한다. 중점 연구 분야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정책 및 계획, 공간정보시장 분석, 공간정보기술 개발전략,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U-City, 공간정보기술의 글로벌화 전략 등이며, 이 외에도 관련 국제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세계경제의 동반발전과 개도국 등 저소득 국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12월 설립되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33년간 축적한 국토개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발컨설팅은 개발도상국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도시개발, 주택건설, 인프라개발 등 국토개발 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가교역할을 위해 해외개발·협력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련 정기간 행몰을 발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기획경영본부

기획경영본부에서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및 직원의 역량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의 식 고취, 연구본부에 대한 융복합 정책 연구 및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연구원의 세종시 청사이전, 사업수행 전반의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기획경영본부의 연구지원센터에서는 연구원의 예산편성, 국제협력 및 대외 기관과의 학술교류 업무, 보다 나은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관리센터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업무와 운용자금 관리, 청사시설 관리, 출판물 기획·편집 및 홍보, 문헌관리 및 연구 관련 사무와 행사지원을 포함한 연구원 행정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 2. 부서별 인원현황

### 부원장

박재길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공학 박사 | 도시계획, 광역계획

### 국토계획연구본부

김동주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Pennsylvania 지역경제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이용우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Bonn 지리학 박사 | 국토계획, 국토계획평가, 미래국토

이상준 | 선임연구위원 |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공학 박사 | 동북아, 통일한반도

서태성 | 선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공학 석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이원섭 | 선임연구위원 | Michigan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김천규 | 연구위원 | 中國人民大學 경제학(자원 및 환경경제) 박사 | 동북아, 통일한반도, 중국지역연구

김창현 | 연구위원 | 국립경상대학교 경제학 박사 | 농어촌정주, 수자원(방재), 하천

문정호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계획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이순자 | 연구위원 | Colorado State University 정치학(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박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국토관광·문화

이성수 | 책임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임상연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Urban Engineering, Ph.D 과정 중 | 지역·광역계획, 지역개발제도

장은교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조경학 석사 | 국토계획, 지역·광역계획, 도시설계

민성희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계획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분석

남기찬 | 책임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지역경제분석, 지역·광역계획, 도시경제

박정호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 국토계획평가, 미래국토, 지역경제분석

이건민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동북아, 통일한반도

### 지역연구본부

이동우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sukuba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지역정책, 수도권정책

권영섭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국토계획, 지역경제개발정책, 산업입지 및 클러스터

김광익 | 연구위원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 박사 | 도시정책, 지역정책

류승한 | 연구위원 | 동국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 산업입지, 경제지리

차미숙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 지역정책, 지역계획

장철순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산업입지, 지역계획

안흥기 | 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 도시경제학, 공공투자정책

변필성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Arizona 지리학 박사(도시계획 부전공) | 지역발전정책, 낙후지역 발전, 지역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강호제 | 연구위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GIS 공간분석  
 박경현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 도시지리, 지역정책  
 김진범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Tsukuba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도시·지역계획  
 이미영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지역교통물류  
 서연미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기업조직 및 입지, 지역산업정책, 도시의 서비스 경제화  
 하수정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지역경제, 지역계획  
 윤영모 | 책임연구원 |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 수도권정책, 지역계획  
 이윤석 | 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학 석사 | 산업입지, 낙후지역 개발, 접근성 계획

## 도시연구본부

민범식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도시계획 및 설계  
 유재윤 | 선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경제학 박사 | 도시재생, 경제기반활력  
 손경환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 도시개발, 커뮤니티재생, 경제기반활력  
 박은관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 도시개발, 도시제도  
 이왕건 | 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김상조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 도시정책, 도시제도  
 조판기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 도시정책, 인구저성장, 생활인프라/도시복지  
 박세훈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도시계획) 박사 | 도시정책, 인구저성장, 도시문화(다문화)  
 김성수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공학 석사 | 도시계획 및 설계, 건강도시, 도시범죄/안전  
 왕광익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 | 도시정책, 기후변화, 해외도시개발  
 김은란 | 책임연구원 | Cornell University 지역과학 박사 | 경제기반활력, 스마트성장  
 정윤희 | 책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석사 | 도시정책, 도시제도, 생활인프라/도시복지  
 이범현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도시설계학 박사 |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디자인/경관  
 김중은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Tokyo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 도시정책, 도시제도  
 박정은 | 책임연구원 |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도시디자인/경관  
 김재철 | 책임연구원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도시설계학 박사 |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디자인/경관  
 김동근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공학(도시설계) 박사 |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 도시범죄/안전  
 서민호 | 책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학 박사과정 수료 | 도시계획 및 설계, 토지-교통융합계획, 생활인프라  
 이진희 | 책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도시계획) 석사 | 도시정책, 스마트성장, 커뮤니티재생  
 이승욱 | 책임연구원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학사 | 도시재생, 커뮤니티재생  
 정소양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 도시문화, 도시  
 재생, 커뮤니티재생  
 박근현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조경학 석사 | 도시재생, 도시공원, 생활인프라/도시복지

## 국토환경 · 수자원연구본부

김종원 | 선임연구위원 |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자원경제학 박사 | 수자원정책, 계량경제분석  
 채미옥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공학 박사 | 토지정책, 역사문화도시조성  
 최영국 | 선임연구위원 | Agricultural University of Norway 조경학 박사 | 자연환경관리, 경관계획  
 김선희 |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공학 박사 | 환경계획, 갈등관리  
 김태환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지리학 박사 | 건강장수도시, 지역계획  
 양진홍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국토계획, 건강문화클러스터조성  
 박태선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 댐, 하천, 수자원정책  
 심우배 | 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공학 박사 | 수자원, 도시방재  
 이문원 | 책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 연안이용 및 관리, 지역자원 활용  
 김은정 | 책임연구위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도시계획과 건강증진, 액티브리빙  
 한우석 | 책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Utah 수자원 공학 박사 | 홍수방재, 수자원  
 박종순 | 책임연구위원 | The University of Cambridge 환경지리학 박사 | 국토환경, 산림, 연안지역관리  
 구형수 | 연구위원 | 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도시계획, 공간분석

## 주택토지연구본부

김근용 | 선임연구위원 | KAIST 경영공학 박사 | 주택정책, 주택금융 및 세제, 부동산시장 분석  
 이수옥 | 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문학 석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윤하중 | 연구위원 | 가천대학교 공학 박사 |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배순석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Washington 도시계획학(정책분석) 박사 | 주택정책, 도시재생, 택지개발  
 진정수 | 선임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 주택정책, 토지정책  
 정희남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정치학 박사 | 토지정책, 부동산금융, 부동산정책  
 지대식 |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부동산시장 · 관리, 도시 행 · 재정  
 김혜승 | 연구위원 | 경희대학교 이학(주거정책)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최혁재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행정학(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 | 토지이용 및 개발, 농촌지역개발  
 천현숙 | 연구위원 |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김성일 | 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건설산업정책, 건설보증 · 금융  
 이승복 | 연구위원 | 단국대학교 경영학(자원환경관리) 박사 | 민간투자, 건설산업, 교통정책  
 강미나 | 연구위원 |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주택정책, 주거복지  
 최 수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 토지정책, 부동산금융, 주택정책  
 이형찬 | 책임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주택정책, 토지(택지)정책  
 김민철 | 책임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 건설산업, 주택정책  
 김승중 | 책임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 법, 토지정책  
 변세일 | 책임연구위원 | 경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 부동산시장, 지역경제  
 손학기 | 책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박사 | 산지, 토지이용

- 송하승 | 책임연구원 | Newcastle University upon Tyn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landscape, Ph.D 과정 중 | 토지이용, 토지정책
- 박천규 | 책임연구원 |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부동산금융
- 전성제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지리학 석사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 박미선 | 책임연구원 | Cleveland State University 도시정책학 박사 | 주택바우처, 주거복지, 주택정책
- 박 준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학 박사 | 토지정책, 부동산경제
- 배유진 | 연구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건설산업, 토지정책

### 국토인프라연구본부

- 조남건 |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 교통계획, 고속철도, 교통사업 사전 및 사후평가
- 김호정 | 연구위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도로계획, 교통계획
- 류재영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도시 및 교통계획학 박사 | 교통정책 및 계획, 지역계획
- 이춘용 | 선임연구위원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 도시교통계획, 지역계획,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 김흥석 | 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교통계획, 생활교통
- 정진규 | 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학 박사 | 교통 및 토지이용, 도시·광역교통정책, 계획이론
- 오성호 | 연구위원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교통공학 박사 | ITS, 교통계획
- 임영태 | 연구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 지역교통, 물류계획
- 이백진 | 연구위원 | Hiroshima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 | ITS, 교통계획
- 고용석 | 책임연구원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과정 수료 | 도로 및 교통계획, SOC 정책
- 김종학 | 책임연구원 | 한양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 교통서비스 가치 연구, 교통망 구축효과, 교통수요예측
- 김준기 | 책임연구원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 교통안전, 통행행태, ITS 등
- 김혜란 |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교통기술사 | 활동기반 통행행태분석, 인프라 투자 등
- 윤서연 | 책임연구원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지리학 박사(교통전공) | 교통수요 시뮬레이션, 행동모델, 시공간분석
- 박종일 | 연구원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 교통계획

### 국토정보연구본부

- 최병남 | 선임연구위원 | KAIST 경영정보공학 박사 | GIS, 공간정보정책, 국가공간정보인프라
- 정문섭 | 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 국토정보화, GIS정책
- 박종택 | 연구위원 |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 공간정보정책, 공간정보인프라
- 한선희 | 연구위원 | 동국대학교 전자계산학 학사 | 공간정보정책, 시스템사교
- 김미정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 토지관리 및 규제 정보화, 정보화전략계획, 국가공간정보인프라
- 임은선 | 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 박사 | GIS 및 공간정보분석, 지역연구
- 김대중 | 연구위원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지리학 박사 |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공간통계, 도시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 김 걸 | 연구위원 | Florida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스마트 정보화, 공간정보분석

조준만 | 책임연구원 | Texas A&M University 도시 및 지역학 박사 | 공간정보인프라 정책, 도시계획을 위한 GIS/IT 응용 전략

이영주 | 책임연구원 | KEIO University Media & Governance 박사 | 공간정보유통, 공간정보 분석, 해외사례연구

강혜경 | 책임연구원 | 부산대학교 지형공학 박사 | 공간정보정책, 개방형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플랫폼,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 기술경쟁력 분석

서기환 | 책임연구원 | Arizona State University, Ph.D 과정 중

이재용 | 책임연구원 | The Ohio State University 지리학 박사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정책, 시공간분석

성해정 | 연구원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 석사 | 환경계획 관련 공간분석, 공간정보의사결정체계, 스마트 정보화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사공호상 | 선임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 국토정보, 그린&스마트 시티, 통합 도시계획

이상건 | 선임연구원 | Virginia Tech 교통공학 박사 | 스마트시티 설계, 교통시스템 계획

조진철 | 연구위원 | Portland State University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글로벌개발협력, 동북아 지역연구, 도시 및 지역계획

박순업 | 책임전문원 |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 | 글로벌 네트워킹

## 기획경영본부

정일호 | 선임연구위원 | University of Leeds 교통계획학 박사 | SOC투자정책,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 분석

### 연구지원센터

전준호 1급관리원, 연구지원센터장 | 장인용 1급관리원, 기획예산팀장 | 이강식 2급관리원, 대외협력팀장 |

이성식 2급관리원 | 윤정근 3급관리원 | 박동신 3급관리원 | 송정현 전문원

### 행정관리센터

김경동 1급관리원, 행정관리센터장 | 김진배 2급관리원, 총무관리팀장 · 출판문헌팀장 | 임정천 2급관리원 |

김용대 2급관리원 | 정진우 3급관리원 | 김성태 3급관리원 | 김상규 전문원 | 양승국 전문원 | 한여정 전문원

### 연구기획조정팀

김명수 연구위원, 연구기획조정팀장 | 강민규 연구원 | 김형표 2급관리원

### 인재개발팀

오경근 1급관리원, 인재개발팀장 | 이호창 2급관리원

## 감사실

양용태 선임관리원, 감사실장

## 세종시이전추진단

윤여훈 선임관리원, 세종시이전추진단장 | 이판식 2급관리원, 세종시이전추진단 부단장

## 연차보고서 발간 전담반

반장	김경동	행정관리센터장
반원	임영태	연구위원
	박미선	책임연구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박순업	책임전문원
	구민상	연구원
	구형수	연구원
	박근현	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성혜정	연구원
	이건민	연구원
	이윤석	연구원
	김나라	사무원
	김지혜	사무원
	신선미	사무원
	이화윤	사무원
	최보경	사무원
간사	한여정	전문원

(직급별 가나다순)

## 2012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발행인	박재길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22호
인쇄일	2013. 7. 23
발행일	2013. 7. 26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431-712)
전 화	031-380-0114(대표)
팩 스	031-380-0470
ISBN	978-89-8182-999-9

[www.krihs.re.kr](http://www.krihs.re.kr)

©2013,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 없습니다.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우 431-712)  
전화 031-380-0114(대표) 팩스 031-380-0470  
[www.krihs.re.kr](http://www.krihs.re.kr)

